제10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10.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2021.8.4.(수)~8.5.(목) | 남북회담본부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목 차

개회식

· **개회사** **마르코 반더비츠**,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차관
· **인사말** **최영준**, 통일부 차관
· **축 사** **조현옥**,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축 사**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관 대사

SESSION 1.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동서독 주민의식 변화

사회 **마르코 반더비츠**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차관

SESSION 1-1.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남북 통신선 복원 평가 ····· 007

SESSION 1-2. **뤼디거 폴**, 할레경제연구소 소장
독일 통일과정에서 경제상황 및 사회적 구조의 변화 ····· 019

SESSION 1-3. **유타 귄터**, 브레멘대 국민경제학과 교수
사회주의 유산의 양면성, 동독의 기술 발전과 1990년 이후 역할 ····· 029

SESSION 2.
독일 통일 30주년 평가와 한반도 시사점

사회 **최영준** 통일부 차관

SESSION 2-1. **요하힘 라그니츠**, IFO 경제연구소 드레스덴 지부 부소장
동서독 지역 주민의 독일 통일에 대한 인식 ····· 049

SESSION 2-2.
독일 통일 30주년 평가 및 한반도 시사점
(정치·사회)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 057
(경제통합)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69

INDEXIERUNG

Eröffnung

· Eröffnung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Marco Wanderwitz
· Begrüßung Vizeminister Young-Jun Choi
· Grußworte S.E. Dr. Hyeon-Ok Cho, Botschafterin der Republik Korea
· Grußworte S.E. Michael Reiffenstuel, Botschaft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ESSION 1. Moderation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Marco Wanderwitz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Wandel der Wahrnehmung der Einheit in Ost- und Westdeutschland

SESSION 1-1. Jung-Chul Lee, Prof. für Politikwissenschaft und Internationale Beziehungen an 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ewertung der Änderungen nordkoreanischer Auslandsstrategien und der Wiederherstellung der innerkoreanischen Kommunikationslinie ····· 089

SESSION 1-2. Rüdiger Pohl, Direktor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Veränderungen der wirtschaftlichen Situation und der sozialen Struktur im Zuge der Deutschen Einheit ····· 101

SESSION 1-3. Jutta Günther, Professorin für Volkswirtschaftslehre an der Universität Bremen
Das ambivalente Erbe des Sozialismus – technischer Fortschritt in der DDR und dessen Rolle nach 1990 – Ergebnisse aus dem Forschungsverbund Mod-Block-DDR ····· 111

SESSION 2. Moderation Vizeminister Young-Jun Choi
30 Jahre Deutsche Einheit und Lektionen für Korea

SESSION 2-1. Joachim Ragnitz, Stellvertretender Leiter der ifo Niederlassung Dresden
Zur Wahrnehmung der Deutschen Einheit in der Bevölkerung Ost- und Westdeutschlands heute ····· 131

SESSION 2-2.
Wahrnehmung der deutschen Einheit in Korea sowie Lektionen für Korea

(Politik·Gesellschaft) ····· 139
Hak-Sung Kim, Prof. für Frieden und Sicherheit an der Chungnam Natinal University

(Wirtschaftliche Integration) ····· 151
Hyung-Gon Jeong, Forscher 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SSION 1.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동서독 주민의식 변화

사회 **마르코 반더비츠**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차관

SESSION 1-1.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남북 통신선 복원 평가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SESSION 1-2.

독일 통일과정에서 경제상황 및 사회적 구조의 변화

뤼디거 폴, 할레경제연구소 소장

SESSION 1-3.

사회주의 유산의 양면성, 동독의 기술 발전과 1990년 이후 역할

유타 귄터, 브레멘대 국민경제학과 교수

SESSION 1.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동서독 주민의식 변화

SESSION 1-1.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남북 통신선 복원 평가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남북 통신선 복원 평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1. 8차 당대회 총괄정책: 선군주의의 후퇴와 제재 하의 장기전

○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선군'과 관련된 일체의 표현을 삭제하고 군부에 대한 당의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는 조치를 실행

- 2015년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서 발표하고 2016년 당 규약에 새롭게 포함했던 총노선 〈 자주, 선군, 사회주의 〉 규정을 8차 당대회 총노선에서 삭제

- 선군정치를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대체하고 '선군혁명령도' 용어도 삭제

- 조직지도부에서 군정지도부를 분리하여 총정치국과 별개의 통제 체제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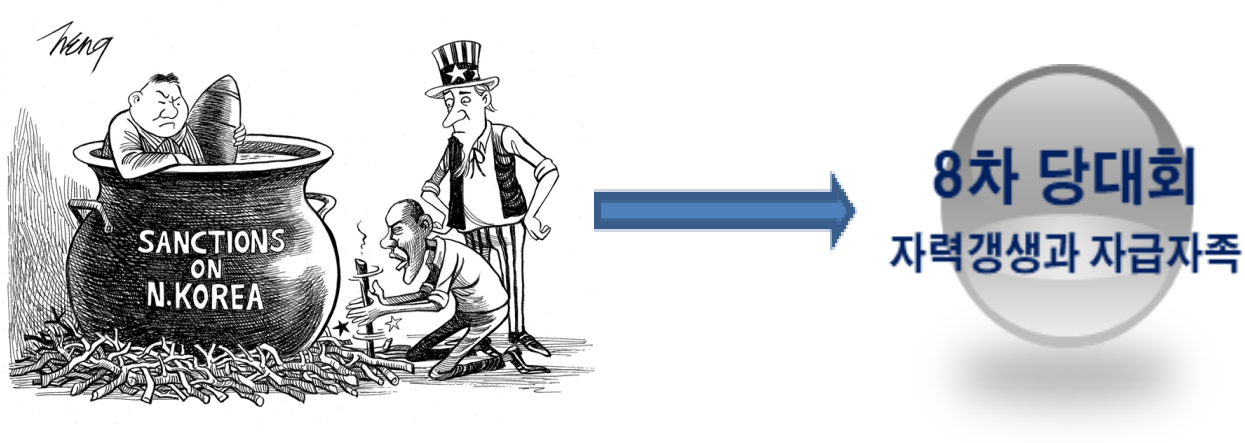
* 당 대회 주석단 및 일반 참가자 숫자에서도 군인을 대폭 축소(719 → 408)

- 최근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리병철을 소환하여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한 듯

○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통제를 강화하고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하여 제재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강조

- 7차 대회에서 사용하였던 '자력자강'이라는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표현을 사용하여 유엔제재와 코로나 봉쇄의 장기전에 대응하는 태도를 강조

* 강성대국, 강성국가라는 표현을 삭제



자료: 워싱턴포스트

2. 8차 당대회와 핵 및 전략무기 정책

○ 지난 헌법 개정 시 포함한 핵보유국 표현을 당 규약에 포함하는가 하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었으나 포함하지 않고 7차 당대회 당시 포함했던 핵-경제 병진노선을 삭제

- 현 규약 서문에는 핵무력 관련 내용이 없으며, 공화국 무력이라고 표현하고 자립적 국방공업 강화를 강조

*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라고 규정

- 북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 규약 서문에서 핵무력 혹은 핵억제력 그리고 핵보유국 등의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핵보유국 규정은 규약에서 배제

* 헌법 서문('16.6 이후)은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 명시

* 심지어 이번 규약에는 2016년에 명기된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표현이 삭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략무기나 핵잠수함 등을 언급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변수나 지뢰밭이 남아 있음을 암시

- 이례적으로 자세히 전략 무기 개발 목표를 열거

*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전술화, 1만 5,000㎞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강화,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수중 및 지상 고체 연료 ICBM 추진, 핵잠수함 설계의 최종 심사 단계이자 군사정찰위성의 설계 완성 상태라는 점을 강조 하는 등

- 전략무기 능력이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며 본토교전 능력을 강조(열병식 기조와도 연결)

*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본토교전(mainland exchange)을 암시
* 전술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했다는 해석은 협소한 것이고 사실상 한-미-일 3국 모두를 염두에 둔 핵 교전 위협 태세를 밝힌 것임

○ 이상의 두가지 대립적 조치는 대화와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북한식 담론으로 드러나고 있음

- 소위 '대결' 준비와 관련해서 위 전략 무기 개발 전략을 강조 하고 있고 이것은 북한식 실존적 억지(Existential Deterrence) 전략에 해당

- 한편 '대화' 준비와 관련해서 북한은 〈안보-안보〉 프레임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동시에 제재 해제를 위해 외교력을 총력 집중하고 있음

* 외무성은 2009년 1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평화협정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표현하여, 〈안보-경제〉 교환 프레임 대신에 소위 〈안보 – 안보〉 교환 프레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양자를 혼용

- 6월 중순에 열린 8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도 북한은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기존 대결만 강조하던 분위기와 달리 대화를 언급

* 1월 당대회 당시에도 국방력이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평화를 위한 협상을 강조

3. 당 규약 변경과 장기적 대남 정책: 국가연합식 접근법의 등장

○ 김정은 총비서는 총화 보고 당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였다고 하여 당규약을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하였음을 공개하여 중장기적 전략에 유연성을 감안

○ 북한은 이번 당 대회 규약 개정을 통해 대남 정책의 새로운 단계로 '민족동번영' 단계를 설정하고 사실상 민주기지론적 남조선혁명론을 규약에서 완전히 폐기

- (고려) 연방제 이전 단계로 민족공영 단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이 공통성이 있다”는 합의 사항을 규약으로 명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임

*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로 민족공영 단계를 공식화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연합 단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임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16.5.9.)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21.1.9.)
서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두 개 한국론을 수용하고 북중 동맹 강화론으로 갔다는 해석이 있으나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고 규약의 다른 표현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북한이 국가연합식 통일(낮은 단계 연방제)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결과적으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식 통일 방안을 먼 단계의 문제로 미루고 현 단계에서는 국가연합식 통일(민족공동번영 단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시작한 인상

- 고려민주연방제 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민족공동번영 단계에서는 이같은 전제 조건을 강하게 앞세우지 않게 될 것이고 소위 CEPA 등과 같이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온 접근법이 가능하게 될 것임

○ 기타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일본 군국주의 재침 등의 낡은 표현을 삭제

구 규약 통일 관련 부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 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

신 규약 관련 부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4. 남북 통신선 복원과 단기 전망

○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북 간 친서 교환이 시작되어 통신선 복원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됨

- 남북간 친서 교환 사실은 중앙일보(7.2) 등을 통해 보도되다가 남북 합의에 의해 공개

* 북측 조선중앙통신이 대외적으로 공개 발표하고 KBS는 10여 차례 교환이라고 수치를 확인

○ 7월 친서교환 담화

- 북남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되여 있는 북남통신련락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걸음을 내짚을데 대하여 합의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 7.27)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가 공개(WP 4.30)된 이후 북측은 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가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해제〉 간의 교환이라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북한의 관심은 증대

- 5.2 권정근 담화는 비판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정책 질의에 가까웠고 이에 대한 설리반 보좌관의 ABC 기자 회견은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채워짐

* 설리반은 "위협을 강조한 것은 적대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응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

- 6월 16일 8기 3차 중앙위워회에서도 북한은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기존과 달리 대화를 언급하여 관심을 표명

○ 북미회담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미측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에 아직도 고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7월 7일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 관련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백신 등의 지원을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짐

- 북한은 〈광물질 수출 허용, 정제유 및 일상 생필품 수입 허용〉에 대한 l미국의 “구두 언급”을 북미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정원이 공개

- 그러나 미국 측은 제재 해제에 대한 구두 약속을 전제로 회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밝히고 있음

*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알 것이다. (이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다.”(중앙일보 7.7) 라고 하여 선 대화를 강조
* “셔먼 부장관은 방한 기간 중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할 의향이 없음을 수차례 시사했다.....〈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미국의 진정성 있는 제스처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7.26)

○ 따라서 북한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계와 불신을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6월말 성 김 특사 방한 당시 김여정, 리선권 등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간접 확인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담화를 연이어 발표

* 이번 웬디 셔먼 방한 과정에서도 미국이 “조건 없는 실무회담”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북한은 재확인

○ 6월 북미회담 거부 담화

- 7월 22일 김여정 부부장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화를 거부

- 이어 23일 리선권 외무상은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옹호

- 8차 당 대회 당시 북한은 대미 관계에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하면서 강대강, 선대선(power to power, good will to good will)의 원칙을 강조

*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실체와 본심은 변함없다고 강조
* 당 대회 보고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는 입장 반복
* 지난 해 7월 11일 김여정은 당시를 “적대시 정책 철회와 대화 재개”가 교환되는 단계라고 규정하였고 이 점이 유효하다면 대화재개를 목표로 하는 적대시정책 철회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근본적 요구는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북한은 선 남북관계 진전, 후 북미관계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남북간 통신선 합의에 응해 나온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회담에 대해서는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구두약속 여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미측의 변화가 없는 한 당장 북미 실무 회담 성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남북간 관계 진전을 먼저 시그널로 삼는 형식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로서 북한은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남북관계에는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

- 한편 이번 통신선 연결이 웬디 셔먼 부장관 방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 미국 측이 조기에 환영 성명을 낸 점 등은 한미간 조율이 잘 진행 중임을 암시

○ 북한이 이번에 대화 입장을 밝힌 이상 8월 군사연습은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7.11 북중 상호우호조약 70주년 행사 이후, 한미군사연습 수위가 결정된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었음

- 따라서 북한이 남북 합의 하에 이같은 대화 재개 입장을 표명한 것은 8월군사연습에 대한 개괄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군사연습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이같은 상황하에서 한미군사연습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 북한은 작년 8월, 올해 3월 수준의 한미군사연습 수위라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되어 왔음

- 미국 측이 통신선 복원 사업을 환영한 것은 이같은 8월 상황에 대해 대체로 양해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실제 남북 통신선 복원 관련 보도가 미국에서 먼저 보도되어 한국 측이 웬디 셔먼 방한 시기 미국에 이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북미관계 재개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남북관계가 먼저 개선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의 전개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단 통신선 복원은 위기관리 시그널이라는 최소주의 해석에서 출발하면서도, 이것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희망적 해석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다행스러운 것은 이같은 과정에 대해서 한미간에 일정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임

○ '3년 전 봄날'과 같은 새 출발점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언급한 김여정 담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남북 대화 복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음

- 향후 남북 화상 회담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one-point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존재

* 코로나-19 극복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고 백신 제공 등과 같은 보건 협력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조금 길게 보면 베이징 올림픽 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창출하는 데 남북미중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는가가 변수가 될 것임

MEMO.

MEMO.

SESSION 1.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동서독 주민의식 변화

SESSION 1-2.
독일 통일과정에서 경제상황 및 사회적 구조의 변화

뤼디거 폴, 할레경제연구소 소장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경제 상황 및 사회 구조의 변화

뤼디거 폴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영상회의
’21.8.4.~8.5.

1990년
출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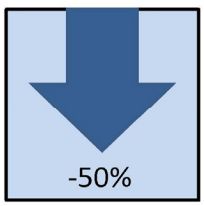
1990년 동독 경제의 내부적 붕괴를 체험

- 1989년 동독 시민들이 **동서독 국경 개방**을 밀어붙임.
- 이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에 당면하게 됨:
  40년간 유지된 동독의 사회주의가 통일 독일에서는 **시장경제**로 전환.

초기에 시스템 전환을 **어렵게** 만든 요소: 1990년 **동독 경제**는 **황폐**한 상태였음.
1989년 국경 개방 이후 이러한 사실이 두드러짐.
그동안 국경 때문에 경쟁에서 고립됐었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음.
동독이 맞게 된 결과는 심각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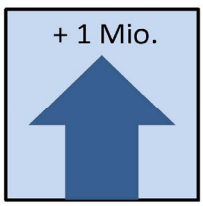
1990년 동독 **경제가 내부적으로 붕괴**됨:

산업생산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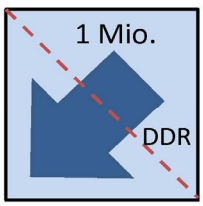
IV89 ~ III90

실업률 급증



’90.6. ~ ’91.7.

동독 시민들의 집단 이주



IV89 ~ III90

동부의 안정화 (‘동부 재건’)가 **통일 독일**의 중요한 과제가 됨.

Pohl – DKKzV- Aug 2021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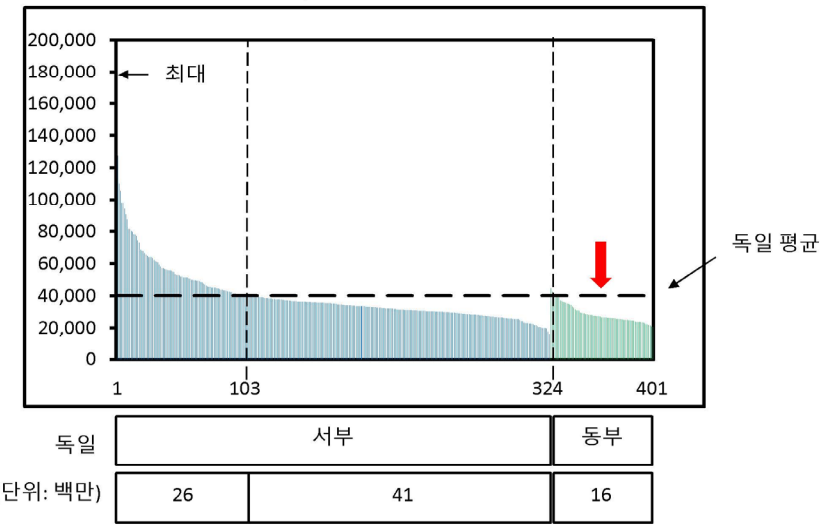
긍정적 측면: 1990년 이후 독일동부 경제가 곧바로 성장세

3

- 그 추진력은 정부의 **막대한 경제 지원**
- **독일동부 경제력**은 오늘날 여전히 평균 **이하**
- 그러나 독일서부 **대다수** 지역의 경제력에 **도달**함.

독일(2018):
201개 지역의 경제력

1인당 국내총생산(유로)
동/서부 내림차순



Regionen: Landkreise und kreisfreie Städte – Ost mit Berlin
Wirtschaftskraft: Bruttoinlandsprodukt je Einwohner

Pohl – DKKzV- Aug 2021

사회적 부담

부정적 측면: 15년간(2005년까지) 동일동부의 실업률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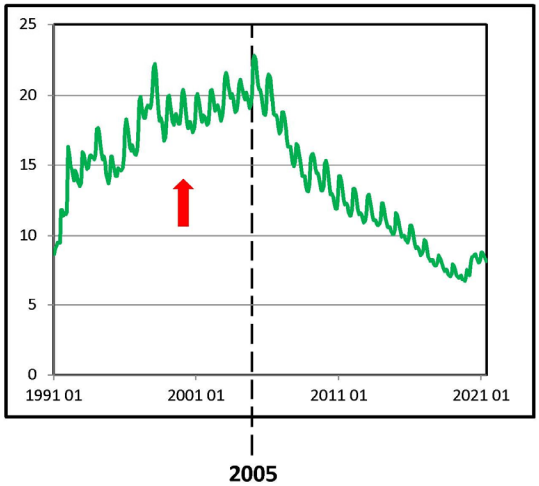
4

- 동부 주민들의 **충격** ("동독에선 실업이 없었다")!
- 실업의 **원인**은 **시간적인 불일치**였음: 구 동독 기업들은 빠르게 문을 닫았고 – 새로운 기업들은 서서히 생겨났음.
-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상이**함.

동부 주민들은 많은 동독 기업들의 폐쇄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말함.
반대 주장: 많은 동독 기업들이 **비효율적**이었고, 폐쇄는 **불가피했음**.

동부의 실업률

(%)



Pohl – DKKzV- Aug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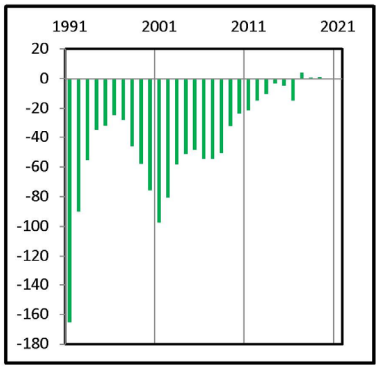
인구 감소

5

부정적 측면: 20년간(2012년까지) 동부 인구 감소

- **원인**: 서부로의 **이주**(일자리와 좀 더 높은 임금을 위해) 및 높은 **출생률 급감**(동부의 출생률은 1990년의 절반 수준).
- 2012년부터 **추세 반전**: 이주에 따른 인구 감소 현상이 없어지고, 외국인들이 유입됨.
- 동부 주민수에 대한 **전망**은 **유동적**임. **출생자 감소**가 지속됨(서부보다 심각) – 동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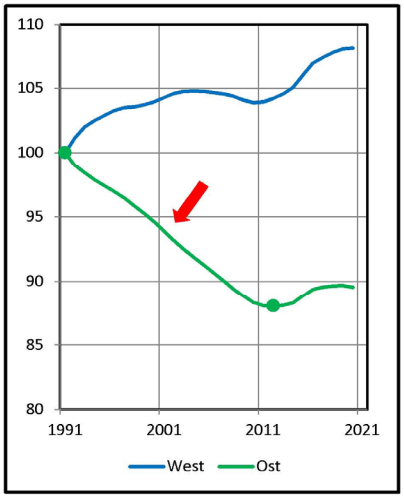
동부에서 서부로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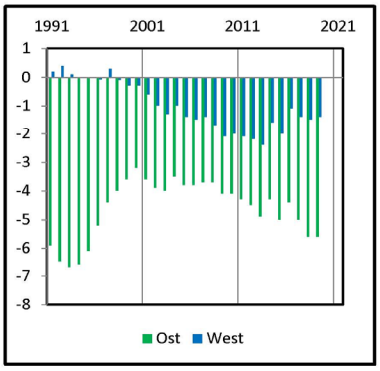
인구 천 명당
서부에서 동부로의 이주민 수 –
동부에서 서부로의 이주민 수
(베를린 제외)

동/서부 주민수

1991=100



동/서부 출생률



연도별 인구 천 명당
출생자수 – 사망자수

Pohl – DKKzV- Aug 2021

지역적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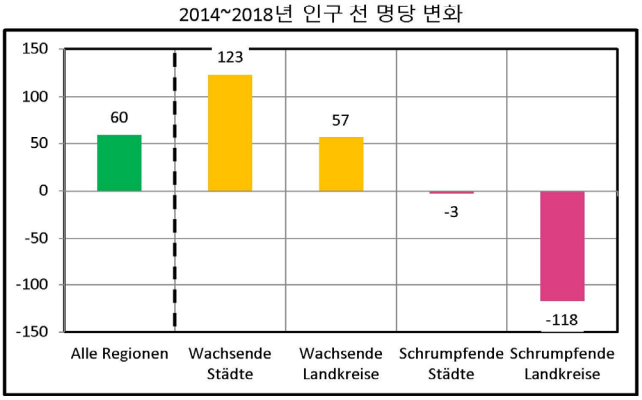
6

동부의 지역별 인구변화 차이: 도시는 긍정적 – 시골은 부정적

- **도시의 활력**은 주민수 **증가**에서 나타남.
- 많은 시골지역의 **부정적 전망**은 주민수 감소에서 나타남.
  단점: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고, 인프라 제공은 더 비싸짐.
- 동부 인구의 **절반**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골지역에 살고 있음.

동부 도시*와 지방의 주민수

*베를린 제외
2014~2018년 인구 천 명당 변화



Pohl – DKKzV- Aug 2021

사회적 변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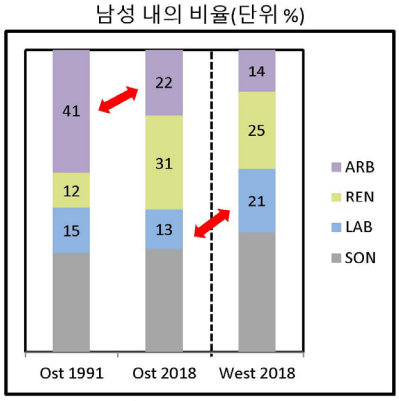
1990년 이후의 사회 및 경제의 격변이 동부의 사회적 상황에 변화를 가져옴

• 노동자: 동부의 노동자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듦.
동독은 이념적으로 '노동자 계급(및 국가당)의 주도'를 중요하게 여겼음. 노동자들의 '작업반(Brigade)'은 기업의 중요한 기관이었음. 동독의 '노동자 사회'는 해체됐음. 자신이 노동 계급에 속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음.

선별된 일부 사회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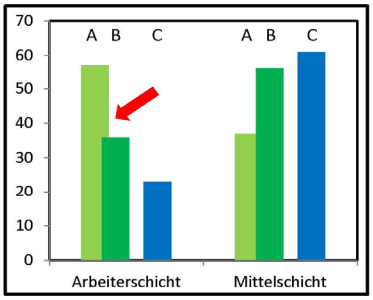
남성

남성 내의 비율(단위 %)



ARB 노동자
LAB 임원 및 공무원
REN 연금생활자
SON 기타

본인이 느끼는 소속 사회 계층 (%)



A 동부 1991
B 동부 2018
C 서부 2018

• **임원/공무원:** 서부보다 해당 비율이 더 적음
재계와 국가의 지도부은 종종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음.
동부 주민들은 독일의 지도층 내 동독의 비율이 너무 적다고 불평함.
고려사항: 많은 서부 주민들도 지도층에 달성하지 못함.

* 위 사회적 상황에는 주민을 좀 더 커다란 주민집단으로 분류하였음.
주요 분류 기준으로는 직업군, 성별, 연령 및 지역이 있음.
여기에서는 18개 사회적 상황이 4개 집단으로 묶여 있음.

Pohl – DKKzV- Aug 2021

연금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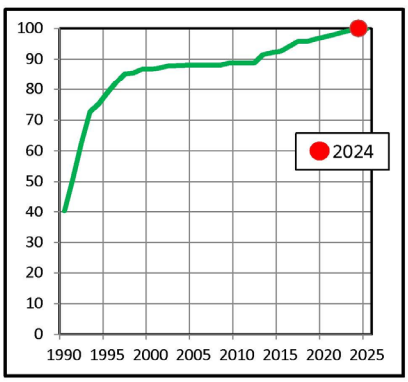
8

동부의 연금 수준을 서부의 수준으로 조정: 까다로운 주제

• 1990년 동부의 예상 임금을 서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연금 **조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됨(***통일조약*** *제30조*).
• 연금의 **완전한** 조정은 **2024년**에 완료될 것임.
• 오랜 기간의 **낙후**된 연금 수준은 동부에서 종종 **차별**로 받아 들여짐.
고려사항: 연금 조정 수준이 임금 조정보다 **더 높음**.
• 동부의 **연금보험**은 적자 상태임. 이 **적자** 는 서부 연금보험의 흑자를 통해 보전되고 있음.
지역간 **금융 연계** 독일 연금보험의 중요한 요소임.

동부의 연금 수준

서부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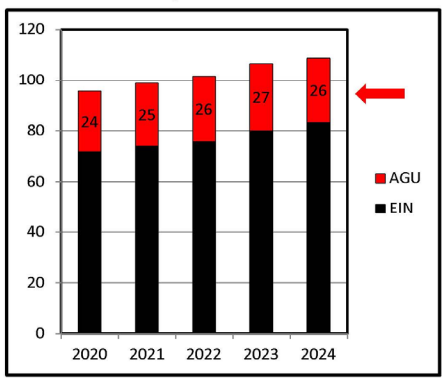
2020년 조정 현황
서부 = 100

연금	**97.2**
임금	**86.0**

동부의 연금보험

수입 및 지출

예상치, 단위: 십억 유로



EIN=수입,
AGU=과잉지출(적자)

Pohl – DKKzV- Aug 2021

빈곤
사회 부조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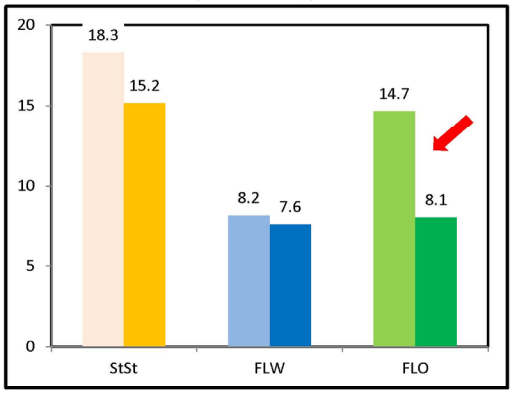
빈곤 – 요지원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더 이상 동부에 특별한 초점을 두지 않음

- 독일에서는 7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최소한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지원 의존도는 동/서부가 **거의 비슷함**.
-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고령자** 수는 동부가 **더 적음**.

과거: 동독에선 여성의 경제활동이 서독보다 더 활발했고 이에 따라 오늘날 이들이 더 높은 연금수급자격을 가짐.
현재: 동부의 임대료가 서부보다 더 낮아, 재정 지원도 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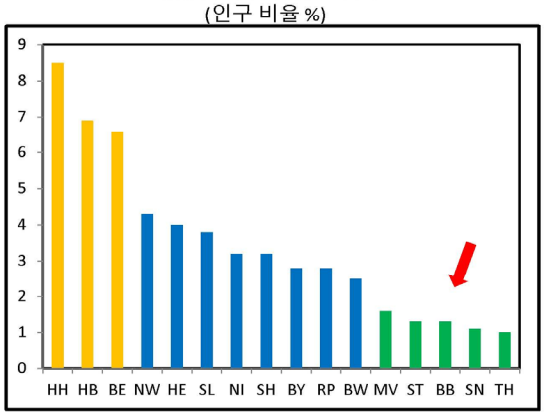
재정지원 수혜자

2006년 (막대그래프 좌) 및 2019년 (막대그래프 우)
(인구 비율 %)



재정지원 고령 수혜자

2019년 독일 연방주 전체
(인구 비율 %)



StSt 도시 단위 주(州): BE, HB, HH
FLW 서부 평야주: NW, HE, SL, NI, SH, BY, RP, BW
FLO 동부 평야주: MV, ST, BB, SN, TH

Pohl – DKKzV- Aug 2021

ex.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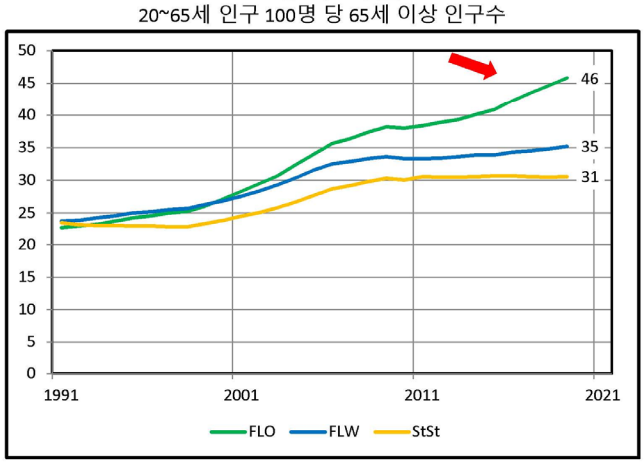
10

오늘날 독일의 당면 과제

- **동부의 안정화**는 **성공**했음. 지금은 '동부 재건'의 **중요성**이 조금 낮아짐.
  이제는 동부**와** 서부가 똑같이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음:
  기후변화, 에너지 공급, 디지털화, 이주, 고령화.
- 예: **고령화**: 독일(동부와 서부) 주민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 그 **긍정적** 측면: 기대 수명의 상승(동/서부 모두).
- 그 **부정적** 측면: '**고령자 비율**'도 함께 증가(특히 동부).
  경제활동인구는 점차 더 많은 고령자들을 부양해야 함: 연금, 돌봄, 건강 서비스.
- 추가적인 정년* 연장과 같은 **해결책**은 정책적으로 **차단됨**.

고령자 비율

20~65세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수



은퇴 연령이
현 65세 9개월에서
2031년이면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짐.

Pohl – DKKzV- Aug 2021

1990 - 2020

통일 30년 - 결과

- 현재 동부의 **생활환경**은 서부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많은 동부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음**.

Umfrage von 2019 - Ostdeutsche Antworten auf die Frage: *War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seit der Wiedervereinigung eher ein Erfolg oder ein Misserfolg?*		
	Erfolg	36 %
	Misserfolg	26 %
	Unentschieden	38 %

- 대중은 동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이를 없애는 것이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음.

뤼디거 폴 교수
전: 할레-비텐베르크 마르틴 루터 대학교
전: 할레 경제연구소
전: 거시경제 발전 평가 전문가 위원회
Email: ruedipohl@hotmail.de
작성일: 2021.7.5.

MEMO.

MEMO.

SESSION 1.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동서독 주민의식 변화

SESSION 1-3.

사회주의 유산의 양면성, 동독의 기술 발전과 1990년 이후 역할

유타 권터, 브레멘대 국민경제학과 교수

Universität Bremen

사회주의 유산의 양면성 – 동독의 기술 발전과 1990년 이후의 역할

동독 경제·과학 현대화 봉쇄(Mod-Block-DDR) 연구협회의 결과 예시

제10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유타 귄터 교수 발표문
2021.8.4.

1990년대 이후의 핵심 질문 …

독일 동부와 서부 사이의 지속적인 **경제 불균형**(예: 생산성 격차)의 이유는 무엇인가?

Universität Bremen

2

최신 연구현황: 구조적 약점!

- 소수의 **기업 본사**
- 주로 **작게 나뉘어져 있는 기업 구조**
- **가치사슬**에서 기업의 불리한 위치, 위탁 생산
  (예: Ludwig 2015a, 2015b, 2020; Ragnitz 2019)
- 취약한 산업 **연구 기반**
  (예: Eickelpasch 2015, Günther 2014, Günther et al. 2010)

3

미결 문제

사회주의와 변혁은 신연방주들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장기적 영향**을 주고 있는가?

4

연방정부의 지원 경쟁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12.06.2018 | **PRESSEMITTEILUNG: 048/2018**

Wissenslücken über die DDR schließen

Mod-Block DDR (2018~2022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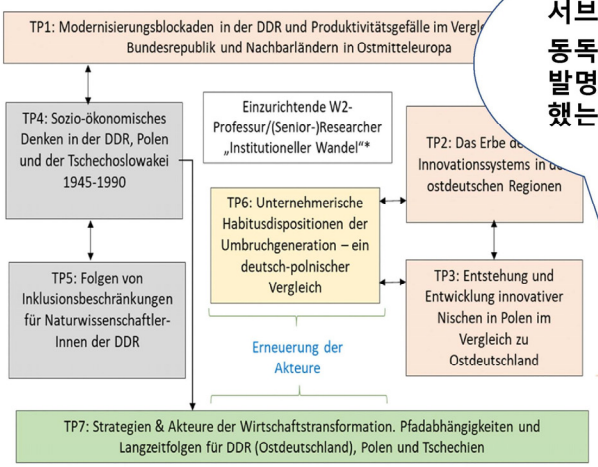
연구협회: 동독 경제·과학 현대화 봉쇄(Mod-Block-DDR)

Universität Bremen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EUROPA UNIVERSITÄT VIADRINA

berlin



서브프로젝트 1의 질문:
동독의 혁신 시스템에서 발명가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6

동독의 발명현황 분석

➡ 동/서독의 특허 자료 평가


Mod-Block DDR Universität Bremen

Universalien der Innovation – Erfindertum und technischer Fortschritt in der DDR und dessen Rolle nach 1990

Empirische Befunde auf der Basis von Patentdaten – ein Diskussionsbeitr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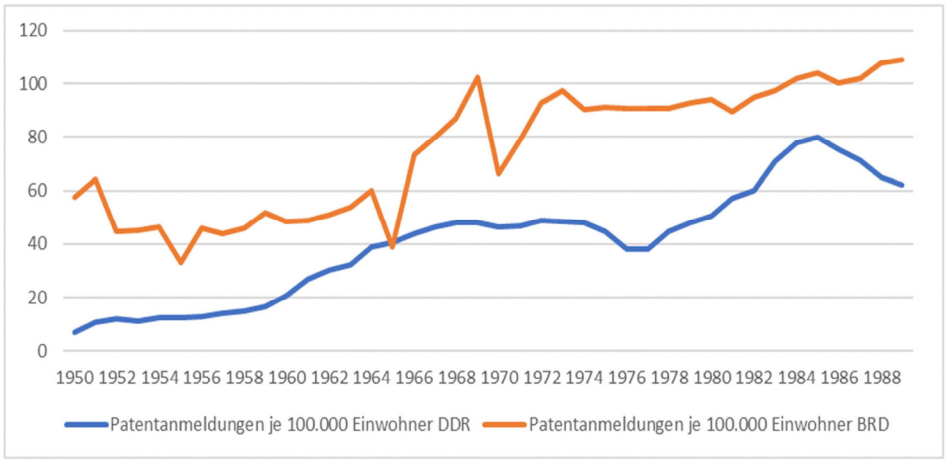
Jutta Günther, Ann Hipp und Udo Ludwig

연구자료 다운로드: https://media.suub.uni-bremen.de/bitstream/elib/4535/3/Universalien%20der%20Innovation_final.pdf

7

특허 출원

주민 10만 명당



출처: 독일특허상표청(DEPATIS), 자체 평가.

평균:

특허 출원 연간 75건

특허 출원 연간 41건

8

특허 출원의 변화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동독)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서독)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50년대~1980년대 기간의 증가율		

출처: 독일특허상표청(DEPATIS), 자체 평가.

9

특허 출원의 변화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동독)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서독)
1950년대	12,4	
1960년대	37,5	
1970년대	45,2	
1980년대	67,0	
1950년대~1980년대 기간의 증가율	54,6	

출처: 독일특허상표청(DEPATIS), 자체 평가.

10

특허 출원의 변화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동독)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서독)
1950년대	12,4	47,9
1960년대	37,5	
1970년대	45,2	
1980년대	67,0	
1950년대~1980년대 기간의 증가율	54,6	

출처: 독일특허상표청(DEPATIS), 자체 평가.

11

특허 출원의 변화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동독)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서독)
1950년대	12,4	47,9
1960년대	37,5	64,3
1970년대	45,2	88,1
1980년대	67,0	100,1
1950년대~1980년대 기간의 증가율	54,6	52,2

출처: 독일특허상표청(DEPATIS), 자체 평가.

12

특허 출원의 변화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동독)	주민 10만 명당 연간 평균 특허 출원 건수 (서독)
1950년대	12,4	47,9
1960년대	37,5	64,3
1970년대	45,2	88,1
1980년대	67,0	100,1
1950년대~1980년대 기간의 증가율	54,6	52,2

출처: 독일특허상표청(DEPATIS), 자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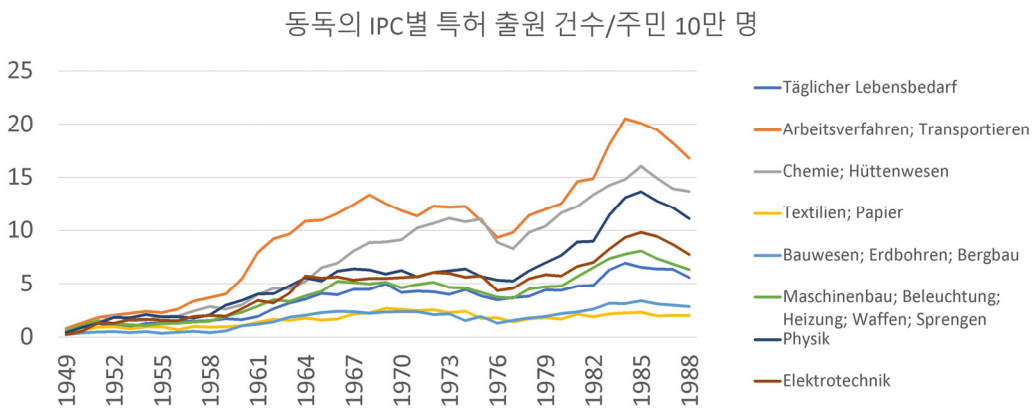
13

국제특허분류(IPC)

- 생활필수품
- 처리조작; 운수
- 화학; 야금
- 섬유; 지류
- 건설; 굴착; 광업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 물리학
- 전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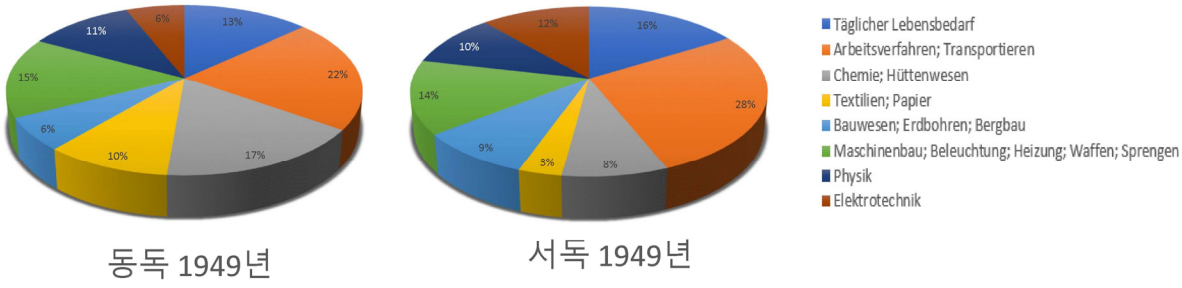
동독의 IPC별 특허 출원



출처: 독일특허상표청(DEPATIS), 자체 평가.

15

1949년 동독과 서독의 IPC별 특허 출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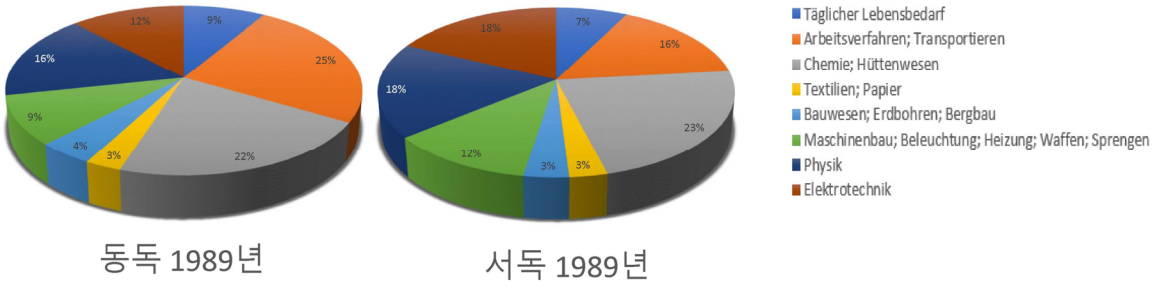
동독 1949년

서독 1949년

출처: 독일특허상표청(DEPATIS), 자체 평가.

16

1989년 동독과 서독의 IPC별 특허 출원 비율(%)



동독 1989년 서독 1989년

출처: 독일특허상표청(DEPATIS), 자체 평가.

17

동독의 발명 현황

- 동독의 **발명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1949~89년) .
- 동독과 서독의 **특허 역학**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지만 양적으로는 동독을 따라잡지 못함.
- 일반적으로 **특허 집약적인 분야**인 '화학; 야금' 및 '물리학'은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음.
- 동독과 서독의 **기술적 주안점**(IPC)은 동독의 처음과 마지막 시기에 모두 매우 흡사했음.

18

1990년 이후의 역할: 발명가

경험적 발견: 기술 분야에서의 유사한 우선순위 설정!

- **발명가의 역량 및 기술 지식**은 현대화 과정에서 특히 서독과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음.

19

감사합니다!

20

Universität Bremen

Prof. Dr. Jutta Günther

Universität Bremen
Fachbereich Wirtschaftswissenschaft
Max-von-Laue-Str. 1
28359 Bremen

office-guenther@uni-bremen.de
Tel.: +49 (0)421 218-66630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uni-bremen.de/mod-block-ddr
행사 소개
https://ost-nach-west.uni-bremen.de/

매체에 소개된 프로젝트 작업(일부 발췌):
https://www.mdr.de/nachrichten/panorama/patente-ddr-erfindungen-100.html

https://www.mdr.de/nachrichten/wirtschaft/inland/uni-bremen-untersucht-ddr-patente-100.html

https://www.butenunbinnen.de/videos/sendungen/butenunbinnen-1100.html?fbclid=IwAR3xiEO_F8LwMX9N_qmHbZsrhnTmjstCe1_B4pKoy6Bx22cpFeQPYxOSCWA

21

인용 문헌

Eickelpasch, A. (2015): Forschung, Entwicklung und Innovation in Ostdeutschland: Rückstand strukturell bedingt. In: DIW Wochenbericht, Vol. 82, 41, 907-918.

Günther, J.; Nulsch, N.; Urban-Thielicke, D.; Wilde, K. (2010): 20 Jahre nach dem Mauerfall: Transformation und Erneuerung des ostdeutschen Innovationssystems, In: Expertenkommission Forschung und Innovation (Hrsg.), Studien zum deutschen Innovationssystem, Nr. 16-2010, Berlin.

Günther, J. (2014): Structural change and the emergence of an innovation system – the case of East Germany. Jena: Universität Jena (Habilitationsschrift).

Günther, J.; Hipp, A.; Ludwig, U. (2020): Universalien der Innovation – Erfindertum und technischer Fortschritt in der DDR und dessen Rolle nach 1990. Forschungsbericht, DOI: 10.26092/elib/332.

Lehmann, R.; Ragnitz, J. (2019): Wie realistisch ist die Angleichung des Lebensstandards der ostdeutschen Länder an den Westen? In: ifo Dresden berichtet, 2019, 26, Nr. 6, 08-11.

Ludwig, U. (2015a): Der unvollendete Aufholprozess der ostdeutschen Wirtschaft. In: Berliner Debatte Initial 26, 2, 34-49.

Ludwig, U. (2015b): Das Dilemma der nachholenden Modernisierung der ostdeutschen Wirtschaft. In: Deutschland-Archiv online Dezember 2015.

Ludwig, U. (2020): Mikrofundierte makroökonomische Resultate der ostdeutschen Transformationswirtschaft, in: Ostdeutschland - Eine Bilanz, Halle: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S. 16-3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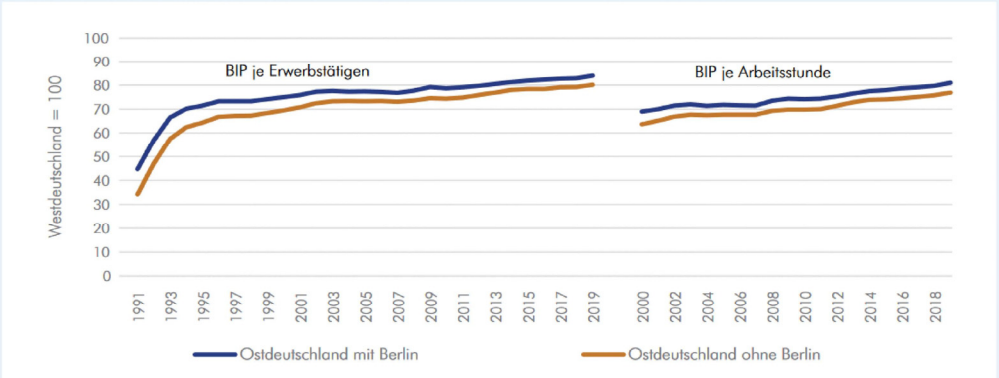
부록

23

독일 동부의 생산성

Bruttoinlandsprodukt (BIP) in jeweiligen Preisen je Erwerbstätigen bzw. je Arbeitsstunde

in jeweiligen Preisen, Westdeutschland = 100



Quellen: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öpfung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9. Reihe 1, Länderergebnisse Band 1. Berechnungsstand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August 2019/Februar 2020 [Revision 2019/ESVG 2010/WZ 2008],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Württemberg, Stuttgart, März 2020, in: https://www.statistik-bw.de/VGRdL/tbls/RV2019/R1B1.zip, Zugriff am 01.04.2020; Berechnungen des IWH.

24

출처: IWH, https://www.iwh-halle.de/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wirtschaft_im_wandel/wiwa_2020-02_Trend.pdf

특허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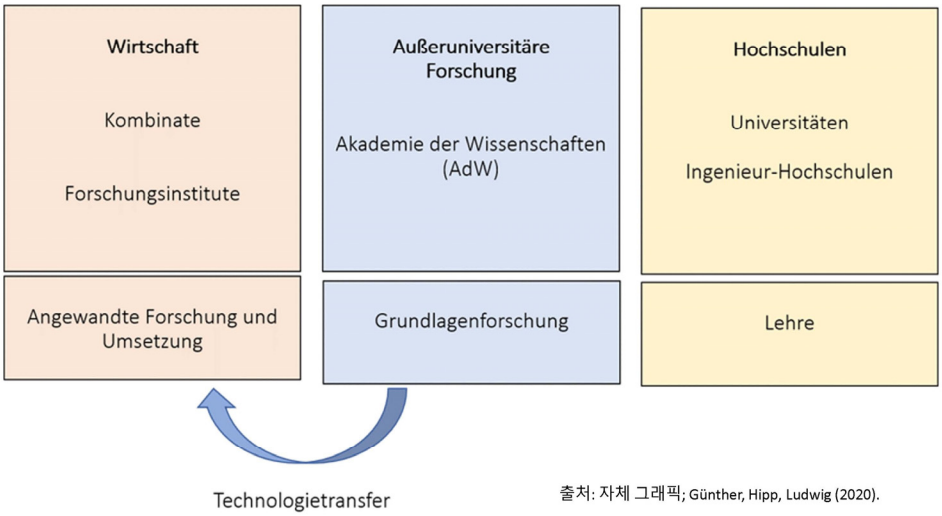
- 동독은 1951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
- 특허 취득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 →
  동독과 서독의 특허 비교 가능!
- 1990년 동독 특허는 독일특허상표청의 자산이 됨

→ 예나대학교와 함께 DPMA(DEPATIS)를 기반으로 한 동독의 독점적인 특허 데이터뱅크

Universität Bremen

25

동독의 연구 및 혁신 시스템



출처: 자체 그래픽; Günther, Hipp, Ludwig (2020).

26

1990년 이후의 역할: 특허

- 동독의 일부 첨단기술 발명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음향기술
가이타인 지역
1960년대



현재:
Musikelectronic Geithain GmbH
스튜디오 스피커
사용처: ARD, ZDF, DLF, BBC, 일본 등

냉장기술
구. VEB Kühlautomat Berlin
요하니스탈

현재: Grasso GmbH/GEA



Universität Bremen

27

MEMO.

MEMO.

SESSION 2.

독일 통일 30주년 평가와 한반도 시사점

사회 **최영준** 통일부 차관

SESSION 2-1.

동서독 지역 주민의 독일 통일에 대한 인식

요하힘 라그니츠, IFO 경제연구소 드레스덴 지부 부소장

SESSION 2-2.

독일 통일 30주년 평가 및 한반도 시사점

(정치 • 사회)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경제통합)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SSION 2.
독일 통일 30주년 평가와 한반도 시사점

SESSION 2-1.
동서독 지역 주민의 독일 통일에 대한 인식

요하힘 라그니츠,
IFO 경제연구소 드레스덴 지부 부소장



요아힘 라그니츠 교수(Prof. Dr. Joachim Ragnitz) (ifo Dresden)

현재 동, 서독인들의 독일 통일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제10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 발표

1. 1990년 독일 통일은 DDR사람의 사고 및 행동방식이 서독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 아래 이뤄졌다. 즉, 최소한 앞으로 내민 손 뒤에 독일 분단 기간동안 (1949-1990) 지속되어 온 국가 프로파간다의 영향으로 특정 관점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추측되기는 했지만 - 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경제 발전에 의해 신속하게 사라질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었다. 이런 시각은 거의 모든 동독 지역에서 서독 라디오 및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다는 점, 두 국가 체제였던 전체 기간 동안에도 (비록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동, 서독 간의 접촉이 가능했다는 점, 마지막에 서독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바라는 DDR 국민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 이는 예를 들어 과거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선거 설문조사와 반대로, CDU 주도의 '독일 연합(Allianz für Deutschland)' 형태로 출범한 1990년 3월 최고인민회의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다. 서독 시스템의 후광(경제력 문제는 보다 덜 영향을 미쳤는데)이 그 근거로 작용했음을 평가하였으며, 1990년 이후 서독 정부 측에서 동독 주 주민을 위한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을 굳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적 통일(innere Einheit)'이 바랬던 것만큼 명백히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조는 일찍이, PDS가 SED를 계승한 정당으로서 전체 투표율 중 10-1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던 1990년 연초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가을 연방의회선거와 주의회선거에서 이미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주로 과거 SED 당원 및 시스템에 충성하는 다른 유권자 그룹의 투표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연방 정치를 관장하는 CDU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고, 각 주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1990년 초반에도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체제와 정부 성과에 대한 동독의 만족도는 서독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사회형식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동조는 동독 응답자의 약 75%에게서, 서독 응답자(약 40%)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LLBUS 1991). '동독의 재건(Aufbau Ost)'이 예상만큼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서독의 '식민화(Kolonialisierung)'라는 인상이 증가함에 따라 PDS는 동독에서 시행된 모든 주 선거와 1994년 연방 선거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정부 구성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모든 것이 경고 신호일 수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확실히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방정부는 서독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와 가치에 대한 더 강력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국가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인 대규모 국가 지원을 통해 경제 재건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3. 이 희망은 단초적으로만 실현되었고 동독과 서독의 입장차가 점점 더 영구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관념이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신 연방주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 더 회의적이고, 거리를 두며, 비판적인 기본 태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독일 통일 연간 보고서 2021, p. 40), '신 연방주 주민 1/3이 스스로를 사회적 변화의 패배자로 여기고 있다'고 (서독: 25%) 확언했다(독일 통일 연간 보고서 2021, p. 43). 이러한 맥락 아래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머리 속 장벽(Mauer in den Köpfen)'이 여러 차원에서 언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추측되곤 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동독 사람들이 자신을 '2등 시민(Bürger zweiter Klasse)'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ebd., p. 44). 이 진술은 인구의 1/3만이 공유하는 것이고, 그들 중 대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정적 변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정당 스펙트럼의 좌우 극단에 있는 포퓰리즘 정당들이 서독보다 동독에서 더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민주 정부 구성에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상당한 수의 동독인들이 DDR에서의 사회화 과정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테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처럼 보인다. 오히려 이는 항의성 투표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동독 내 광범위한 불만은 최근 주요 정치적 과제에서 - 난민 문제 2015, 코로나 위기 2020 - 정치인들의 행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력의 결핍에 대한 징후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4. 시간이 흐르면서 동, 서독의 입장 및 규범은 많은 측면에서 느리지만 대체로 지속적인 수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범위하게 유포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념은 이런 측면에서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에 의해 은폐된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의 다양한 '말풍선' 속에서 나타난 선택적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일 후 30년이 지나서도 두 지역 사이의 평균 인구 집단에서 일련의 중대한 입장차가 확고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ALLBUS 2018은(2020년 설문은 코로나 판데미 때문에 연기되어야 했다) 예를 들어 동독 지역은 사회 정치적 재분배에 대한 강조, 외국인 및 난민에 대해 일반적으로 높은 회의적 시각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질서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동조 수준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서쪽 지역보다 명백히 더 높다.

5. 이는 첫째, 통일 후 30년이 지난 후에도 동서독 사이에 여전히 큰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한 동독의 복지수준은 서독의 70%을 약간 상회하고, 임금과 가처분 소득은 약 85%에 해당한다. 실업률도 서독보다 약간 높다. 이는 주로 두 지역사이의 구조적 차이에서 (능률 높은 대기업의 부재, 농촌 지역의 우세 등) 기인한다. 이 점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서독 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 속에는 동, 서독 간의 지속적이고 공고화된 경제적 격차라는 이미지가 발생했다. 이 차이는 동독에서 특히 부정적인 개인의 변화 경험을 바탕으로 불의, 심지어 시스템적 불이익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시금 경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동독 응답자의 대다수(77%)는 통일이 서독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반면에 서독에서는 57%만이 이 의견에 동의함). 반대로 동독 인구의 33%는 여전히 통일이 동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서독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 인구의 극소수만이 1989년의 (정치적)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것이다(특히 이는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통일 자체가 의문시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독일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기능적 메커니즘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6. 동독과 서독 간 (정치적) 입장차를 야기하는 추가적인 이유로 주민들이 경험한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들 수 있다. 동독 인구의 압도적 다수는 적어도 청소년기를 DDR에서 보냈고, 이들은 국가의 구속력을 규정하는 '사회주의적 인성 교육(Erziehung zur sozialistischen Persönlichkeit)'의 영향에 노출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까지 유효한 기업가 정신과 자유 시장에 대한 비판적 거리,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치적 목표와 국가의 경제생활 개입에 대한 옹호는 공동체 일부에 존재하는 권위주의적 구조에 대한 경향일 뿐 아니라 이러한 교육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것이 다시금 가정과 학교를 통해 자식 세대로 이어졌음을 배제할 수 없다.

   ifo 연구소의 분석은 동, 서독 간 간과할 수 없는 일부 입장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된 인구집단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통일 후 선택적 이민과 낮은 출산율 때문에 동독에서는 서독에 비해 DDR 역사에 큰 영향을 받은 고령층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이 인구 집단의 입장이 측정된 평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들은 동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노출된 바 있는 집단이다. 반면에 통일 독일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낸 젊은 인구 집단의 경우, 조사된 모든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 영역, 정치적 견해, 경제적 상황, 가정 영역)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타 독일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함으로써, 낮은 외국인 비율과 1990년 초 '엘리트 손실 (Elitenverlust)'로 말미암아 동독에서는 거의 얻을 수 없었던 '다문화 경험(multikulturelle Erfahrungen)'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즉,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전환기(Wendejahr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비록 이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독일의 정치, 경제 시스템의 설계가 일반적으로 노년층에서 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머리 속 장벽(Mauer in den Köpfen)'이 허물어지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7. 독일의 경우 대체로 서독식 관점과 가치관이 '규범(Norm)'으로 간주되긴 했지만 (일단 통일로 인해 동독의 경제, 사회, 정치 체제가 서독 체제로 대체된 것에 비해 서독은 거의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독식 규범과 행동방식이 동독 모델에 적응하게 된 경우도 관찰된다. 이는 특히 예를 들어 여성 고용 또는 가사 분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적

영역에서의 공동 생활, 즉 '가정(familiale)' 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서독인들이 동독식 태도를 넘겨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70, 80년대 교육 확장의 결과일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정치적 트렌드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8. 위에서 언급한 조사내용을 통해 아무리 유리한 전제를 갖추고 있더라도 (독일 통일은 지속되는 모든 경제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관점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한 사회 경제적 질서의 즉각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 프로세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특히 학교나 가정에서 습득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에 적용된다. 이는 독일통일보다 한국통일에서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낯선' 체제 하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길 뿐 아니라, 북한이 DDR의 경우 보다 당과 국가에 의해 자유주의 지역으로부터 훨씬 강력하게 고립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한국 통일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조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데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는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으로 의심됨), 정치적 교육 문제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MEMO.

MEMO.

SESSION 2.
독일 통일 30주년 평가와 한반도 시사점

SESSION 2-2.

독일 통일 30주년 평가 및 한반도 시사점

(정치·사회)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독일통일 30주년 평가와 한반도 시사점: 정치·사회분야

김학성(충남대학교 교수)

1. 문제제기

한국정부와 사회에서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특히 냉전종식이후 독일의 분단관리 및 통일사례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심지어 대립적이기도 하다. 남남갈등 탓에 독일사례는 각 사회세력이 자신의 대북·통일정책 구상이 타당하다는 것을 단지 입증해보이려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통일의 원인도 단선적이 아닌 다선적 인과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내에서도 통일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도 상이한 견해들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독일사례를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는 일은 독일의 경험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만든다.

비록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차이가 적지 않으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독일사례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통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통일 30주년 평가와 시사점을 모색하기에 앞서서 독일경험에 접근하는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태도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사례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분단극복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한반도의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이전의 독일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서독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과 독일통일의 결과 사이의 연계성에 주목한다면, 통일독일의 통합과정은 현재 우리의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통일이후 발생할 문제(소위 통일후유증)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모색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있다. 물론 한반도 통일의 불투명한 미래 탓에 독일경험이 한반도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독일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창조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독일사례를 결과로서가 아니라 항상 과정으로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과 한반도의 상이한 환경 탓에 당연한 것이다. 만약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

이 그 결과에만 주목하여 독일의 경험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분단현실의 차이 탓에 성공을 확신하거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통일실현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대체로 거대담론과 원칙이 부각된다. 이 역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실천과 동반할 때 의미가 더욱 크다. 독일의 통합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들, 특히 평화통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실용성과 실천에 주목한다면,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2. 정치·사회 분야에서 독일통일 30년 평가

2019년 독일통일 29주년 기념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통일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진행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내적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동서독지역 사이의 경제력 및 사회경제적 조건 차이를 반영하는 통계 수치들에서는 물론이고 선거결과와 정치문화와 같은 정치·사회적 이슈들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독일 연방정부와 사회는 내적 통합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 지역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지역간 갈등 잠재력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치 및 사회적인 차이는 앞으로도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정치적 차원의 내적 통합

통일이후 독일의 정치질서는 구서독의 그것과 크게 달라졌다. 비록 서독의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기본질서가 유지되고 동독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통일의 결과는 서독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독일은 통일이후 기본법(헌법)을 수정하여 변화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변화 또한 매우 컸다. 〈표 1〉에서 보듯이 구서독의 정당체계에 변화가 발생했으며, 특히 좌파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좌파정당은 구동독지역에서 지지도를 확대시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서독지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갔다. 게다가 2013년과 2017년 연방의회선거에서는 극우정당(AfD)이 괄목할 정도로 약진했다. 난민 및 이민자, 특히 이슬람권의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민족주의와 반이슬람주의와 같은 극우이념이 정치적인 힘을 확대한 결과이다.

〈표 1〉 통일 후 구동서독 지역별 연방의회 선거결과 (제2투표권, %)

	사민당	기민연	기사연	동맹90/녹색당	자민당	민사당/좌파당	극우정당*	기타	투표참여율
구서독 지역과 서베를린									
1990년	35.7	35.5	8.8	4.8	10.6	0.3	2.6	1.7	78.6
1994년	37.5	33.2	8.9	7.9	7.7	1.0	2.0	1.9	80.5
1998년	42.3	28.7	8.4	7.3	7.0	1.2	2.8	2.4	82.8
2002년	38.3	29.8	11.0	9.4	7.6	1.1	0.9	1.9	80.6
2005년	35.1	28.4	9.1	8.8	10.2	4.9	1.7	1.8	78.5
2009년	24.1	26.7	7.9	11.5	15.4	8.3	1.6	4.5	72.2
구동독 지역과 동베를린									
1990년	24.3	41.8	-	6.2	12.9	11.1	1.6	2.1	74.5
1994년	31.5	38.5	-	4.3	3.5	19.8	1.3	1.1	72.6
1998년	35.1	27.3	-	4.1	3.3	21.6	5.0	3.6	80.0
2002년	39.7	28.3	-	4.7	6.4	16.9	1.7	2.3	72.8
2005년	30.4	25.3	-	5.2	8.0	25.3	4.0	1.8	74.3
2009년	17.9	29.8	-	6.8	10.6	28.5	3.3	3.1	64.7

* 독일민족민주당(NPD) + 공화당(REP) + 독일국민연합(DVU)

〈표 2〉 독일연방의회선거 2013 & 2017 (제2투표권, %)

	기민연/기사연	사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	독일대안당(AfD)	기타
2017년	33	20.5	10.7	9.2	8.9	12.6	5.0
2013년	41.5	25.7	4.8	8.6	8.4	4.7	6.3



좌파정당의 약진과 2013년 이후의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세력 증대는 독일전역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지만, 구동서독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내적 통합의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2017년 독일대안당(AfD)은 구동독지역에서 구서독지역 대비 평균 2배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상과 같은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구동서독지역 주민들의 인식차이도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다. 조사연구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반적인 지지도는 증대하지만,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구서독지역 주민들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구서독에서는 80~90%, 구동독에서는 30~80%의 지지) 이는 단지 사회주의 문화의 유산 탓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젊은 세대에도 그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통일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적응의 어려움과 실망 탓에 통일독일의 새로운 체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주민들이 좌파와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체제전환과정에서 구동독주민들이 느꼈던 정치사회적 소외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예컨대 통일초기 구동독지역의 행정 및 사법제도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자들은 대부분 서독출신에 의해 점령되었다. 더욱이 구동독의 과거청산 작업, 무엇보다 비밀경찰(Stasi) 문서의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구동독지역 주민들 사이의 상호 불신과 반목이 초래되는 결과를 낳았다. 상호불신은 실업의 문제, 가치관 혼란과 더불어 사회심리적 불안을 증가시켰고, 결국 범죄의 증가, 외국인에 적대감을 표명하는 극우세력의 준동 등 사회병리현상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독일연방정부와 사회에서는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한 예로써 통일이후 동독출신의 거물 정치인들의 연방정부 및 의회 진출이 점차 증가했다. 메르켈 총리를 비롯하여 연방대통령 가욱(J. W. Gauck)과 연방의회 의장을 역임한 티어제(W. Thierse) 등 많은 구동독출신의 정치가가 연방차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구동독주민들의 불만은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었다. 또한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좌파정당의 약진으로 구동독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나아가 동독의 과거청산과 관련, 비밀경찰문서는 아직도 통일독일에서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지만 비밀경찰 문서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의미에서 구동독지역주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는 법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과거청산보다 구동독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 복권, 보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21세기에 들어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확산과 극단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를 들어 연방내무성은 2000년에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와 관용의 동맹”(BfDT)를 설립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이를 확산시켜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구동서독지역 사이에 좌파 및 극우정당의 지지도 차이는 더 이상 확대되

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 지역 사이에 나타나는 정치·사회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통일의 산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좌파와 극우정당의 약진은 유럽통합의 심화 및 확대를 비롯하여 이민정책과 경제정책 등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제는 단지 동서독 통합의 문제라기보다 전반적 정치·사회적 통합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사회문화적 차원의 내적 통합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은 단지 제도 자체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가치, 규범, 정향, 심리, 감정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통합의 문제로 귀결된다. 독일통일과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제도적인 통합에 우선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애초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실제로 동서독과 같이 상이한 체제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회에서 문화적 통합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통일독일의 연방정부는 동서독의 정치문화 내지 사회문화 통합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동서독 주민들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이에 따라 자매결연의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각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각 분야의 서독전문가들이 동독측 파트너 기관에 파견되어 체제전환을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독 지역주민들의 소통 면을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방정부나 서독의 지도층은 구동독주민들이 점차 동화되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환호가 끝나자 구동독지역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치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별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정치 및 사회경제적 차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에 버거운 데, 여기에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일단 연방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구동서독지역의 차이를 드러내는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통합관련 통계 및 의식조사는 사적 설문기관을 중심으로 발표되어왔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에 관한 구동독주민들의 자체적 조사연구가 활성화되며 자신들의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과거 서독시절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정착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정치교육을 구동독지역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체제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연방정치교육 센터의 주 임무는 구동독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식제공 뿐만 아니라 구동서독지역 주민들의 상호이해를 위한 도서발간과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와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동독의 역사, 독일분단, 동독공산당의 불법 등에 관한 역사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분단을 경험하지 못했던 청년

층을 대상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문화의 통합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기는 어려웠다. 사회문화적 통합의 어려움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으로는 민사당의 부활과 좌파당, 그리고 극우세력의 확장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 중반부터 과거 동독시절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을 선택적으로 회상하는 소위 '오스탈기'(Ostalgie) 현상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오스탈기는 단지 일상적 삶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나타난다. 2008년 어떤 조사에 따르면,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약 57.%가 동독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주민이 15%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구서독지역 주민들의 11% 내외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약 67%가 거부하는 결과와 비교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동독주민들에게 구동독의 가치는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의 문제이다. 즉 서독은 모두 잘했고, 동독은 모두 나빴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동독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구동독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회주의 이념은 단순히 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기보다 일상적 삶에서 과거 그들에게 익숙했던 정서적이고 연대적인 유대감, 즉 '우리라는 감정'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될 여지가 많다.

요컨대 구동독주민들은 통일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구서독의 체제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비록 급작스러운 통일과 체제통합 속에서 구동독주민들이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에 커다란 혼란이 왔고, 구서독 체제문화를 수용하면서 혼성적(hybrid) 문화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1990년 중반 체제통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구동독의 유산을 이어 받은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동독인들이 새로운 자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동독적인 것에 대한 자각의 결과로서 차츰 구동독지역에 고유한 '부분문화'(Teilkultur)가 형성되었다. 이는 구서독의 사회문화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독일의 문화적 공론장에서'아방가르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서독의 지식인들은 애초 통합 과정에서 구동독사회가 동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커다란 오산이었다는 점을 깨닫고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 맥락에서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새롭게 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요컨대 구동독지역주민들은 오스탈기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지역적 집단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정체성이 독일이라는 국가정체성과 충돌하지 않고 공존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가 사회문화적 통합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정체성의 다층성 내지 다중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인정한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매우 늦게 민족국가를 탄생시킨 탓에 지방분권적이고 지방문화가 강한 독일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 부분문화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3. 시사점

지난 30여년간 통일독일의 내적 통합과정을 되돌아보고 여기서 한반도에 적합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이 유용하다. 첫째는 통일을 준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 특히 정치 및 사회문화 통합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통일의 그날이 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내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첫째 질문과 관련하여 독일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 통일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급작스러운 통일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정책과제는 결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는 중·장기적 목표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통일은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통일론에 붙잡혀 있기보다 현실적 통일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현실적인 통일정책이란 통일을 위한 조건창출에 큰 비중을 두는 정책을 의미한다. 통일조건의 창출과정은 비단 남북관계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국내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부문, 그리고 외교정책의 차원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세가지 점을 손꼽을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건전한 시민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건전한 시민문화는 다원적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다. 만약 남한내에서 갈등의 평화적 해소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통일이전에 겪을 남북한 공존의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통일이후에도 북한의 상이한 사회문화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 건전한 민족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통일이전 서독은 세계의 어느 국가들보다 갈등해소문화가 상대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었다. 전후 탈나찌화를 위해 시민정치교육이 최우선시 되었고, 그 덕분에 시민들의 비판정신도 매우 충일했다. 분단시기 서독의 포용적 문화는 동서독 공존에 분명히 기여했다. 그러나 통일이후 서독의 문화적 포용성은 상당부분 증발했다.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민족공동체적 정체성이 취약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반도통일의 당위성은 남북한이 단일민족이라는 사실기반 위에서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남한사회도 사회적 분화의 가속화로 특징지워지는 탈산업사회적 문화형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족공동체적 구심력이 점점 이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셋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한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사회문화적인 바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할 경우, 공동체내 결집력이 생성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독일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훨씬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

된다. 그러므로 남북교류·협력의 양적 증대에 최종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질적 증대를 향한 비전(vision)을 가지고 교류·협력의 확대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시사점은 한반도의 현실에서 당위론 내지 규범론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향한 노력마저 포기할 수는 없으며, 특히 남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실과 통일정책방향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자기반성은 그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질문, 즉 한반도 통일이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독일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우선 원인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인분석은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후 우리가 겪게될 국민통합의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독일과 유사한 원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독일사례는 한 가지 포괄적인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국민통합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되며 가치통합의 의미를 강하게 띠지만, 실제로 제도통합의 방식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제도통합의 방식이 사회문화적 문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결정변수라는 말은 아니다. 상이한 체제에 익숙한 두 사회가 인위적 제도통합을 시도할 때, 사회문화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분단의 직간접적인 유산은 제도에 의해 완전히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가치통합뿐만 아니라 제도통합과 연계하여 통합문제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독일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제도통합의 효율성과 가치통합의 증대는 상호 정비례적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의 제도통합은 서독의 제도를 동독지역에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정책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서독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동독지역에 정착시키는 데 맞추어졌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동독지역주민들의 정치사회적 역할은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동독주민들의 사회적 소외의식이 싹틀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서독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갈등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향후 남북한 제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통합의 맥락에서 통합의 효율성과 사회문화적 고려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통합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물론 양자 간의 조화점을 찾을 수 있으면 더없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그날이 다가오면, 이와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통합과정에서 이익갈등이 가치통합의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흔히 가치통합은 이념의 문제로 간주된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는 이익갈등이 가치를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특수상황이긴 하지만, 독일의 통합사례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동독지역주민들이 통일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배경에는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에 대한 동경이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 통일이후 실제로 동독지역주민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서독주민과 비교되는 상대적 빈곤감과 경제적 풍요에 수반하는 시장의 경쟁논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 걸쳐 동독주민들의 정치적·사회적 불만도 높았다. 이러한 점은 한반도에서도 향후 예상되는 이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산지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일의 그날이 오면,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만약 과거청산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북한주민들이 청산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포괄적 시사점은 향후 남북한 통합의 전망과 방식이 보다 뚜렷하게 모습을 갖추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사례는 통합 문제들의 종류, 범위, 그리고 인과적 발생양식을 예상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EMO.

SESSION 2.
독일 통일 30주년 평가와 한반도 시사점

SESSION 2-2.

독일 통일 30주년 평가 및 한반도 시사점

(경제통합)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urmounting Global Challenges, Creative Response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정 형 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8. 5.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발표 순서

1.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위기와 극복
2.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3. 동서독 경제의 수렴: 성과와 과제
4.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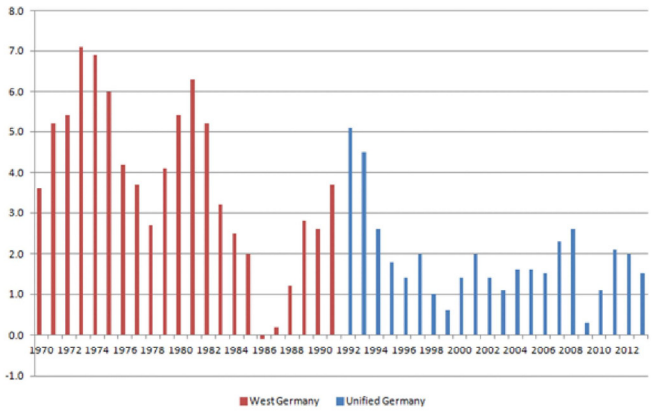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 요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 임금상승, 사회보장, 보조금 등에 의한 동독주민들의 소비 증대
- 동독으로의 투자 증대는 물가인상 요인



자료: Jeong, Hyung-gon and Gerhard Heimpold (2018),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p.41

1.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 요인

단기 이자율의 상승: 물가안정은 독일 중앙은행이 추구해야할 목표이자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

- 통일에 따른 막대한 자금 수요, 투자위험도 상승, 인플레이션,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단기 이자율이 급등
- 독일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올려 통화량 증가를 억제해야 했고 이를 통해 환율 상승 역시 막는 정책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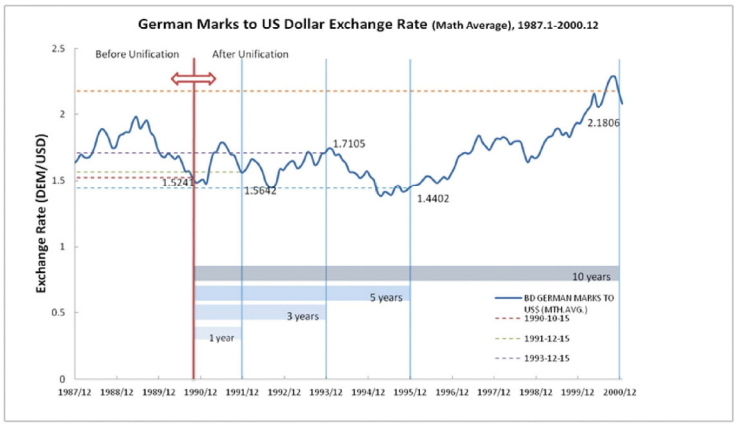
자료: https://data.oecd.org/interest/short-term-interest-rates.htm(검색일: 2020. 9 19).

1.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 요인

환율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 독일 마르크화의 미국달러 대비 환율은 통일 직전과 직후에 오히려 하락하여 안정세
- 독일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과 함께 통일 이전에 쌓아둔 독일의 외화자산에 기인, 서독은 통일 이전 세계 제1의 경상수지 흑자 국가



자료: Data Stream

1.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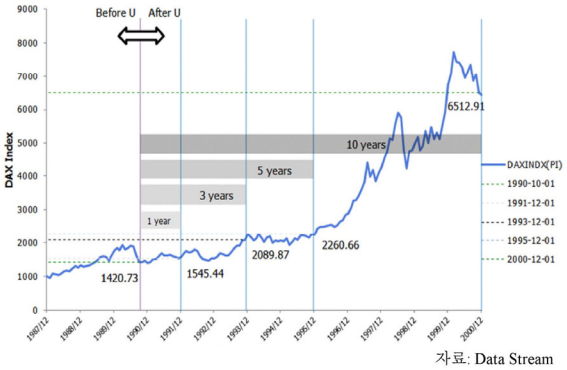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 요인

주가지수의 변화

-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주가지수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음
- 1989년 서독의 주가는 급상승했으나 1990년 다시 하락했고 그해 말에는 1989년 봄 보다 약 10% 상승



Jeong, Hyung-gon and Gerhard Heimpold (2018), p.37



자료: Data 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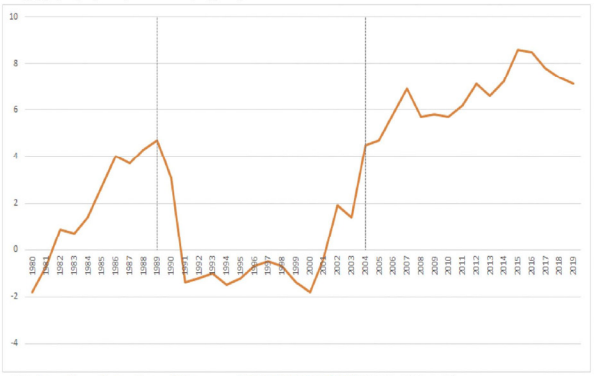
1.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 요인

유럽 경제를 이끌어오던 서독 경제는 통일의 충격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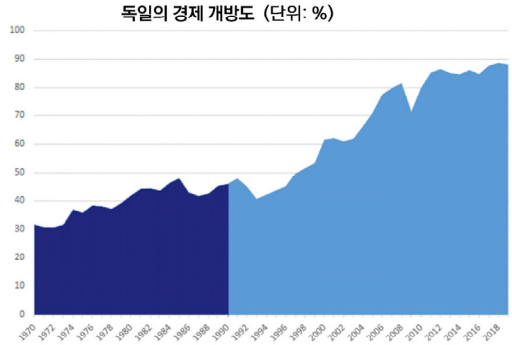
- 통일 이전인 1980년대 서독은 GDP 대비 4%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 통일 후 급격히 하락
- 원인: 동독주민들의 급격한 소비 증가와 동독으로의 투자로 인한 수요측면의 충격에 의한 것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BCA_NGDPD@WEO/DEU(검색일: 2020. 9. 16).

독일의 경제 개방도 (단위: %)



자료: https://www.theglobaleconomy.com/Germany/trade_openness/(검색일: 2020. 9. 17); Vereintes Land: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32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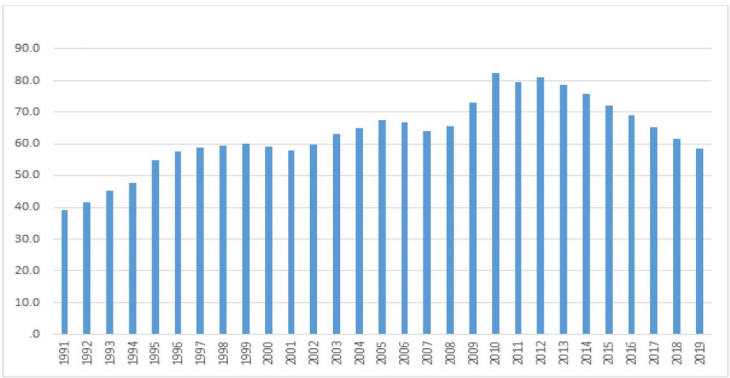
7

1.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 요인

정부 부채의 증가: 통일로 인한 재정 수요의 증가로 정부 부채 역시 급격히 증가

- 통일 초기인 1991년 독일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약 40%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80% 이상 증가하였다가 이후 안정적 하락세로 전환
- 2019년 기준, 약 58%로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통일 초기 수준에 비교하면 차이가 있음



독일정부의 부채/GDP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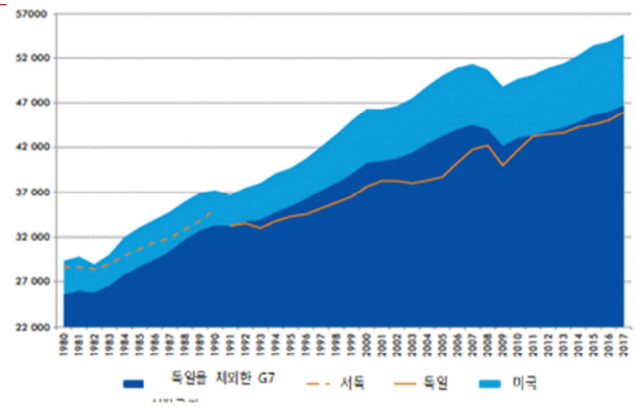
8

1.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 요인

성장 잠재력의 약화

- 흥미로운 점은 독일이 급진적 통일로 인해 통일 독일의 경제성장이 크게 억제되었다는 점
- 할레경제연구소의 보고서(2019)는 통일 이전까지 서독의 1인당 GDP(PPP 기준)는 G7 국가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90년 통일로 인해 G7 국가 평균치보다 낮아졌고, 이후 현저히 느린 추세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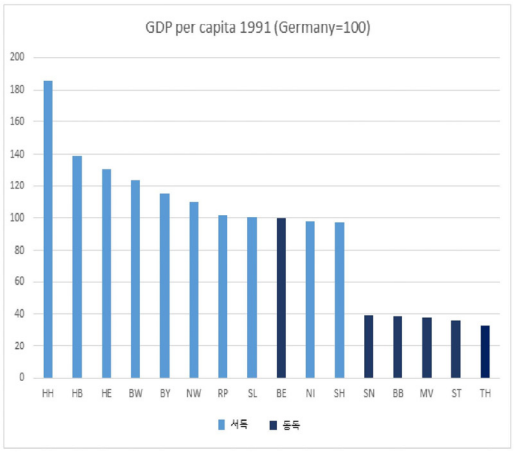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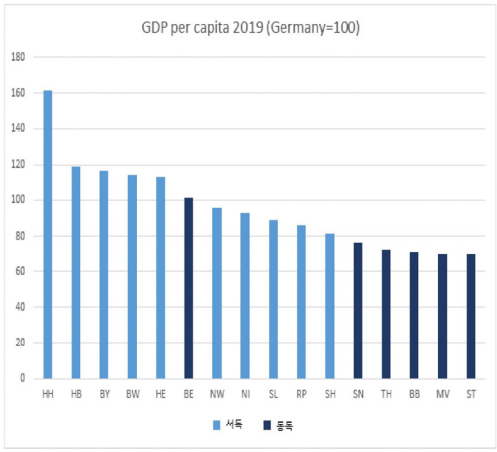
1인당 GDP 비교(PPP 기준)

자료: Vereintes Land: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2.

2.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평가

동서독 연방주의 1인당 GDP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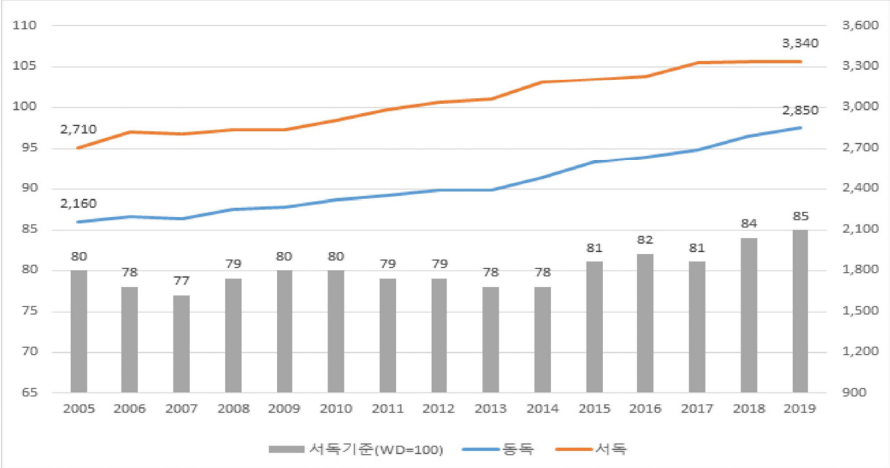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aender 통계 이용.

2.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평가

동서독 월평균 임금수준 비교

(단위: %, 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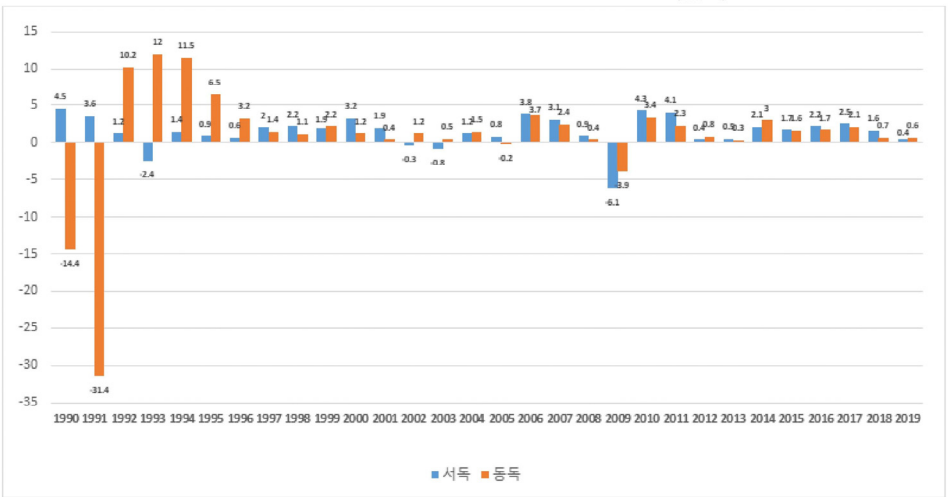
자료: Jahres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2019), p. 49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및 재작성.

11

2.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평가

1인당 GDP 성장률의 동서독간 지역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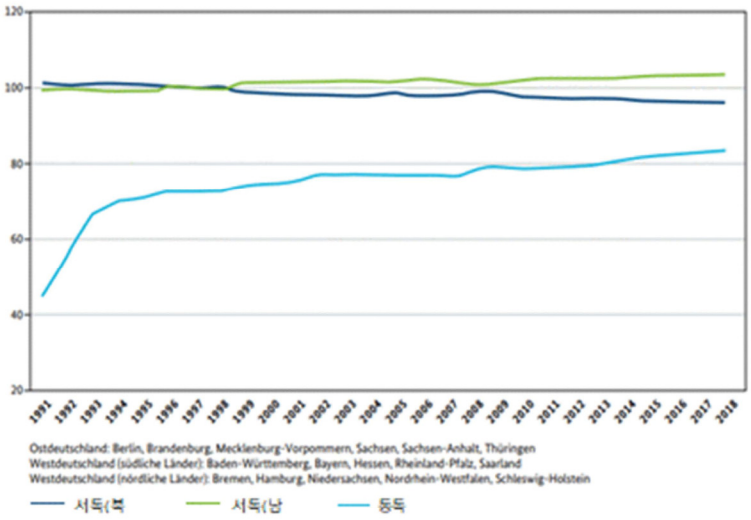


12

자료: Jahres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2019), p. 49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및 재작성.

2.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평가

노동생산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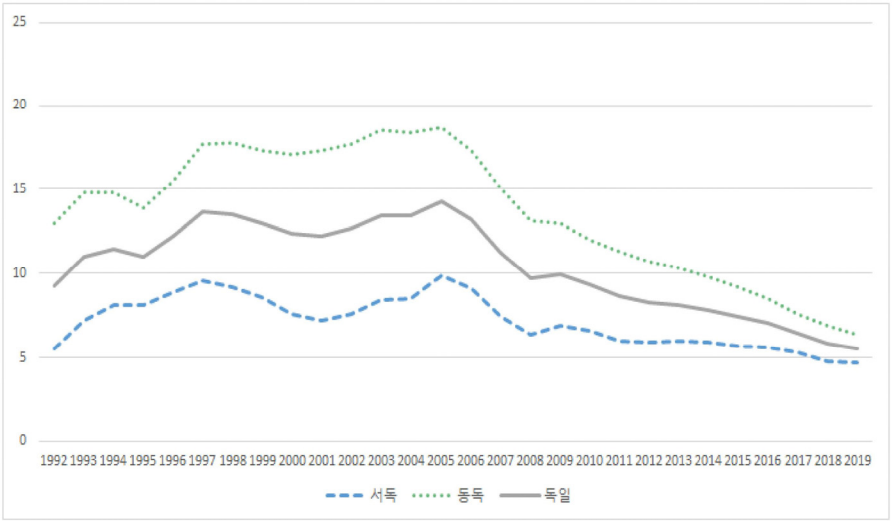


13

자료: Jahres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2019), p. 21에서 재인용.

2.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평가

실업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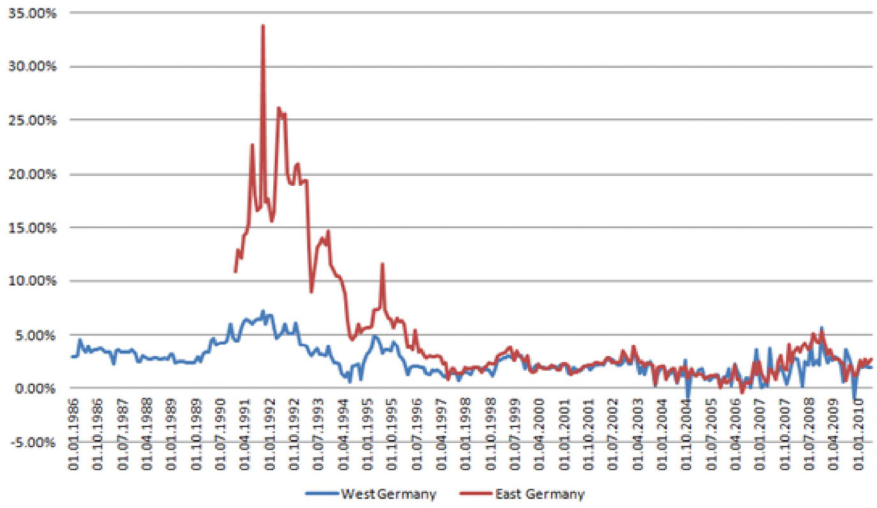


14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aender 통계 이용.

2.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평가

동서독 임금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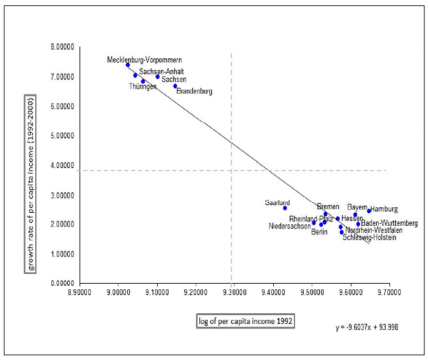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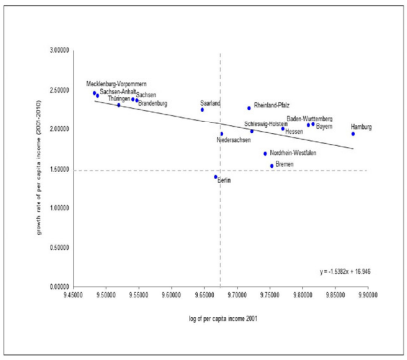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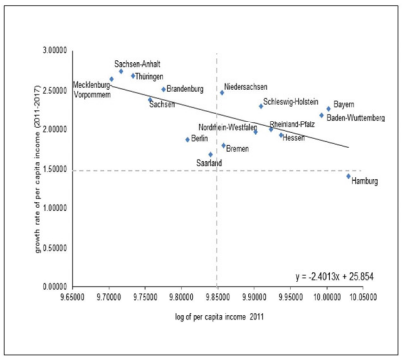
자료: Jeong, Hyung-gon and Gerhard Heimpold (2018), p.42

2.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평가

1인당 소득과 소득성장률의 구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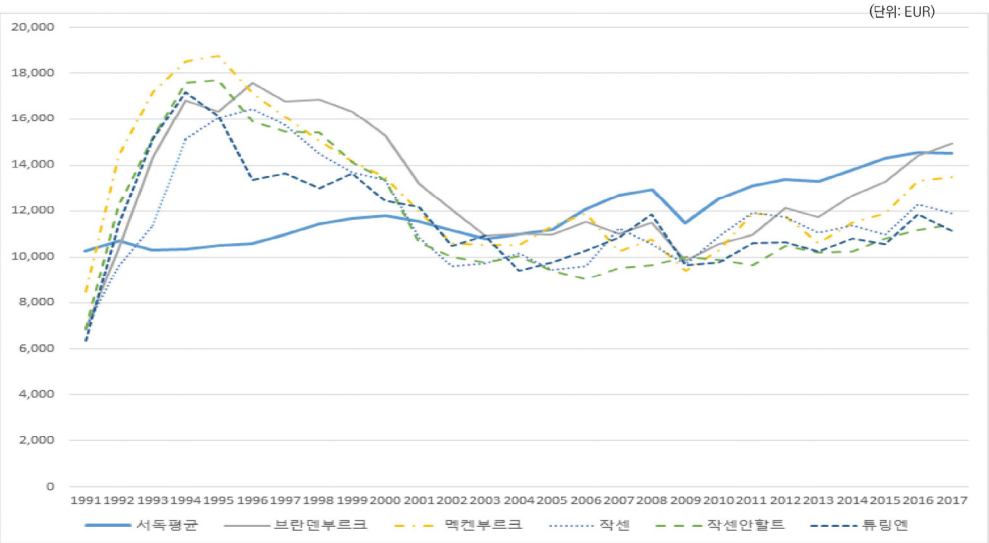
16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aender 통계 이용.

3.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노동자 1인당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단위: 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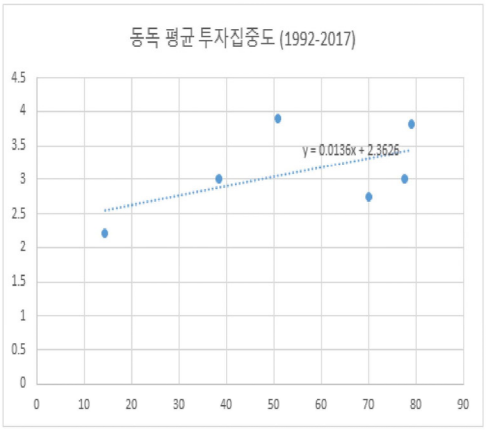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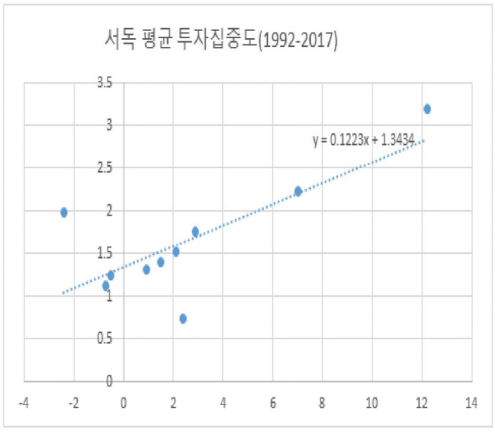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3.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투자 집중도(investment intensity)의 감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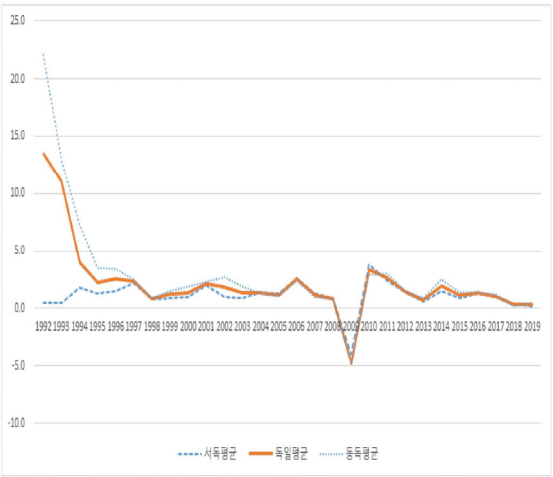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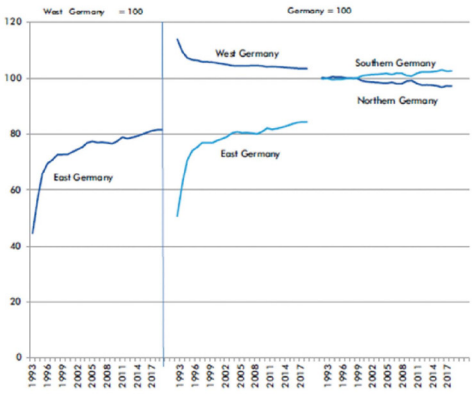
3.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노동생산성의 감소

(단위: %)



자료: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Northern Germany: Berlin, Brandenburg, Bremen, Hamburg, Lower Saxony, Mecklenburg-Vorpommern, North Rhine-Westphalia, Saxony-Anhalt; Schleswig-Holstein, southern Germany: Baden-Wuerttemberg, Bavaria; Hesse, Rhineland-Palatinate, Saarland, Saxony, Thuringia; urban space: independent large cities and urban districts; rural space: rural districts with agglomeration tendencies and sparsely populated rural districts.

자료: Vereintes Land: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2

3.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혁신역량과 혁신 주체의 부족

-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독 지역의 기술혁신이 부족하고, 이는 **동서독간의 근본적인 생산성 차이**로 나타나고 있음.
  - ✓ Burda & Weder(2017)의 연구에서는 동서독의 격차가 총요소생산성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2000년과 2011년 두 기간을 비교할 때도 **동서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감소하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강조함.
  - ✓ 동독 지역 혁신 부족의 원인은 **혁신 주체의 부족**에 기인함. 동독의 **고급 인재들은 현재까지도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동독 지역에 혁신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 ✓ 통일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숙련공이나 전문인력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동독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나 급여 등에 있어서 서독이 여전히 유리하기 때문임.
  - ✓ 결국은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과 기술진보, 경영진의 능력 등의 요인이 서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이 더뎌 짐.

3.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동독 연방주정부 재정능력의 상대적 부족

-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를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로 독일 연방정부의 세수입이 꼽힘.
  - ✓ 동독과 서독 연방주의 세수입 차이는 동서독의 개인소득 격차보다 크게 나타남.
  - ✓ **1991년 동독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이** 7,188유로, 서독 평균은 1만 3,562유로로 동독이 **서독의 53% 정도**였으나, 2018년 기준으로 동독이 1만 9,920유로, 서독이 2만 3,124유로로 **동독이 서독의 86%에 육박함**.
  - ✓ 한편 **1990년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은 서독 연방주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55%까지 상승**함.
  - 또한 동독 연방주가 기업에서 거두어들이는 **법인세는 2018년 기준으로 서독의 52%에 그침**.
  - 이는 동독보다 서독 지역에 기업의 본사가 주로 입주해 있기 때문에 서독 주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동독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임.
  - 이는 동독 연방주의 재정능력을 약화시키고, 그에 따라 다시 **동서독 지역 경제력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일으킴.

3.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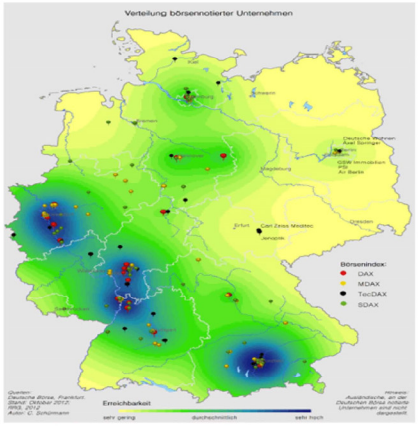
혁신을 주도할 기업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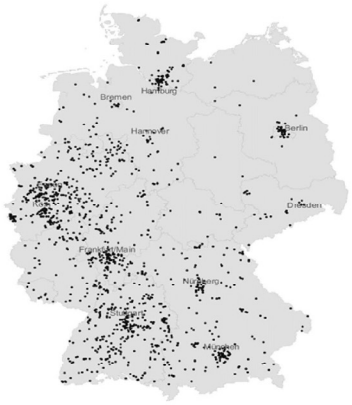
- 동서독 경제의 경제적 수렴이 정체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동독 지역에 대기업이 없다는 점임.
  - ✓ 독일 주가지수에 반영되는 **30대 대기업(30 DAX-Unternehmen) 중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없음**.
  - ✓ 최상위 500대 독일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36개 사에 불과**함.
  - ✓ **서독의 경우 2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노동자 중 48% 이상**에 이르지만, **동독의 경우는 27%에 불과**함.
  - ✓ 동독기업은 서독기업에 주로 중간재를 조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구조적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 ✓ 뿐만 아니라 동독 지역에는 기업 임원에게 매력적으로 대우하는 곳이 드물고, **민간 연구기관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 ✓ 대학을 제외한 정부지원 **연구기관 132곳 중 동독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은 34곳에 불과**하며, 심지어 **217개의 정부부처 기관 중에서 동독 지역에 위치한 기관은 23개에 불과**함.
  - ✓ 이처럼 동독 지역에는 **혁신환경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다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서독으로 이주하여 동독 지역은 인재 부족 문제에 직면함.

3.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독일의 상장기업(좌)과 히든챔피언 (우) 분포도

아래 그림은 독일의 상장기업과 히든챔피언 기업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서독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동독 연방주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자료: HIERO(2013), p. 17; Handelsblatt, Wo die Hidden Champions sitzen(2014. 4. 28).

4.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독일 통일은 **서독 정부의 경제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매우 높은 비용을 치르기는 했지만 '성공적 통일'**이라 평가할 수 있음.
  - ✓ 독일의 급진적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서독 정부가 갖춘 **충분한 경제력(재정건전성, 세계2위의 외환보유고, 높은 국가신용도, 안정적 거시경제여건 등)을 바탕으로 통일 초기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었고, 이후 **매년 GDP의 5% 정도를 동독 지역에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임.
  - ✓ 통합 과정에서 화폐교환이나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상의 문제점을 낳아 그 결과가 현재까지 일부 이어져 동독 경제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지만, 이 또한 통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해야 함.
  - ✓ **동독의 노동생산성과 소득수준이 서독의 85%에 이르고, 실업률 또한 양 지역의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으로까지 수렴**한 것 역시 큰 성과로 평가됨.
  - ✓ 무엇보다도 동독 주민이 자유로운 시장경제하에서 현저하게 **향상된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행복 지수도 통일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짐**.
  - ✓ 현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해소 될 문제임.

4.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독일은 분단국인 한국에게 통일의 모델로서 연구의 대상: 왜?
  - ✓ 통일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사회적 동요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서독식 사회적 시장경제로 통합했기 때문. (북한은 독일식 통일 방식 논의에 비난)
- 현시점에서도 독일의 통일 모델이 여전히 한국에게 유효한 통일 모델일까?
  - ✓ 남북한은 전쟁으로 분단, 동서독은 연합군이 강제로 분리. 현재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도 통일 당시 독일과 너무나 다름.
  - ✓ 동서독은 정부와 민간의 인적, 물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 한국은 분단 이후 상호 교류 중단.
  - ✓ 서독은 분단 이후 주변 유럽국가들과 융화 노력. 폴란드와의 영토문제 정리 등 긴장완화와 전쟁 방지를 위해 독일 스스로가 노력. 한국은 일본과 역사문제, 영토 문제,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한 중국의 견제,
  - ✓ 경제력 격차: 서독은 높은 재정건전성,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 높은 국가신용도, 안정적 거시경제 여건 , 통일 후 현재까지 매년 GDP의 5% 정도를 동독지역에 지원 능력. 동독 역시 사회주의권 경제에서는 선진국
  - ✓ 북한은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 명목 GDP 기준 세계 12위인 남한과 117위인 북한, 남북한 인구 2:1로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 높음. 경제적 자유도(Economic Freedom) 세계 25위인 남한과 세계 180위인 북한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고통이 따를 것임.

- 북한을 독립된 지역으로 분리하고 화폐 및 경제통합을 최대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치 및 안보적으로 가능할지 미지수임.

4.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성공적 통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에 직면: 한국은 어떻게 ?
  - ✓ 동독은 서독에 비해 **정주여건, 전문인력 수급, 임금과 노동생산성 등 투자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
  - ✓ 산업구조상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아, 제조업 분야의 **동독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이 서독의 절반 수준**임.
  - ✓ 독일 **30대 대기업 중 본사**를 동독 지역에 둔 기업은 없고, 최상위 500대 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36개 사에 불과하며, 정부부처와 정부지원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독에 위치해 있음.
  - ✓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 역시 서독 대비 55% 수준에 머물고, 법인세 역시 서독 평균의 52%밖에 되지 않음.
  - ✓ 동독 지역의 **기술혁신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차이가 현저하고, 시간당 노동생산성 역시 서독 수준에 미치지 못해** 동서독의 급여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과 기술진보, 경영진의 능력 등의 요인이 서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은 여전히 서독으로 이주**하는 현실임.
  - ✓ 향후 동독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설립 및 공공 연구기관 육성,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 정책, 동독의 도시경쟁력 확보 등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투자 대상지로서의 서독 대비 비교우위를 이루어내야** 함.

4.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독일식 경제통합의 교훈 : 한국은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은 바람직 하지 않음.
  - ✓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북한 지역의 두자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외 두자유치를 통한 성장에 주력
  - ✓ 북한과의 노동시장 통합, 즉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이주는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남한의 일정 수준에 도달 했을 때 추진
  - ✓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통일 추진
  - ✓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남한 주민 소득의 80%까지 빠르게 도달해야 인구 이동 등의 사회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임 (현재 남북한 1인당 GNI 가 52:1)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호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비교우위에 따른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임
  - ✓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북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황이 지본 및 노동시장이 통합된 상황보다 북한의 경제성장에 더 유리
  - ✓ 특히 북한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북한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중요한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북한이 독립 국가로서 환율정책의 주권을 가지고 북한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필요
  - ✓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동서독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

4.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희망 소득 격차 1까지의 소요기간

(단위: 년)

d(%) 성장률 격차	T = 희망 소득 격차				
	0.6	0.7	0.8	0.9	1
5	47.08	50.16	52.83	55.19	57.29
6	39.23	41.80	44.02	45.99	47.75
7	33.62	35.83	37.74	39.42	40.92
8	29.42	31.35	33.02	34.49	35.81
9	26.15	27.87	29.35	30.66	31.83
10	23.54	25.08	26.42	27.59	28.65
11	21.40	22.80	24.01	25.08	26.04
12	19.62	20.90	22.01	22.10	23.87
13	18.11	19.30	20.32	21.23	22.04

자료: 저자 계산

- Siebert(1993)가 동서독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한 방식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수렴에 걸리는 기간을 계산
- 2018년 기준으로 남한 1인당 GDP는 3만 1,430달러이고 북한은 1,800달러로 상정(CIA). 즉 북한의 1인당 GDP는 2018년 현재 남한의 약 5.7% 수준
- 북한 주민 소득이 남한 소득의 약 80%에 도달하려면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약 8%씩 차이로 33년이 지나야 가능

4.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 남북이 1국 2체제 형태로 운영되고 북한에 시장경제체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 1국 2체제의 경우 북한이 환율 주권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북한 제품의 대외 수출과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
-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산업협력 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협력 공간과 함께 이 지역의 물리적 · 제도적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남한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
  - ✓ 북한의 자본축적 지원, 교육과 기술이전을 통한 북한의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 지원
- 남한의 통일 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 국가
-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초기 단계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또는 '남북 FTA'를 상정
  - ✓ 남북 FTA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으로 논의된 바 있고,
  - ✓ 남북FTA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이후 한반도 경제공동체 (KECCA)형성을 위해 제안한 바 있음.
  - ✓ CEPA는 중국과 홍콩 간의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인 FTA가 아닌 비조약적 성격의 '약정(arrangement)' 형식으로 체결한 FTA라고 볼 수 있음. (남북관계는 특구 관계, 우리의 헌법이 북한 영토에도 영향을 미침. 따라서 북한과 국제조약 체결 불가)

29

Thank You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

MEMO.

SESSION 1.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Wandel der Wahrnehmung der Einheit in Ost- und Westdeutschland

Moderation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Marco Wanderwitz

SESSION 1-1.

Bewertung der Änderungen nordkoreanischer Auslandsstrategien und der Wiederherstellung der innerkoreanischen Kommunikationslinie

Jung-Chul Lee, Prof. für Politikwissenschaft und Internationale Beziehungen an 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SSION 1-2.

Veränderungen der wirtschaftlichen Situation und der sozialen Struktur im Zuge der Deutschen Einheit

Rüdiger Pohl, Direktor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SESSION 1-3.

Das ambivalente Erbe des Sozialismus – technischer Fortschritt in der DDR und dessen Rolle nach 1990 – Ergebnisse aus dem Forschungsverbund Mod-Block-DDR

Jutta Günther, Professorin für Volkswirtschaftslehre an der Universität Bremen

SESSION 1.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Wandel der Wahrnehmung der Einheit in Ost- und Westdeutschland

SESSION 1-1.

Bewertung der Änderungen nordkoreanischer Auslandsstrategien und der Wiederherstellung der innerkoreanischen Kommunikationslinie

Jung-Chul Lee,
Prof. für Politikwissenschaft und Internationale Beziehungen an 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ewertung der Änderungen nordkoreanischer Auslandsstrategien und der Wiederherstellung der innerkoreanischen Kommunikationslinie

Seoul National University, Politikwissenschaft und Internationale Beziehungen,
Jung-Chul Lee

1. Allgemeine Politik des 8. Parteitages: Rückzug der Military First Politics und langfristiger Kampf unter Sanktionen

○ **Auf dem 8. Parteitag hat Nordkorea alle Ausdrücke im Zusammenhang mit 'Military First' gestrichen und Maßnahmen ergriffen, die die vollständige Kontrolle der Partei über das Militär bedeuteten.**

- Die Generallinie ‘Selbständigkeit, Military First, Sozialismus’, die anlässlich des 70. Jahrestages der Parteigründung 2015 angekündigt und neu in die Parteisatzung 2016 aufgenommen wurde, wurde aus der Generallinie auf dem 8. Parteitag gestrichen.

- Die Military First Politik wird durch bürgernahe Politik ersetzt und der Begriff 'Military First Führung' gestrichen.

- Bildung eines vom Allgemeinen Politbüro getrennten Kontrollsystems durch Trennung der militärischen Regierungsführung von der Abteilung Organisationsführung

* Deutlich reduzierte Anzahl von Soldaten im Parteitagsvorsitz und bei den allgemeinen Teilnehmern (719 -> 408)

- Bei einem kürzlichen Expansion-Treffen des Politbüros scheint der Zentrale Ständige Ausschuss Ri Byung-cheol einberufen zu haben, um die Kontrolle über das Militär auszuüben.

○ **Betont wurden langfristige Gegenmaßnahmen gegen Sanktionen, indem der Antisozialismus und die antisozialistische Kontrolle gestärkt und die 'Eigenständigkeit und Selbstversorgung' betont werden.**

- Betont wird die Haltung, auf den langen Kampf gegen UN-Sanktionen und die Corona-Blockade vorbereitet zu sein, indem die Ausdrücke Eigenständigkeit und Selbstversorgung verwendet werden. Der im 7. Parteitag verwendete Ausdruck 'Eigenständigkeit und selbständige Stärke' wurde gestrichen.

* Ausdrücke wie 'starke und wohlhabende Nation' und 'starke Nation' wurden gestri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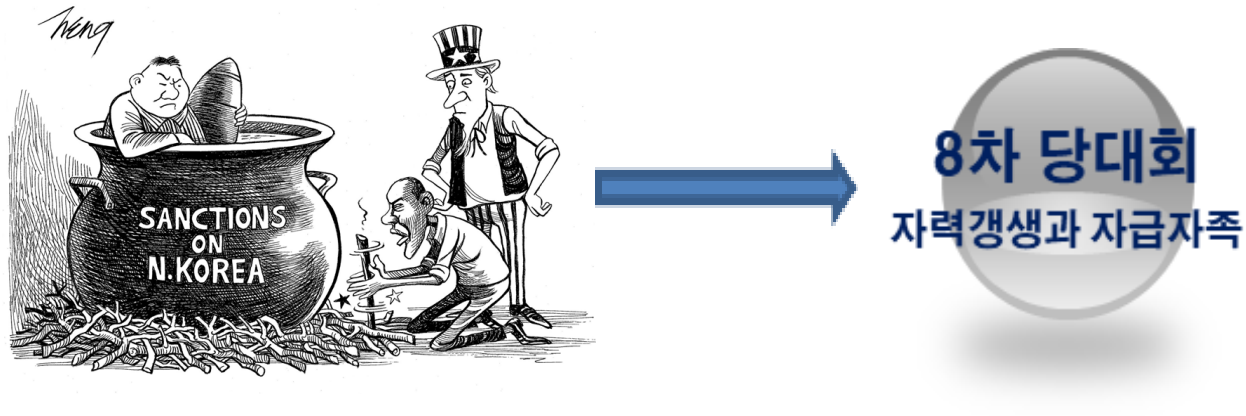


Bild: 8. Parteitag - Eigenständigkeit und Selbstversorgung
Quelle: Washington Post

2. Der 8. Parteitag und die Politik zu nuklearen und strategischen Waffen

○ **Ob der in der letzten Verfassungsänderung enthaltene Ausdruck eines Atomwaffenstaates in die Parteisatzung aufgenommen würde, war auch von großem Interesse. Dies war nicht der Fall. Auch von der Parallelen Linie von Atomwaffen und Wirtschaft des 7. Parteitags war nicht mehr die Rede.**

- Das Vorwort der vorliegenden Satzung enthält keine Inhalte im Zusammenhang mit Nuklearwaffen, drückt diese als republikanische Kraft aus und betont die Stärkung der unabhängigen Rüstungsindustrie.

* “Die Arbeiterpartei Koreas stärkt ständig die nationalen Verteidigungsfähigkeiten, indem sie die Streitkräfte der DVRK politisch und ideologisch, militärisch und technologisch kontinuierlich stärkt und eine unabhängige Verteidigungsindustrie entwickelt.”

- Da in der Präambel der nordkoreanischen Verfassung der Begriff 'Atomstaat' enthalten war, wurde angenommen, dass in der Präambel der Parteisatzung Begriffe wie 'Nukleargewalt' oder 'nukleare Abschreckung' und 'Nuklearwaffen' verwendet werden könnten, aber die Bestimmung eines Atomwaffenstaates wurde ausgeschlossen.

* In der Präambel der Verfassung (seit 16.6) ist von 'starkem Staat der politischen Ideologie, Atommacht und unbesiegbarer Militärmacht' die Rede.

* Auch der Ausdruck der 2016 festgelegten nuklearökonomischen Parallellinie wurde aus dieser Satzung gestrichen.

○ **Dennoch bezieht es sich auf verschiedene strategische Waffen und Atom-U-Boote, was bedeutet, dass in Zukunft verschiedene Variablen und Minenfelder bestehen bleiben.**

- Ungewöhnlicherweise wurden strategische Waffenentwicklungsziele mit Details aufgelistet.

* Miniaturisierung, Gewichtsreduzierung, Taktikisierung von Nuklearwaffen, Verstärkung von 15.000 km nuklearen Präventiv- und Vergeltungsschlagfähigkeiten, Hyperschall-Gleitkampfdivision, Unterwasser- und Boden-Interkontinentalraketenförderung, Betonung der Abschlussprüfungsphase des Designs von Atom-U-Booten und Fertigstellung des militärischen Aufklärungssatelliten.

- Betont wird die Fähigkeit, das Festland anzugreifen. Die Fähigkeit zu strategischen Waffen habe ein Niveau erreicht hat, das den Gegner 'außerhalb des Territoriums' (verbunden mit der Truppenschau) präventiv bezwingen kann.
* In Bezug auf den militärischen Druck steht: Dies wird zu einer Sicherheitsinstabilität der Kräfte führen, die uns bedrohen. Dies impliziert einen Austausch auf dem Festland (mainland exchange).
* Die Bedrohung Südkoreas mit taktischen Nuklearwaffen ist eng ausgelegt, tatsächlich wird die Haltung offenbart, allen drei Ländern (SK, Japan, USA) zu drohen.

○ **Die beiden oben genannten gegensätzlichen Maßnahmen entpuppen sich als ein Diskurs nordkoreanischer Art, die eine Vorbereitung auf Dialog und Konfrontation erfordert.**

- Bei der Vorbereitung auf die sogenannte ‘Konfrontation’ liegt der Schwerpunkt auf der Strategie der Waffenentwicklung, die der nordkoreanischen Existential-Deterrence-Strategie entspricht.

- Auf der anderen Seite betont Nordkorea den Rahmen von 'Sicherheit - Sicherheit' in Bezug auf die Vorbereitung des 'Dialogs', konzentriert aber gleichzeitig seine gesamte diplomatische Macht, um Sanktionen aufzuheben.
* Im Januar 2009 erklärte das Außenministerium, dass es ohne eine Verbesserung der Beziehungen zu den Vereinigten Staaten leben könne, aber nicht ohne ein Friedensabkommen. Anstelle des <Security-Economy>-Austauschrahmens wurde der sogenannte <Security-Security>-Austauschrahmen hervorgehoben; später wurden beide gemischt.

- Bei der 3. Vollversammlung der 8. Amtsperiode des Zentralkomitees Mitte Juni wurde betont, dass alles auf Konfrontation und Dialog vorbereitet sein muss. Dialog wurde hier zum ersten Mal betont.
* Auch auf dem Parteitag im Januar wurde auch die Prämisse betont, dass nationale Verteidigungsmacht Diplomatie nicht ausschließe. Friedensverhandlungen wurden hervorgehoben.

3. Änderungen der Parteisatzung und der langfristigen Politik gegenüber Südkorea: Die Entstehung eines nationalen Koalitionsansatzes

○ **Zum Zeitpunkt des Gesamtberichts sagte Generalsekretär Kim Jong-un, er habe “die Südkorea-Frage in Übereinstimmung mit der entwickelten Situation und den sich ändernden Anforderungen der Zeit geprüft” und enthüllte, dass die Parteisatzung erheblich überarbeitet wurde, um sie anzupass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Flexibilität bei mittel- bis langfristigen Strategien.**

○ **Durch die Überarbeitung der Satzung hat Nordkorea den “gemeinsamen Wohlstand” als neue Stufe in seiner Politik gegenüber Südkorea festgelegt und die demokratisch begründete Theorie der südkoreanischen Revolution praktisch vollständig gestrichen.**

- Es wird beurteilt, dass die Phase des gemeinsamen nationalen Wohlstands als Phase vor der des föderalen System festgelegt wurde.

- Tatsächlich wird argumentiert, dass die in Absatz 2 der Gemeinsamen Erklärung vom 15. Juni 2000 vereinbarte Tatsache (Das föderale System auf niedriger Ebene und die nationale Föderation haben Gemeinsamkeiten) als im Pakt festgelegt angesehen werden kann.

* Es kann interpretiert werden, dass Nordkorea de facto die Stufe der nationalen Einheit kodifiziert hat, indem die Stufe des nationalen gemeinsamen Wohlstands als Stufe eines Föderationssystems auf niedriger Ebene formalisiert wurde.

	Revision am 7. Parteitag (9.5.2016)	**Revision am 8. Parteitag (9.1.2021)**
Präambel	Wir **kämpfen** für die Vereinigung des Landes nach den Prinzipien der Unabhängigkeit, der friedlichen **Wiedervereinigung** und der großen nationalen Einheit und für die einheitliche Entwicklung des Landes und der Menschen, indem wir unsere Kräfte bündeln.	Wir **kämpfen** für den Schutz der Sicherheit und die friedliche Umgeb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um di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des Landes voranzutreiben, während wir das Banner der nationalen Unabhängigkeit und der großen nationalen Einheit hochhalten **und den gemeinsamen Wohlstand der Nation erreichen.**

- Die Interpretation, dass die Theorie der beiden Koreas akzeptiert und die Stärkung des Nordkorea-China-Bündnisses betont wurde, ist eine Überinterpretation. Angesichts der anderen Ausdrucksformen des Abkommens wäre es angebracht, dies als einen Prozess zu betrachten, in dem Nordkorea die Vereinigung im Stil eines einheitlichen Staates (Föderationssystem auf niedrigerer Ebene) akzeptiert hat.

○ **Infolgedessen hat Nordkorea den Vereinigungsplan im Stil der Demokratischen Bundesrepublik Goryeo verschoben und in der gegenwärtigen Phase seine Strategie zur Förderung der Vereinigung im Stil einer nationalen Föderation (der Phase des gemeinsamen Wohlstands der Nation) überarbeitet. Es scheint, als ob ein flexibler Ansatz für die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gemacht wurde.**

- Der Kern des Systems der Demokratischen Föderation von Goryeo bestand darin, dass der Abzug der US-Streitkräfte aus Korea eine Voraussetzung war, aber im Stadium des gemeinsamen nationalen Wohlstands wird eine solche Voraussetzung nicht nachdrücklich vertreten, und der Ansatz, den Nordkorea so weit abgelehnt hatte wie das sogenannte CEPA, wird möglich werden.

○ **Andere veraltete Ausdrücke wie die demokratische Revolution für nationale Befreiung und die erneute Invasion des japanischen Militarismus wurden gestrichen.**

Zur Vereinigung in der alten Satzung

"Der unmittelbare Zweck der Arbeiterpartei Koreas besteht darin, einen starken sozialistischen Staat in der nördlichen Hälfte der Republik aufzubauen und **die Aufgabe der nationalen Befreiung und demokratischen Revolution** im ganzen Land zu erfüllen. Das ultimative Ziel ist es, die Selbstständigkeit des Volks vollständig zu verwirklichen, indem die gesamte Gesellschaft Kimilsungist-Kimjongilist wird. […] Die Arbeiterpartei Koreas kämpft dafür, die Aggressionskräfte der US-Imperialisten aus Südkorea zu vertreiben; beendet alle Arten von ausländischer Vorherrschaft und Einmischung, zerschmettert die **Reinvasion des japanischen Militarismus**. Der Kampf des südkoreanischen Volkes für das Recht auf Demokratie und Überleben in der Gesellschaft wird aktiv unterstützt. Wir kämpfen gemeinsam für die Vereinigung des Landes und die einheitliche Entwicklung des Landes und der Nation auf den Prinzipien der Unabhängigkeit, der friedlichen Vereinigung und der großen nationalen Einheit."

Zur Vereinigung in der neuen Satzung

"Der unmittelbare Zweck der Arbeiterpartei Koreas besteht darin, in der nördlichen Hälfte der DVRK eine wohlhabende und zivilisiert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aufzubauen und die **unabhängige und demokratische Entwicklung der Gesellschaft** im ganzen Land zu verwirklichen. Das ultimative Ziel ist es, eine kommunistische Gesellschaft aufzubauen, in der das Ideal des Volkes vollständig verwirklicht wird. […] Die Arbeiterpartei Koreas kämpft dafür, die Aggressionskräfte der US-Imperialisten aus Südkorea zu **entfernen**. Die **politische und militärische Dominanz der USA** über Südkorea wird letztendlich **liquidiert**, alle Arten ausländischer Einmischung werden gründlich zurückgewiesen und **grundlegende militärische Bedrohungen werden mit starken nationalen Verteidigungskapazitäten unterdrückt**, um die Sicherheit und die friedliche Umgeb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zu schützen. Wir halten das Banner der nationalen Unabhängigkeit und der großen nationalen Einheit hoch und kämpfen für di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des Landes und **für den gemeinsamen Wohlstand der Nation**."

4. Wiederherstellung der innerkoreanischen Kommunikationslinie und kurzfristige Perspektiven

○ Jüngsten Berichten zufolge begann der Austausch persönlicher Briefe zwischen den beiden Koreas vor und nach dem Korea-US-Gipfel, was zur Wiederherstellung der Kommunikationswege führte.

- Der Austausch persönlicher Briefe zwischen den beiden Koreas wurde durch die JoongAng Ilbo (2. Juli) usw. berichtet und durch das innerkoreanische Abkommen bekannt gegeben.

* Die nordkoreanische Zentrale Nachrichtenagentur gab dies öffentlich bekannt, und KBS bestätigte die Zahl der Austausche (etwa zehnmal).

○ Briefwechsel im Juli

- Die Führer des Nordens und des Südens vereinbarten, einen großen Schritt zur Wiederherstellung des gegenseitigen Vertrauens und zur Förderung der Aussöhnung zu tun, indem sie die unverbundenen innerkoreanischen Kommunikationskanäle durch persönliche Briefe, die in letzter Zeit mehrmals ausgetauscht wurden, wiederherstellen.(Zentrale Nachrichtenagentur Chosun 27. Juli)

○ Nach der Veröffentlichung der Überprüfung der Nordkorea-Politik der Biden-Regierung (WP 30. April) wird bewertet, dass der Norden begonnen hat, Interesse am Dialog zu zeigen.

- Nordkoreas Interesse wuchs, nachdem bekannt wurde, dass die Überprüfung der Biden-Regierung zur Nordkorea-Politik ein Austausch zwischen <teilweiser Denuklearisierung> und <teilweiser Aufhebung der Sanktionen> war.

- Der Diskurs von Kwon Jong-gun war keine Kritik, sondern eher eine politische Befragung an die USA. Die ABC-Pressekonferenz von Berater Sullivan wurde mit Inhalten gefüllt, die für Nordkorea von Interesse sein könnten.

* Sullivan: "Die Betonung der Bedrohung basiert nicht auf Feindseligkeit, sondern eher darauf, eine Lösung zu finden."

- Gleichzeitig scheint Nordkorea begonnen zu haben, auf den innerkoreanischen Dialog zu reagieren.

- Auf der 3. Vollversammlung der 8. Amtsperiode des Zentralkomitees am 16. Juni bekundete Nordkorea ebenfalls Interesse, indem es sich im Gegensatz zu den vorherigen auf den Dialog bezog und sagte: “Sie müssen sowohl auf Dialog als auch auf Konfrontation vorbereitet sein.”

○ Es wird beurteilt, dass es immer noch eine Hürde der Gipfelgespräche zwischen den USA und Nordkorea gibt, da die USA erklären, dass es schwierig sei, Nordkoreas Forderungen zur Wiederaufnahme der Gespräche zu akzeptieren.

- Laut einem Artikel im Zusammenhang mit dem Bericht des Geheimdienstausschusses de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vom 7. Juli macht Nordkorea die Unterstützung wie Impfstoffe nicht zur Bedingung für den Dialog zwischen den USA und Nordkorea.

- Dem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zufolge, fordert Nordkorea die “mündliche Verweisung” der USA auf die “Gestattung von Exporten von Mineralien und Importen von raffiniertem Öl und Lebensmittel des täglichen Bedarfs” als Voraussetzung für die Wiederaufnahme des Dialogs zwischen den beiden Ländern.

- Die USA hat jedoch ihre Zurückhaltung zum Ausdruck gebracht, Gespräche unter der Prämisse mündlicher Zusagen zur Aufhebung der Sanktionen zu führen.

* Die stellvertretende Außenministerin Sherman betonte den Dialog an erster Stelle: “Wenn Nordkorea möchte, dass die Sanktionen aufgehoben werden, wird es auch wissen, dass es einen Weg zur vollständigen Denuklearisier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einleiten muss. Was (dafür) zu tun ist, ist klar formuliert.” (JoongAng Ilbo, 7.7.)

* “Während ihres Besuchs in Südkorea hat die stellvertretende Außenministerin Sherman wiederholt angedeutet, dass sie nicht die Absicht habe, Anreize zu bieten, Nordkorea an den Tisch zu bringen.....<Ich hoffe, dass Nordkorea auf die aufrichtige Geste der Vereinigten Staaten reagiert, die für einen bedingungslosen Dialog offen sind>, sagte sie.” (JoongAng Ilbo, 26.7.)

○ Daher kann man sagen, dass Nordkorea sein Misstrauen gegenüber der Regierung Biden immer noch nicht auflöst.

- Zum Zeitpunkt des Korea-Besuchs des US-Sondergesandten für Nordkorea Sung Kim Ende Juni bestätigten Kim Yeo-jung und Ri Son-gwon indirekt die Position der USA und gaben eine Reihe von Diskursen heraus, in denen sie den Dialog mit den USA ablehnten.

* Durch den Korea-Besuch von Wendy Sherman konnte Nordkorea erneut erkennen, dass die USA “Gespräche auf Arbeitsebene ohne Bedingungen” betonen.

○ Absage des USA-Nordkorea-Gipfels im Juni

- Die stellvertretende Abteilungsdirektorin Kim Yeo-jung sagte am 22. Juli den USA-NK-Gipfel mit folgenden Worten ab: “Es gibt ein Sprichwort, dass Traum-Interpretationen wichtiger als die Träume selbst sind. Die USA scheinen den Traum so zu interpretieren, um sich selbst zu trösten.”

- Am 23. verteidigte Außenminister Ri Son-gwon die Meinung: “Wir denken nicht an einen möglichen bedeutungslosen Kontakt mit den Vereinigten Staaten, die unsere Zeit verschwendet.”

- Auf dem 8. Parteikongress betonte Nordkorea das Prinzip "power to power, good will to good will" unter der Bedingung, dass die US-feindliche Politik zurückgezogen wird.

* Unabhängig davon, wer in den Vereinigten Staaten an die Macht kommt, bleibe die Realität und die wahren Absichten gleich.
* Der Parteikongressbericht bekräftigte die Position, dass der Schlüssel zum Aufbau neuer Beziehungen zwischen Nordkorea und den USA darin liegt, dass die USA ihre feindselige Politik gegenüber der DVRK zurückziehen.
* Am 11. Juli letzten Jahres definierte Kim Yeo-jung diese Zeit als eine Phase, in der "Rücknahme der feindlichen Politik und Wiederaufnahme des Dialogs" ausgetauscht werden sollte. Wenn dieser Punkt zutrifft, ist die Rücknahme der feindlichen Politik zur Wiederaufnahme des Dialogs keine grundsätzliche Forderung wie der Abzug der US-Streitkräfte aus Korea.

○ **Daher scheint Nordkorea seine Position festgelegt zu haben, zuerst Fortschritt in d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zu erzielen und später an den Beziehungen zwischen Nordkorea und den USA zu arbeiten. Deshalb hat es zu den Vereinbarungen über die Kommunikationswege zwischen den beiden Koreas kommen können.**

- Solange es von US-Seite keine Änderung gibt, wird es derzeit schwierig sein, ein Treffen auf Arbeitsebene zwischen den USA und Nordkorea abzuhalten, da es davon abhängig ist, ob die USA ein mündliches Versprechen abgeben werden, die Sanktionen aufzuheben. Deshalb scheint Nordkorea zunächst der Südkorea Priorität eingeräumt und Fortschritte in d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signalisiert zu haben.

- Derzeit macht Nordkorea Fortschritte in d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und signalisiert, dass es keine Erwartungen an einen Dialog mit den USA hat.

- Die Tatsache, dass diese Kommunikationsverbindung mit dem Besuch der stellvertretenden Außenministerin Wendy Sherman in Korea zusammenfällt, und die frühe Begrüßungserklärung der US-Seite deuten darauf hin, dass die Koordinierung zwischen der ROK und den USA gut voranschreitet.

○ **Da Nordkorea diesmal den Dialog angekündigt hat, werden die Militärübungen im August nicht als Hindernis gelten.**

- Nach dem 70. Jubiläum des Vertrags über die gegenseitige Freundschaft zwischen der DVRK und China am 11. Juli wurde erwartet, dass Nordkorea seine Position zu d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zum Ausdruck bringen wird, nachdem der Umfang der Militärübung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n USA festgelegt wurde.

- Daher kann die Erklärung Nordkoreas, den Dialog im Rahmen des innerkoreanischen Abkommens wieder aufzunehmen, als allgemeiner Kompromiss zur Militärübung im August angesehen werden.
* Selbst wenn es keine Einigung über die Militärübungen gäbe, wäre es unter solchen Umständen unmöglich, das Niveau der Militärübung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n USA anzuheben.
* Es wurde bewertet, dass Nordkorea kein Problem mit dem Niveau der Militärübungen zwischen Südkorea und den USA auf dem Niveau vom letzten August und März dieses Jahres haben wird.

- Die Begrüßung des Projekts zur Wiederherstellung der Kommunikationsleitung durch die US-Seite sollte als Hinweis darauf gewertet werden, dass sie als Ausdruck des allgemeinen Verständnisses der Lage im August zu verstehen ist.
* Berichterstattungen über die Wiederherstellung der innerkoreanischen Kommunikationslinie erfolgten zuerst in den Vereinigten Staaten, sodass anzunehmen ist, dass die südkoreanische Seite die Vereinigten Staaten während des Besuchs von Wendy Sherman in Korea im Voraus informiert hat.

○ **Da es noch länger dauern wird, bis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USA und der DVRK wieder aufgenommen werden, wird erwartet, dass die allgemeine Situation zunächst mithilfe verbessert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zu bewältigen ist.**

- Während man bei der Wiederherstellung der Kommunikationswege von der minimalistischen Interpretation eines Krisenmanagementsignals ausgeht, sollte gleichzeitig die hoffnungsvolle Interpretation gemacht werden, dass dies ein Signal für die Wiederherstell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werden kann.

- Die gute Nachricht ist, dass es eine gewisse stillschweigende Vereinbarung zwischen der ROK und den USA über diesen Prozess gibt.

○ **Angesichts des Diskurses von Kim Yeo-jung, in dem erwähnt wurde, dass es sich um einen neuen Ausgangspunkt handeln könnte, wie dem 'Frühling vor 3 Jahren', besteht die Möglichkeit einer Wiederherstellung des innerkoreanischen Dialogs je nach Haltung der südkoreanischen Regierung**

- Es wird eingeschätzt, dass in Zukunft mit interkoreanischen Videokonferenzen zu rechnen ist und die Möglichkeit eines One-Point-Gipfels besteht.

* Die COVID-19 Situation und die Zusammenarbeit im Gesundheitsbereich, wie die Bereitstellung von Impfstoffen, werden wichtige Variablen sein.

- Auf längere Sicht wird die Variable wichtig sein, ob die Interessen der beiden Koreas, der USA und Chinas in Einklang gebracht werden können, um eine Dynamik zu schaffen, die zum Friedensprozess der Olympischen Spiele in Peking führt.

MEMO.

MEMO.

SESSION 1.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Wandel der Wahrnehmung der Einheit in Ost- und Westdeutschland

SESSION 1-2.

Veränderungen der wirtschaftlichen Situation und der sozialen Struktur im Zuge der Deutschen Einheit

Rüdiger Pohl,
Direktor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Veränderungen der wirtschaftlichen Situation und der sozialen Struktur im Zuge der Deutschen Einheit

Rüdiger Pohl

Deutsch-Koreanisches
Konsultationsgremium zu Vereinigungsfragen
Videokonferenz - 4. und 5. August 2021

1990
Wie es anfin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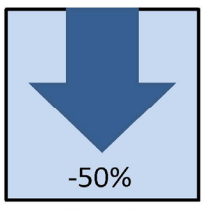
1990 erlebten wir die Implosion der DDR-Wirtschaft

- Die Bürger der DDR hatten 1989 die **Öffnung der Staatsgrenze** durchgesetzt.
- Sie mussten danach einem **fundamentalen Systemwandel** bewältigen: nach 40 Jahren Sozialismus in der DDR zur **Marktwirtschaft** im vereinten Deutschland.

Was den Systemwandel anfangs **schwer** machte: Die **Wirtschaft der DDR** war 1990 in einem **desolaten** Zustand. Dies wurde nach Öffnung der Grenze 1989 unübersehbar. Die zuvor durch die Grenze vom Wettbewerb abgeschotteten Betriebe waren **dem globalen Wettbewerb nicht gewachsen**. Die **Folgen für Ostdeutschland** waren gravie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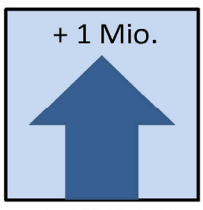
Es kam im Jahr 1990 zu einer **Implosion der Wirtschaft** in der DDR:

Industrieproduktion bricht 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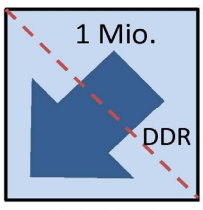
IV89 bis III90

Rasanter Anstieg der Arbeitslosigkeit



Juni 90 bis Juli 91

Menschen verlassen scharenweise die DDR



IV89 bis III90

Die **Stabilisierung Ostdeutschlands** (der „Aufbau Ost“) wurde zur herausragenden Aufgabe für das **wiedervereinigte Deutschland**.

Pohl – DKKzV- Aug 2021

Wachst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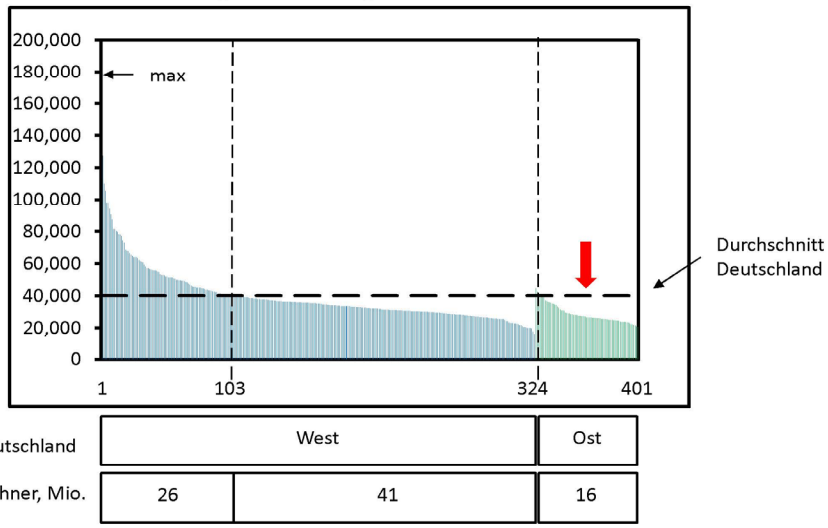
3

Positiv: Die Wirtschaft Ost geht nach 1990 sofort auf Wachstumskurs

- Den Schwung hierfür gab die **massive Wirtschaftsförderung** durch den Staat.
- Die **Wirtschaftskraft Ost** liegt heute zwar immer noch **unter** dem Durchschnitt…
- … **erreicht** aber bereits die Wirtschaftskraft der **meisten** Regionen in West.

Deutschland 2018:
Wirtschaftskraft in den 401 Regionen

Bruttoinlandsprodukt je Einwohner, in Euro
in absteigender Reihenfolge nach West und Ost



Deutschland	West		Ost
Einwohner, Mio.	26	41	16

Regionen: Landkreise und kreisfreie Städte – Ost mit Berlin
Wirtschaftskraft: Bruttoinlandsprodukt je Einwohner

Pohl – DKKzV- Aug 2021

Soziale Belastun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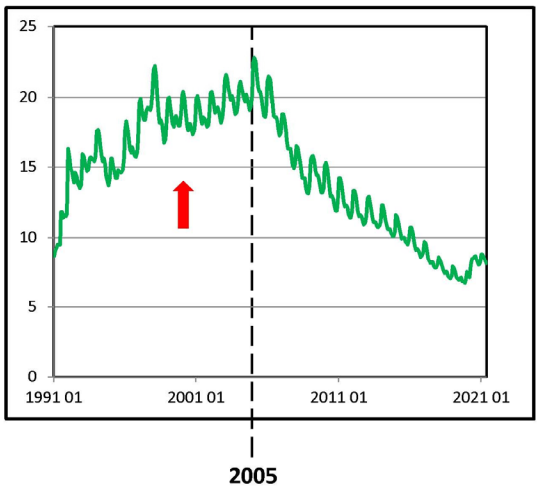
Negativ: 15 Jahre lang (bis 2005) STIEG die Arbeitslosigkeit in Ost an

- Ein **Schock** für die Ostdeutschen („In der DDR gab es keine Arbeitslosigkeit“)!
- **Ursache** der Arbeitslosigkeit war die **zeitliche Inkongruenz**: Ehemalige DDR-Betriebe wurden rasch geschlossen – neue Unternehmen entstanden erst allmählich.
- Diese Vorgänge werden bis heute **unterschiedlich bewertet**.

Ostdeutsche sagen: Die Schließung vieler DDR-Betriebe war **ungerechtfertigt**.
Gegenthese: Viele DDR-Betriebe waren **ineffizient**, die Schließung **unvermeidlich**.

Arbeitslosenquote in Ost

in Prozent



Pohl – DKKzV- Aug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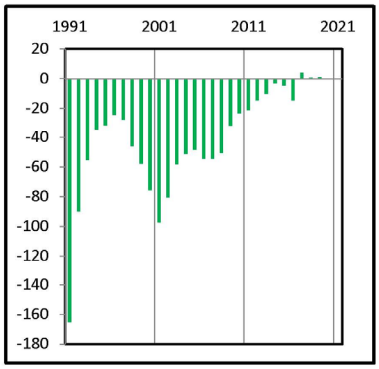
Weniger Menschen

5

Negativ: 20 Jahre (bis 2012) lang SCHRUMPFTE die Bevölkerung in Ost

- **Ursachen**: **Abwanderung** nach West (zu Arbeitsplätzen und höheren Löhnen) und ein hohes **Geburtendefizit** (Geburtenziffer in Ost hat sich um 1990 halbiert).
- **Trendumkehr** ab 2012: Wanderungsverluste enden, Ausländer wandern zu.
- Die **Perspektive** für die Bevölkerungszahl Ost bleibt **labil**. Das **Geburtendefizit** besteht weiter (höher als in West) – **Ausländer** wandern kaum noch nach 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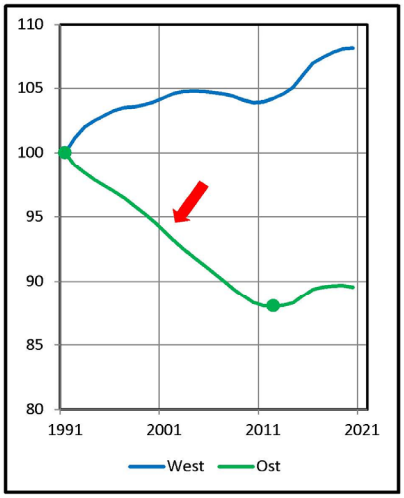
Wanderungsverlust von Ost nach W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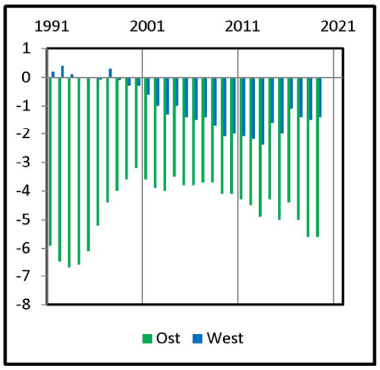
Umzüge von West nach Ost minus Umzüge von Ost nach West, jeweils ohne Berlin, in 1000 Personen

Einwohner in Ost und West

1991=100



Geburtendefizit Ost und West



Anzahl der Geborenen minus Anzahl der Gestorbenen, je 1000 Einwohner und Jahr

Pohl – DKKzV- Aug 2021

Regionale Divergenz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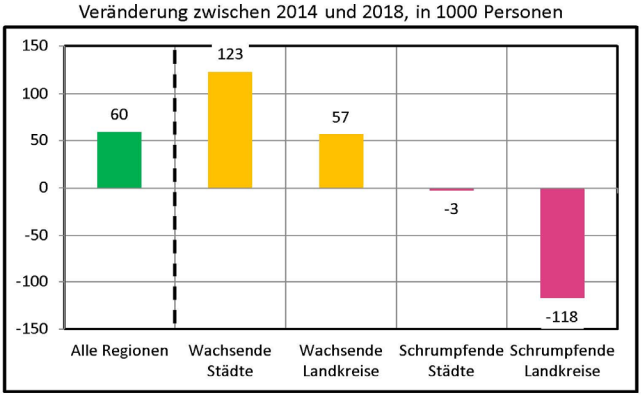
Regionale Divergenz in der Bevölkerungsentwicklung Ost: gut für die Städte – schlecht für ländliche Gebiete

- Die **Vitalität der Städte** zeigt sich in der **wachsenden** Bevölkerungszahl.
- Die **schlechteren Perspektiven** vieler Landkreise zeigt die **sinkende** Bevölkerungszahl. Nachteile: Angebot an Arbeitskräften sinkt, Bereitstellung von Infrastruktur wird teurer.
- In den schrumpfenden Landkreisen wohnt die **Hälfte** der Bevölkerung Ost.

Einwohner in Städten* und Landkreisen Ost

*ohne Berlin

Veränderung zwischen 2014 und 2018, in 1000 Personen



Pohl – DKKzV- Aug 2021

Sozialer Wandel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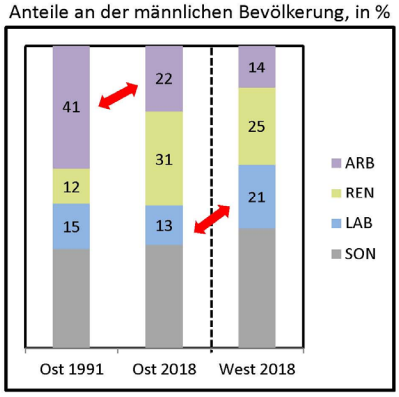
Die Umwälzungen in Gesellschaft und Wirtschaft ab 1990 haben die Sozialen Lagen in Ost verändert

• **Arbeiter:** Der Anteil der Arbeiter hat sich in Ost halbiert.
In ihrer Ideologie stand die DDR unter „Führung der Arbeiterklasse“ (und der Staatspartei). Die „Brigaden“ der Arbeiter waren wichtige Institutionen in den Betrieben. Die „Arbeitergesellschaft“ der DDR ist aufgelöst. Immer weniger Menschen fühlen sich der Arbeiterschicht zugehörig.

Ausgewählte Soziale La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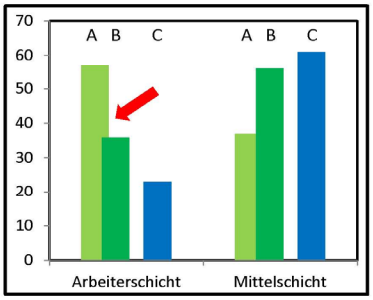
Männer

Anteile an der männlichen Bevölkerung, in %



ARB Arbeiter
LAB Leitende Angestellte und Beamte
REN Rentner
SON Sonstige

Welchen sozialen Schichten sich die Bevölkerung selbst zuordnet (in %)



• **Leitende Angestellte/Beamte:** Anteil geringer als in West
Führungskräfte in Wirtschaft und Staat rekrutieren sich oft aus dieser Sozialen Lage. Ostdeutsche beklagen, dass der Anteil Ost an den Führungspositionen in Deutschland zu gering sei. Abwägung: Auch viele Westdeutsche erreichen keine Führungspositionen.

* Mit Sozialen Lagen wird die Gliederung der Bevölkerung in größere Bevölkerungsgruppen erfasst.
Kriterien für die Gliederung sind vor allem Zugehörigkeit zu Berufsgruppen, Geschlecht, Alter, Regionen.
Für die Darstellung hier wurden die 18 Sozialen Lagen zu vier Gruppen zusammengefasst.

Pohl – DKKzV- Aug 2021

Renten-anglei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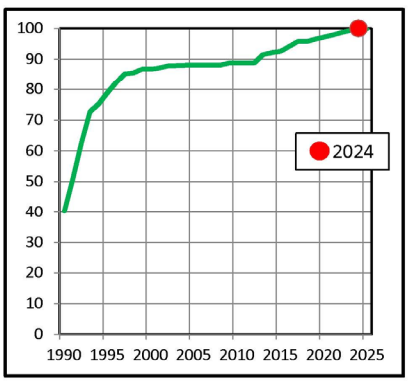
8

Die Angleichung der Renten in Ost an West: ein heikles Thema

• 1990 wurde das **Ziel** gesetzt, mit der erwarteten Angleichung der Löhne in Ost an West eine **Angleichung** der Renten zu verwirklichen (***Einigungsvertrag***, *Art. 30*).
• Die **vollständige** Angleichung der Renten wird bis **2024** vollzogen.
• Der langjährige **Rückstand** der Renten wurde (wird) in Ost oft als **Diskriminierung** empfunden. Abwägung: Die Angleichung bei den Renten ist **höher** als bei den Löhnen.
• Die **Rentenversicherung** (RV) ist in Ost defizitär. Die **Defizite** werden durch Überschüsse der RV in West ausgeglichen. Der **Finanzverbund** zwischen Regionen ist ein Element der RV in D.

Rente in Ost

West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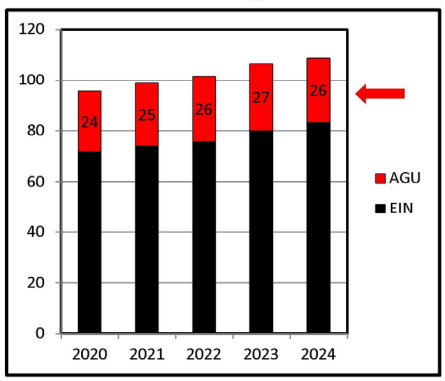
Stand der Angleichung 2020
West = 100

Renten	**97,2**
Löhne	**86,0**

Rentenversicherung in Ost

Einnahmen und Ausgaben

Vorausberechnung, Mrd Eur



EIN=Einnahmen,
AGU=Ausgabenüberschuss (Defizit)

Pohl – DKKzV- Aug 2021

Armut
Soziale Hilfen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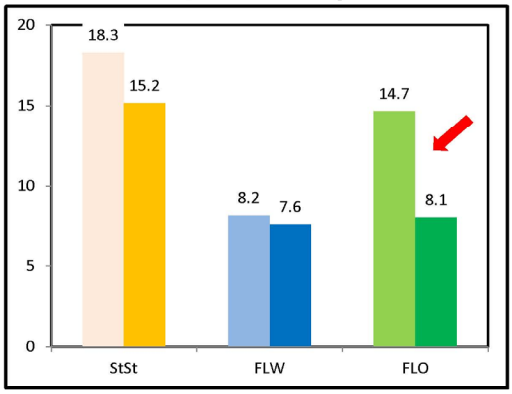
Armut - Staatliche Unterstützung von Hilfsbedürftigen: weiter erforderlich, aber kein besonderer Schwerpunkt Ost mehr

- In Deutschland benötigen 7 Mio. Menschen **finanzielle Hilfe vom Staat**, um ihren grundlegenden Lebensstandard („Existenzminimum“) sichern zu können.
- Die Abhängigkeit von Hilfen ist in Ost heute **kaum mehr höher** als in West.
- **Alte** Menschen sind in Ost sogar **weniger** auf finanzielle Hilfe angewiesen.

Vergangenheit: In der DDR waren mehr Frauen erwerbstätig als in West und haben deshalb heute höhere Rentenansprüche.
Gegenwart: In Ost sind die Mieten niedriger als in West, sodass der Bedarf an finanzieller Hilfe geringer 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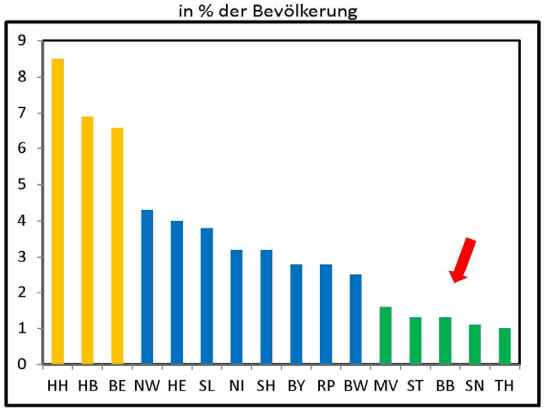
Empfänger von finanzieller Hilfe

2006 (Säulen links) und 2019 (Säulen rechts)
in % der Bevölkerung



Empfänger von finanzieller Hilfe im ALTER

in den Bundesländern 2019
in % der Bevölkerung



StSt Stadtstaaten: BE, HB, HH
FLW Flächenländer West: NW, HE, SL, NI, SH, BY, RP, BW
FLO Flächenländer Ost: MV, ST, BB, SN, TH

Pohl – DKKzV- Aug 2021

Alterung
zum Beispiel

10

Wo liegen heute die Herausforderungen für Deutsch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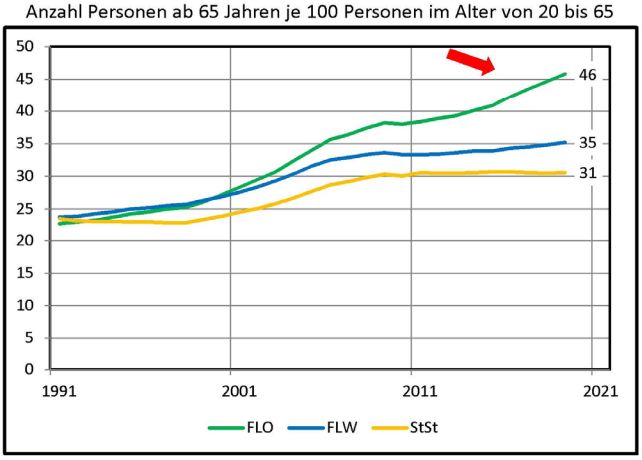
- Die **Stabilisierung des Ostens** ist **gelungen**. Der „Aufbau Ost“ spielt nun eine **geringere** Rolle. Die großen Probleme bestehen zugleich in Ost **und** West: Klimawandel, Energieversorgung, Digitalisierung, Migration, Alterung.
- Beispiel **Alterung**: Die Bevölkerung in Deutschland (Ost und West) **altert stark.**
- **Positiv** daran: Die **Lebenserwartung** der Menschen steigt (in Ost und West).
- **Problematisch** daran: Der „**Altenquotient**“ steigt auch (in Ost besonders stark).

Die Erwerbstätigen müssen immer mehr alte Menschen mitversorgen: Renten, Pflege, Gesundheitsleistungen.

- **Lösungen** wie eine weitere Anhebung des Renteneintrittsalters* sind politisch **blockiert**.

Altenquotient

Anzahl Personen ab 65 Jahren je 100 Personen im Alter von 20 bis 65



* Das Renteneintrittsalter steigt schrittweise von derzeit 65 Jahre, 9 Monate bis 2031 auf 67 Jahre.

Pohl – DKKzV- Aug 2021

1990 - 2020

Das Fazit nach 30 Jahren

- Die **Lebensverhältnisse** im Osten gleichen heute weitgehend denen im Westen.
- **Aber**: Dieses **positive** Fazit wird von vielen Ostdeutschen **nicht** geteilt.

Umfrage von 2019 - Ostdeutsche Antworten auf die Frage: *War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seit der Wiedervereinigung eher ein Erfolg oder ein Misserfolg?*	Erfolg	36 %
	Misserfolg	26 %
	Unentschieden	38 %

- Ostdeutschland hat in der öffentlichen Wahrnehmung oft noch ein **negatives Image**. Dem entgegenzuwirken, bleibt eine **gesellschaftliche** Aufgabe.

Professor (em) Dr. Dr. h.c. Rüdiger Pohl
Ehemals: Martin-Luther Universität Halle-Wittenberg
Ehemal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Ehemals: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Email: ruedipohl@hotmail.de
Abgeschlossen: 5.7.2021

MEMO.

MEMO.

SESSION 1.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Wandel der Wahrnehmung der Einheit in Ost- und Westdeutschland

SESSION 1-3.

Das ambivalente Erbe des Sozialismus – technischer Fortschritt in der DDR und dessen Rolle nach 1990 – Ergebnisse aus dem Forschungsverbund Mod-Block-DDR

Jutta Günther,
Professorin für Volkswirtschaftslehre an der Universität Bremen



Universität Bremen

Das ambivalente Erbe des Sozialismus – technischer Fortschritt in der DDR und dessen Rolle nach 1990

Ausgewählte Ergebnisse des Forschungsverbundes Mod-Block-DDR

10.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Vortrag von Prof. Dr. Jutta Günther

04. August 2021

Zentrale Frage seit 1990er Jahren …

Warum gibt es eine persistente **ökonomische Ungleichheit** (bspw. Produktivitätslück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Stand der Forschung: Strukturschwäche!

- Geringe Anzahl von **Unternehmenszentralen**
- Überwiegend **kleinteilige Unternehmensstruktur**
- Unvorteilhafte Position der Unternehmen in der **Wertschöpfungskette**, verlängerte Werkbänke (z.B. Ludwig 2015a, 2015b, 2020; Ragnitz 2019)
- Schwache industrielle **Forschungsbasis** (z.B. Eickelpasch 2015, Günther 2014, Günther et al. 2010)

3

Offene Frage

Welchen **langfristigen Einfluss** hat der Sozialismus und die Transformation auf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bis heute?

4

Förderwettbewerb des Bunde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12.06.2018 | **PRESSEMITTEILUNG: 048/2018**

Wissenslücken über die DDR schließen

Mod-Block DDR (2018 bis 202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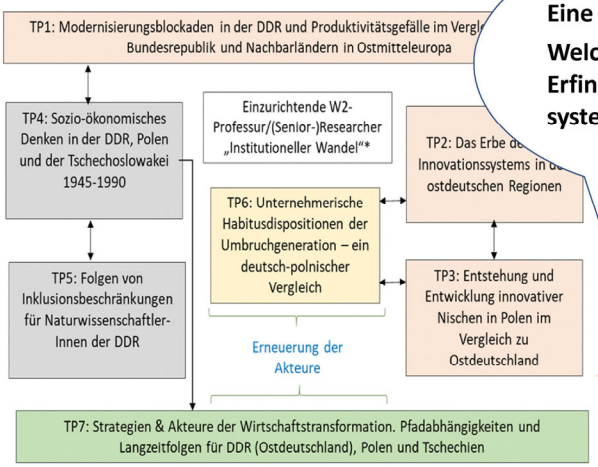
Forschungsverbund: Mod-Block-DDR

Universität Bremen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EUROPA UNIVERSITÄT VIADRINA

berlin



Eine Frage in Teilprojekt 1:

Welche Rolle spielten die Erfinder im Innovations-system der DDR?

6

Analyse des Erfinderwesens in der DDR

Auswertung von Patentdaten der DDR und BRD


Mod-Block DDR

Universität Bremen

Universalien der Innovation – Erfindertum und technischer Fortschritt in der DDR und dessen Rolle nach 1990

Empirische Befunde auf der Basis von Patentdaten – ein Diskussionsbeitr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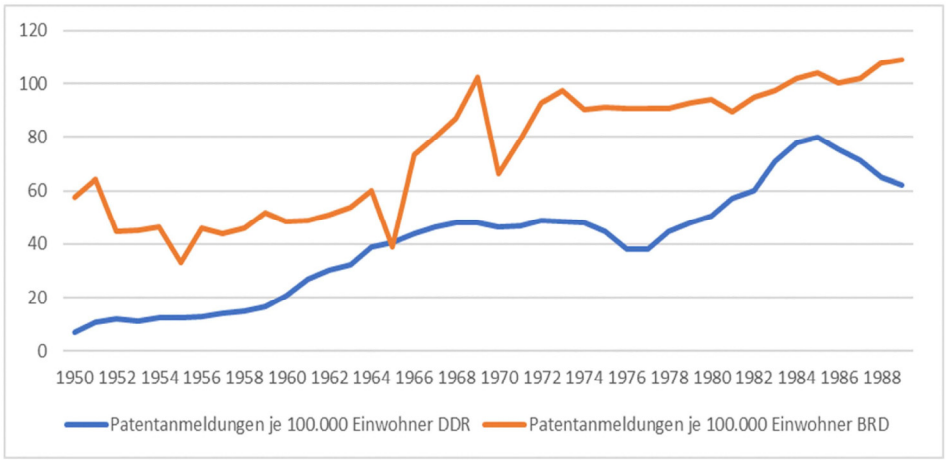
Jutta Günther, Ann Hipp und Udo Ludwig

Studie zum Download: https://media.suub.uni-bremen.de/bitstream/elib/4535/3/Universalien%20der%20Innovation_final.pdf

7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Quelle: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EPATIS), eigene Auswertung.

Durchschnittlich:

75 Patent-anmeldungen pro Jahr

41 Patent-anmeldungen pro Jahr

8

Dynamik der Patentanmeldungen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DDR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BRD
1950er Jahre		
1960er Jahre		
1970er Jahre		
1980er Jahre		
Steigerung zwischen 1950er und 1980er		

Quelle: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EPATIS), eigene Auswertung.

9

Dynamik der Patentanmeldungen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DDR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BRD
1950er Jahre	12,4	
1960er Jahre	37,5	
1970er Jahre	45,2	
1980er Jahre	67,0	
Steigerung zwischen 1950er und 1980er	54,6	

Quelle: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EPATIS), eigene Auswertung.

10

Dynamik der Patentanmeldungen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DDR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BRD
1950er Jahre	12,4	47,9
1960er Jahre	37,5	
1970er Jahre	45,2	
1980er Jahre	67,0	
Steigerung zwischen 1950er und 1980er	54,6	

Quelle: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EPATIS), eigene Auswertung.

11

Dynamik der Patentanmeldungen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DDR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BRD
1950er Jahre	12,4	47,9
1960er Jahre	37,5	64,3
1970er Jahre	45,2	88,1
1980er Jahre	67,0	100,1
Steigerung zwischen 1950er und 1980er	54,6	52,2

Quelle: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EPATIS), eigene Auswertung.

12

Dynamik der Patentanmeldungen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DDR	Durchschnittliche Anzahl Patentanmeldungen je 100.000 Einwohner pro Jahr BRD
1950er Jahre	12,4	47,9
1960er Jahre	37,5	64,3
1970er Jahre	45,2	88,1
1980er Jahre	67,0	100,1
Steigerung zwischen 1950er und 1980er	54,6	52,2

Quelle: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EPATIS), eigene Auswert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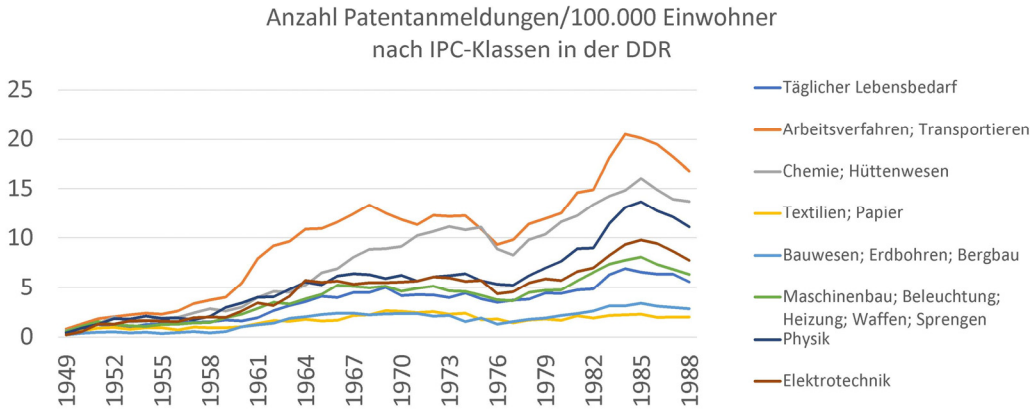
13

Technologieklassen (IPC) der Patente

- Täglicher Lebensbedarf
- Arbeitsverfahren; Transportieren
- Chemie; Hüttenwesen
- Textilien; Papier
- Bauwesen; Erdbohren; Bergbau
- Maschinenbau; Beleuchtung; Heizung; Waffen; Sprengen
- Physik
- Elektrotechnik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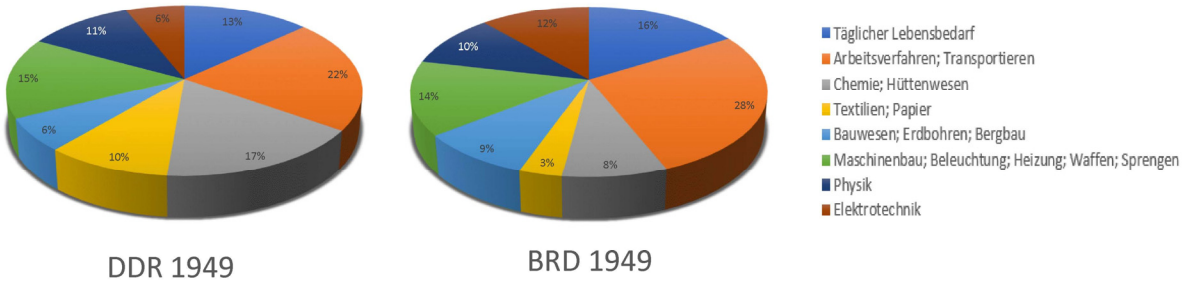
Patentanmeldungen der DDR nach Technologieklassen



Quelle: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EPATIS), eigene Auswertung.

15

Anteil der Patentanmeldungen (%) nach Technologieklassen in der DDR und der BRD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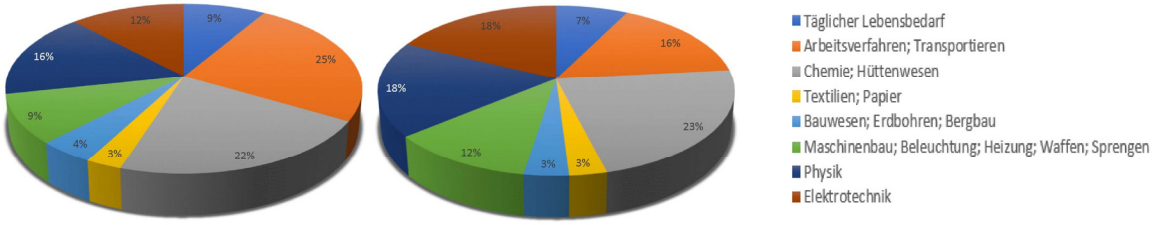
DDR 1949

BRD 1949

Quelle: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EPATIS), eigene Auswertung.

16

Anteil der Patentanmeldungen (%) nach Technologieklassen in der DDR und der BRD **1989**



DDR 1989 BRD 1989

Quelle: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EPATIS), eigene Auswertung.

17

Erfinderwesen in der DDR

- Durchgängige und zunehmende **Erfindertätigkeit** in der DDR (1949-89)
- **Patentdynamik** in der DDR und BRD nahezu gleich groß, jedoch quantitativ kein Aufholen der DDR
- Die generell **patentintensiveren Bereiche** „Chemie; Hüttenwesen“ sowie „Physik“ haben sowohl in der DDR als auch in der BRD über die Zeit an Bedeutung gewonnen.
- **Technologische Scherpunkte** (IPC) in DDR und BRD zu Beginn und zum Ende der DDR sehr ähnlich

18

Rolle nach 1990: Erfinder

Empirischer Befund: Ähnliche Schwerpunktsetzung bei den Technologiefeldern!

- **Erfinderkompetenzen und technisches Wissen** stand dem Modernisierungsprozess, insbes. den Investoren aus Westdeutschland und dem Ausland unmittelbar zur Verfügung

19

Vielen Dank!

20

Universität Bremen

Prof. Dr. Jutta Günther

Universität Bremen
Fachbereich Wirtschaftswissenschaft
Max-von-Laue-Str. 1
28359 Bremen

office-guenther@uni-bremen.de
Tel.: +49 (0)421 218-66630

Homepage des Projektes
https://www.uni-bremen.de/mod-block-ddr

Homepage der Veranstaltungsreihe
https://ost-nach-west.uni-bremen.de/

Unsere Projektarbeit in den Medien (Auswahl):
https://www.mdr.de/nachrichten/panorama/patente-ddr-erfindungen-100.html

https://www.mdr.de/nachrichten/wirtschaft/inland/uni-bremen-untersucht-ddr-patente-100.html

https://www.butenunbinnen.de/videos/sendungen/butenunbinnen-1100.html?fbclid=IwAR3xiEO_F8LwMX9N_qmHbZsrhnTmjstCe1_B4pKoy6Bx22cpFeQPYxOSCWA

21

Zitierte Literatur

Eickelpasch, A. (2015): Forschung, Entwicklung und Innovation in Ostdeutschland: Rückstand strukturell bedingt. In: DIW Wochenbericht, Vol. 82, 41, 907-918.

Günther, J.; Nulsch, N.; Urban-Thielicke, D.; Wilde, K. (2010): 20 Jahre nach dem Mauerfall: Transformation und Erneuerung des ostdeutschen Innovationssystems, In: Expertenkommission Forschung und Innovation (Hrsg.), Studien zum deutschen Innovationssystem, Nr. 16-2010, Berlin.

Günther, J. (2014): Structural change and the emergence of an innovation system – the case of East Germany. Jena: Universität Jena (Habilitationsschrift).

Günther, J.; Hipp, A.; Ludwig, U. (2020): Universalien der Innovation – Erfindertum und technischer Fortschritt in der DDR und dessen Rolle nach 1990. Forschungsbericht, DOI: 10.26092/elib/332.

Lehmann, R.; Ragnitz, J. (2019): Wie realistisch ist die Angleichung des Lebensstandards der ostdeutschen Länder an den Westen? In: ifo Dresden berichtet, 2019, 26, Nr. 6, 08-11.

Ludwig, U. (2015a): Der unvollendete Aufholprozess der ostdeutschen Wirtschaft. In: Berliner Debatte Initial 26, 2, 34-49.

Ludwig, U. (2015b): Das Dilemma der nachholenden Modernisierung der ostdeutschen Wirtschaft. In: Deutschland-Archiv online Dezember 2015.

Ludwig, U. (2020): Mikrofundierte makroökonomische Resultate der ostdeutschen Transformationswirtschaft, in: Ostdeutschland - Eine Bilanz, Halle: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S. 16-3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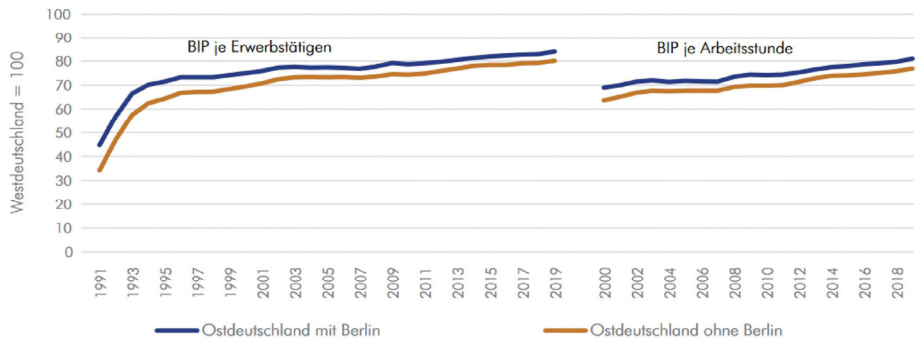
Anhang

23

Produktivität in Ostdeutschland

Bruttoinlandsprodukt (BIP) in jeweiligen Preisen je Erwerbstätigen bzw. je Arbeitsstunde

in jeweiligen Preisen, Westdeutschland = 100



Quellen: Arbeitskreis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öpfung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9. Reihe 1, Länderergebnisse Band 1. Berechnungsstand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August 2019/Februar 2020 [Revision 2019/ESVG 2010/WZ 2008], Statistisches Landesamt Baden-Württemberg, Stuttgart, März 2020, in: https://www.statistik-bw.de/VGRdL/tbls/RV2019/R1B1.zip, Zugriff am 01.04.2020; Berechnungen des IWH.

24

Quelle: IWH, https://www.iwh-halle.de/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wirtschaft_im_wandel/wiwa_2020-02_Trend.pdf

Patentda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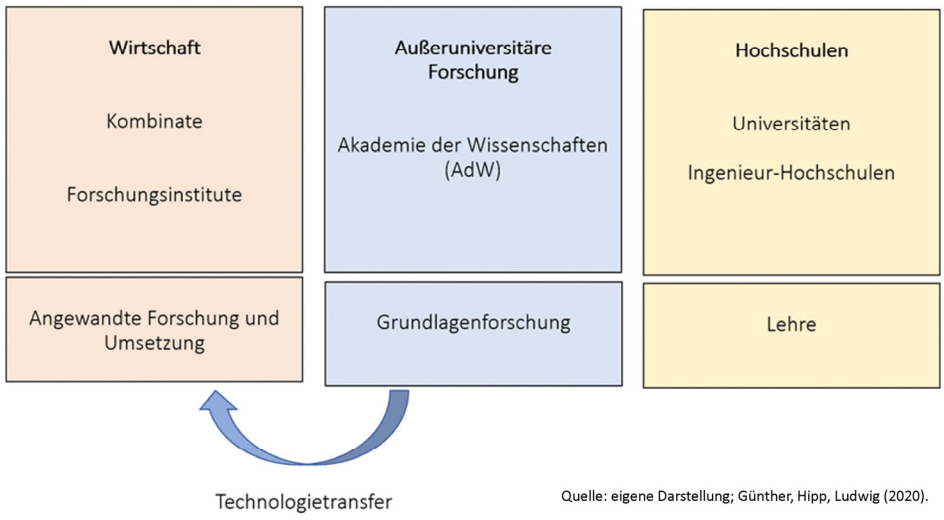
- DDR trat 1951 der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bei
- Standardisierte Verfahren für Patentierungswesen → **Vergleichbarkeit der DDR- und BRD-Patente!**
- 1990 gingen die DDR-Patente in den Bestand des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s über

→ Exklusive Patentdatenbank der DDR basierend auf DPMA (DEPATIS) zus. mit Universität Jena

Universität Bremen

25

Forschungs- und Innovationssystem der DDR



Quelle: eigene Darstellung; Günther, Hipp, Ludwig (2020).

26

Rolle nach 1990: Patente

- Einige High-Tech Erfindungen der DDR haben bis heute Bedeutung und industrielle Verwendung

Tontechnik
aus Geithain
seit 1960ern



Heute: Musikelectronic Geithain GmbH
Studiolautsprecher
Einsatz: u.a. ARD, ZDF, DLF, BBC, Japan

Kühltechnik
ehem. VEB Kühlautomat Berlin Johannisthal

Heute: Grasso GmbH/GEA



Universität Bremen

27

MEMO.

MEMO.

SESSION 2.

30 Jahre Deutsche Einheit und Lektionen für Korea

Moderation Vizeminister **Young-Jun Choi**

SESSION 2-1.

Zur Wahrnehmung der Deutschen Einheit in der Bevölkerung Ost- und Westdeutschlands heute

Joachim Ragnitz, Stellvertretender Leiter der ifo Niederlassung Dresden

SESSION 2-2.

Wahrnehmung der deutschen Einheit in Korea sowie Lektionen für Korea

(Politik·Gesellschaft)

Hak-Sung Kim, Prof. für Frieden und Sicherheit an der Chungnam Natinal University

(Wirtschaftliche Integration)

Hyung-Gon Jeong, Forscher 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SSION 2.
30 Jahre Deutsche Einheit und Lektionen für Korea

SESSION 2-1.

Zur Wahrnehmung der Deutschen Einheit in der Bevölkerung Ost- und Westdeutschlands heute

Joachim Ragnitz,
Stellvertretender Leiter der ifo Niederlassung Dresden



Prof. Dr. Joachim Ragnitz (ifo Dresden)

Zur Wahrnehmung der Deutschen Einheit in der Bevölkerung Ost- und Westdeutschlands heute

Vortrag anlässlich der 10.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1. Die deutsche Vereinigung im Jahr 1990 stand unter der unausgesprochenen Prämisse, dass sich die Denk- und Verhaltensweisen der Menschen in der DDR nur wenig von je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terscheiden würden. Zwar wurde zumindest hinter vorgehaltener Hand darüber spekuliert, dass sich in den Jahren der deutschen Teilung (1949-1990) unter beständiger staatlicher Propaganda bestimmte Sichtweisen möglicherweise unterscheiden könnten, doch wurde dies − wenn es überhaupt ernst genommen wurde − als ein eher temporäres Phänomen angesehen, das sich bei einer erwartet positiv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schnell würde auflösen lassen. Für diese Sichtweise sprach vor allem, dass in nahezu ganz Ostdeutschland westdeutsche Rundfunk- und Fernsehsender empfangen werden konnten, dass Kontakt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über die gesamte Zeit der Zweistaatlichkeit (wenn auch mit Einschränkungen) möglich waren und dass es letzten Endes ja die Bürger in der DDR gewesen waren, die mehrheitlich den Beitritt zum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System der Bundesrepublik gewünscht hatten − erkennbar z.B. am Ergebnis der Volkskammerwahlen im März 1990, die entgegen vorheriger Wahlumfragen mit einer überwältigenden Mehrheit der „Allianz für Deutschland“ unter Führung der CDU ausging. Die Einschätzung, dass die Strahlkraft (und weniger die ökonomische Potenz) des westdeutschen Systems hierfür verantwortlich war, erklärt somit, weshalb man von Seiten der westdeutschen Regierung nach 1990 darauf verzichtet hat, irgendeine Form von „politischer Bildung“ zugunsten der Bürger in den beigetretenen ostdeutschen Bundesländern vorzusehen. Umso größer war dann das Erstaunen, dass die „innere Einheit“ sich ganz offenkundig nicht so schnell einstellen wollte wie erhofft.

2. Anzeichen hier gab es allerdings schon frühzeitig, so bei den Volkskammerwahlen im Frühjahr und den Landtagswahlen und der Bundestagswahl im Herbst 1990, bei denen die PDS als Nachfolgepartei der SED zwischen 10 und 15% aller Wählerstimmen auf sich vereinigen konnte. Dies wurde aber vor allem auf Stimmen ehemaliger SED-Mitglieder und anderer systemtreuer Wählergruppen zurückgeführt und deswegen nicht allzu ernst genommen − zumal fast überall die auch bundespolitisch regierende CDU stärkste Kraft wurde und mit der Regierungsbildung in den Ländern betraut wurde. Auch die Zufriedenheit mit dem politischen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mit den Leistungen der Regierung war schon zu Beginn der 1990er Jahre im Osten deutlich schwächer ausgeprägt als im Westen, die Zustimmung zur Idee des Sozialismus als Gesellschaftsform mit rund 75% der ostdeutschen Befragten weitaus stärker ausgeprägt als bei den Westdeutschen (rund 40%) (Ergebnisse des ALLBUS 1991). Als sich der „Aufbau Ost“ nicht so positiv entwickelte wie erwartet und das Gefühl einer „Kolonialisierung“ durch den Westen zunahm, konnte deshalb - nur folgerichtig - die PDS sowohl bei den Landtagswahlen wie auch bei der Bundestagswahl 1994 in allen ostdeutschen Ländern deutlich zulegen, blieb aber weiterhin von der Regierungsbildung ausgeschlossen. All dies hätte ein Warnzeichen sein können, wurde aber von der Politik offenkundig nicht als ein solches wahrgenommen. Vielmehr konzentrierte sich die Bundesregierung darauf, durch weitere massive staatliche Hilfen den Wiederaufbau der Wirtschaft voranzubringen, in der Hoffnung darauf, dass dies auch zu einer stärkeren Zustimmung zu den grundlegenden Institutionen und Werten der westdeutsch geprägten Gesellschaft sowie zur staatlichen Einheit würde beitragen können.

3. Die öffentliche Wahrnehmung scheint von der Vorstellung geprägt, dass sich diese Hoffnung nur in Ansätzen erfüllt hat und dass die Einstellungsunterschiede zwischen Ostdeutschland und Westdeutschland sich als zunehmend persistent erweisen. So konstatiert die Bundesregierung (Jahresbericht Deutsche Einheit 2021, S. 40), dass „für die neuen Länder (…) durchgängig skeptischere, distanziertere und auch kritischer ausgeprägte Grundeinstellungen gegenüber der Politik“ kennzeichnend seien und dass sich „ein Drittel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in den neuen Ländern als Verlierer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betrachteten (Westdeutschland: 25%) (Jahresbericht Deutsche Einheit 2021, S. 43). Vielfach wird in diesem Zusammenhang von einer fortbestehenden „Mauer in den Köpfen“ gesprochen. Dass eine Mehrheit der Menschen in Ostdeutschland sich als „Bürger zweiter Klasse“ fühlen würde, wie in der Öffentlichkeit häufig vermutet, trifft jedoch so nicht zu (ebd., S. 44); diese Aussage wird nur von einem Drittel der Bevölkerung geteilt, zumeist wohl von jenen, die eigene negative Transformationserfahrungen gemacht haben. Allerdings zeigt es sich, dass populistische Parteien am linken und rechten Rand des Parteienspektrums im Osten eine stärkere Zustimmung erreichen als im Westen, was zunehmend eine Belastung für eine demokratische Regierungsbildung darstellt. Es erscheint dennoch voreilig, hieraus die These abzuleiten, dass ein erheblicher Teil der Ostdeutschen aufgrund ihrer Sozialisierung in der DDR für die Demokratie verloren wären. Vielmehr dürfte es sich dabei um ein Protestwahlverhalten zu handeln; zumindest zum Teil scheint die verbreitete Unzufriedenheit in Ostdeutschland nämlich das Agieren der Politik bei den großen politischen Herausforderungen der jüngeren Vergangenheit − Flüchtlingszuwanderung 2015, Corona-Krise 2020 − zu reflektieren und ist insoweit nicht als Zeichen mangelnder Demokratiefähigkeit zu interpretieren.

4. Im zeitlichen Vergleich ist bei vielen Facetten von Einstellungen und Normen eine langsame, aber doch weitgehend kontinuierliche Annäherung Ostdeutschlands an Westdeutschland festzustellen. Die verbreitete Vorstellung, dass sich hier ein schwer beherrschbares gesellschaftliches Konfliktpotential aufbaut, ist insoweit durch repräsentative Umfragen nicht gedeckt, sondern eher Ergebnisse selektiver Wahrnehmung in diversen „Blasen“ sozialer Netzwerke. Dennoch sind auch 30 Jahre nach der Vereinigung im Durchschnitt der Bevölkerung noch eine Reihe von durchaus signifikanten Einstellungsunterschieden zwischen den beiden Landesteilen feststellbar. Der ALLBUS 2018 (die 2020er Welle musste aufgrund der Corona-Pandemie verschoben werden) zeigt zum Beispiel eine stärkere Betonung sozialpolitischer Umverteilungsziele im Osten, eine generell höhere Skepsis gegenüber Ausländern und Flüchtlingen, und auch die grundsätzliche Zustimmung zum Sozialismus als Gesellschaftsordnung ist nach wie vor deutlich höher als im Westteil des Landes.

5. Ein erster Grund hierfür dürfte es sein, dass auch 30 Jahre nach der Vereinigung immer noch große wirtschaftliche Unterschied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bestehen: Das Wohlstandsniveau, gemessen am Bruttoinlandsprodukt je Einwohner, liegt im Osten bei etwas mehr als 70% des westdeutschen Niveaus, die Löhne und die Verfügbaren Einkommen bei etwa 85%. Auch die Arbeitslosigkeit ist noch etwas höher als im Westen. Zurückzuführen ist dies im Wesentlichen auf strukturelle Unterschiede zwischen beiden Landesteilen (wie z.B. das Fehlen leistungsfähiger Großunternehmen oder auch die Dominanz eher ländlich geprägter Regionen). Insoweit besteht kaum ein Unterschied zu ähnlich strukturierten Regionen im Westen. Dennoch ist in der öffentlichen Wahrnehmung das Bild entstanden, dass es sich hierbei um konstante und sich verfestigende ökonomische Unterschied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handelt. Sie werden gerade im Osten oftmals als Ungerechtigkeit oder gar als systematische Benachteiligung wahrgenommen, insbesondere auch vor dem Hintergrund negativer individueller Transformationserfahrungen. Dies wiederum äußert sich in verbreiteter Unzufriedenheit nicht nur mit den ökonomischen, sondern auch

den politischen Verhältnissen. Im Ergebnis führt dies dazu, dass eine große Mehrheit der Befragten in Ostdeutschland (77%)[1] der Meinung ist, dass die Wiedervereinigung mehr Vorteile für den Westen gebracht habe (in Westdeutschland sind demgegenüber nur 57% dieser Meinung). Spiegelbildlich dazu betrachten immer noch 33%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die Wiedervereinigung als nachteilig für den Osten (Westdeutschland: 17%).[2] Dennoch würde auch in Ostdeutschland nur eine verschwindend kleine Minderheit zurück zu den (politischen) Verhältnissen des Jahres 1989 wollen (zumal dies ohnehin keine realistische Option ist). Die Vereinigung wird insoweit nicht grundsätzlich in Frage gestellt, zum Teil aber die Funktionsmechanismen der Demokratie, wie sie in Deutschland gegeben sind.

6. Ein weiterer Grund für Unterschiede in den (politischen) Einstellungen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könnte aber auch in der abweichenden Sozialisation der Bevölkerung liegen. Der weit überwiegende Teil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hat zumindest die Jugend in der DDR verbracht und war insoweit den Einflüssen der staatlicherseits als verbindlich vorgegebenen „Erziehung zur sozialistischen Persönlichkeit“ ausgesetzt. Eine bis heute nachwirkende kritische Distanz zu Unternehmertum und freien Märkten einerseits und eine stärkere Befürwortung von sozialpolitischen Zielen und staatlichen Eingriffe in das Wirtschaftsleben andererseits scheint die Folge hiervon zu sein, ebenso wie eine in Teilen der Gesellschaft bestehende Tendenz zu autoritären Strukturen. Es ist nicht auszuschließen, dass dies sich wiederum über Elternhaus und Schule auch auf die Generation der Kinder übertragen hat.

   Analysen des ifo Instituts zeigen indes, dass ein nicht unbeträchtlicher Teil der Einstellungsunterschied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auf die unterschiedliche Zusammensetzung der Bevölkerung zurückzuführen ist. Im Osten sind ältere, stark durch die DDR-Historie geprägte Bevölkerungsgruppen wegen der selektiven Abwanderung und der niedrigen Geburtenraten nach der Vereinigung anteilig stärker vertreten als im Westen, so dass diese einen höheren Einfluss auf den Durchschnitt gemessener Einstellungen haben. Dies aber sind die Gruppen, die stark durch die DDR geprägt sind und darüber hinaus durch die Transformation vo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enormem Anpassungsdruck ausgesetzt waren. Bei jüngeren Bevölkerungsgruppen, die den größten Teil ihres Lebens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verbracht haben, sind hingegen in allen untersuchten Kategorien unterschiedlicher Einstellungen (soziale Sphäre, politische Auffassungen, ökonomische Situation und familiale Sphäre) nur noch geringe Unterschiede in den Einstellungen festzustellen. Dies gilt insbesondere für Personen, die beispielsweise aufgrund eines temporären Aufenthalts in anderen Teilen Deutschlands „multikulturelle Erfahrungen“ aufweisen, die in Ostdeutschland aufgrund eines niedrigen Ausländeranteils, aber auch aufgrund eines „Elitenverlusts“ seit den frühen 1990er Jahren kaum gewonnen werden können. Zwar gibt es auch hier teilweise eine negative Rezeption der „Wendejahre“ (obwohl sie diese häufig nicht bewusst miterlebt haben), die Ausgestaltung des gesamtdeutsch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ystems werden hier aber im Regelfall deutlich positiver bewertet als bei den älteren Bevölkerungsgruppen. Insoweit scheint es (auch) eine Frage der Zeit zu sein, bis die „Mauer in den Köpfen“ abgebaut sein wird.

7. Auch wenn im Falle Deutschlands eher die westdeutschen Sichtweisen und Einstellungen als „Norm“ gelten (unter anderem, weil mit der Vereinigung das ostdeutsche System von Wirtschaft, Gesellschaft und Politik durch das westdeutsche System ersetzt wurde, während sich in Westdeutschland so gut wie nichts änderte), ist in Teilbereichen auch eine Anpassung westdeutscher

1) Im Jahr 1991 waren erst 62% der Befragten in Ostdeutschland dieser Ansicht
2) Im Jahr 1991 glaubten dies sogar noch 62% der Bevölkerung in Ostdeutschland.

Normen und Verhaltensweisen an ostdeutsche Vorbilder festzustellen.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ie „familiale“ Sphäre des Zusammenlebens im persönlichen Bereich, also zum Beispiel mit Blick auf die Erwerbstätigkeit von Frauen oder zur Arbeitsteilung im Haushalt. Allerdings ist unklar, ob es sich dabei tatsächlich um die Übernahme ostdeutscher Einstellungen durch die westdeutsche Bevölkerung handelt oder um allgemeine gesellschaftspolitische Trends handelt, die unter anderem eine Folge der Bildungsexpansion der 70er und 80er Jahre sein könnten.

8. Aus den genannten Befunden lässt sich die Schlussfolgerung ziehen, dass selbst unter günstigen Voraussetzungen (die deutsche Einheit muss trotz aller fortbestehenden ökonomischen Unterschiede als Erfolg gesehen werden) die Anpassung von Sichtweisen ein langwieriger Prozess ist, der sehr viel mehr Zeit erfordert als die unmittelbare Transformation einer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ordnung. Dies gilt insbesondere für solche Einstellungen, die in Schule und Elternhaus erworben wurden und deswegen lange nachwirken. Zu vermuten ist, dass dies im Falle einer möglichen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noch schwerwiegender sein wird als im Falle der deutschen Vereinigung, weil die Zeit im „anderen“ System nicht nur deutlich länger gewesen sein wird, sondern auch weil die Indoktrination durch Partei und Staat und Abschottung gegenüber dem freiheitlichen Landesteil in Nordkorea weitaus stärker zu sein scheinen als es in der DDR der Fall gewesen ist. Dies spricht dafür, bei einer möglichen koreanischen Vereinigung nicht nur auf die Überzeugungskraft ökonomischer Angleichungsprozesse zu setzen (zumal diese im Zweifel länger dauern dürften als im Falle Ostdeutschlands), sondern auch Fragen der politischen Bildung ein besonderes Augenmerk zu widmen.

MEMO.

MEMO.

SESSION 2.
30 Jahre Deutsche Einheit und Lektionen für Korea

SESSION 2-2.

Wahrnehmung der deutschen Einheit in Korea sowie Lektionen für Korea

(Politik·Gesellschaft)

Hak-Sung Kim,
Prof. für Frieden und Sicherheit an der Chungnam Natinal University



Auswertung zum 30. Jahrestag der Deutschen Einheit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Politik und Gesellschaft

Prof. Dr. Kim, Hak-S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 Problemstellung

Südkoreaner verstehen die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auf verschiedene Weise. Insbesondere seit der Beendigung des Kalten Krieges sind unsere Interpretationen über die Deutschlandpolitik der BRD und die deutsche Einigungsvorgänge gelegentlich sogar gegensätzlich. Jede Seite in den innergesellschaftlichen Gegensätzen (aufgrund des sog. Süd-Süd-Konflikts) macht den deutschen Fall der Teilung und Einhet nicht selten zur Rechtfertigung ihrer Nordpolitischen Richtlinien nützlich. Natürlich waren die Triebkräfte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vielerlei und es gibt in Deutschland auch unterschiedliche Ansichten und Bewertungen über die Wiedervereinigung. Jedoch machen die arbiträren Interpretationen es schwierig, sinnvolle Implikationen aus der deutschen Erfahrung zu ziehen.

Es gibt zwar Unterschiede zwischen deutschen und koreanischen Teilungssituationen, aber der deutsche Fall kann als ein Modell zur friedlichen Wiedervereinigung gelten − insbesondere sowohl um nach den Bedingungen für die Überwindung der Teilung zu suchen, als auch um über Probleme der inneren Einheit nach der Wiedervereinigung konkret nachzudenken. In diesem Sinne ist es erforderlich, zunächst die Grundhaltung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zur deutschen Erfahrung zu diskutieren.

Um angemessene Implikationen aus dem Fall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zu ziehen, müssen vor allem die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wischen der koreanischen und deutschen Teilung umfassend berücksichtigt werden. Insbesondere sollte die gegenwärtige Situation der koreanischen Halbinsel, worauf die Voraussetzungen zur Überwindung der Teilung überhaupt noch nicht erfüllt sind, in Erwägung gezogen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es wichtig,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Teiung richtig zu verstehen. Wenn wir auf die engen Zusammenhänge zwischen der Deutschlandpolitik der BRD und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Rücksicht nehmen, können wir von der Vorgängen der inneren Einheit Deuschlands diejenige Implikation, welche Richtung unsere aktuelle Nordpolitik einschlagen sollte, herausziehen. Vor allem bei der Suche nach Alternativen und Lösungen für die nach der Vereinigung auftretenden Probleme (die sog. Nachwirkungen der Wiedervereinigung) können nützliche Informationen gewonnen werden. Angesichts der ungewissen Zukunft bezüglich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ist es natürlich schwierig, sicher sagen zu können, dass die deutschen Erfahrungen eins zu eins auf die koreanische Halbinsel übertragbar sind. Daher ist es sinnlos, die deutsche Erfahrung so zu akzeptieren, wie sie ist. Bemühungen um eine kreative Nutzung sind unerlässlich.

Darüber hinaus gilt es, die Haltung beizubehalten, die deutsche Eihneit nicht als ein Ergebnis

sondern eher als Prozesse zu verstehen. Dies liegt grundsätzlich an der unterschiedlichen Teilungsverhältnissen zwischen Deutschland und der koreanischen Halbinsel. Wenn man die erfolgreichen Erfahrungen Deutschlands, ohne die Prozesse zu verstehen, auf die koreanische Halbinsel anwendet, ist es aufgrund der unterschiedlichen Realität der Teilung schwierig, sowohl die gleichen bzw. erfolgreichen Ergebnisse zu erwarten, als auch sinnvolle Implikationen aus den deutschen Erfahrungen zu gewinnen. Konzentriert man sich nur auf das Ergebnis, nämlich die Verwirklichung der Wiedervereinigung, werden sich meistens große Diskurse und Prinzipien vordrängen. Natürlich sind diese nicht unwichtig, aber sie sind noch sinnvoller in einem Kontext, wenn sie von praktischen Lösungen begleitet werden. Wenn wir auf praktikabele Handlungen achten, kann die Bedeutung des Prozesses nicht genug betont werden, vor allem weil spezifische Probleme - insbesondere Probleme, die im Falle einer friedlichen Wiedervereinigung auftreten können - im Prozesse der innern Einheit des vereinten Deutschlands sehr deutlich auftraten.

2. 30 Jahre deutsche Einheit – kurze Auswertung im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Bereich

In ihrer Rede anlässlich des Festakts zum 29. Tag der Deutschen Einheit 2019 sagte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Die deutsche Einheit ist kein Zustand, einmal vollendet und abgeschlossen, sondern ein fortwährender Prozess.” Bis heute ist die innere Eihneit noch nicht vollzogen. Diese Tatsache zeigt sich nicht nur in den statistischen Zahlen, die die Unterschiede in der Wirtschaftskraft und den sozioökonomischen Bedingungen zwischen Ost und West widerspiegeln, sondern auch in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Themen wie Wahlergebnisse und politischer Kultur. Die Bundesregierung und die Gesellschaft versuchen trotz der Schwierigkeiten der inneren Einheit, die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Regionen zu verringern, wodurch das Konfliktpotenzial zwischen den Regionen zwar gemildert wurde, aber die politischen und sozialen Unterschiede scheinen nicht leicht überwindbar zu sein.

2.1. Innere Einheit auf politischer Ebene

Nach der Wiedervereinigung unterschied sich die deutsche politische Ordnung deutlich von der des ehemaligen Westdeutschlands. Obwohl die Grundordn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und der Marktwirtschaft des Westens beibehalten und in der DDR akzeptiert wurde, hatte das Ergebnis der Wiedervereinigung auch für Westdeutschland große Auswirkungen. Deutschland überarbeitete nach der Wiedervereinigung das Grundgesetz, um den Veränderungen Rechnung zu tragen, aber es gab auch einen großen Wandel in der realen Politik. Wie man <Tabelle 1> entnehmen kann, hat sich das Parteiensystem in der ehemalig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ändert und die Linkspartei hat bemerkenswerte Fortschritte gemacht. Sie gewann nicht nur mehr und mehr Anhänger im Osten, sondern baute in den 2000er Jahren auch ihren Einfluss im Westen aus. Zudem machte die rechtsextreme Partei (AfD) bei den Bundestagswahlen 2013 und 2017 beachtliche Fortschritte. Die rapide zugenommene Zahl der Flüchtlinge und Einwanderer insbesondere aus der islamischen Region führten dazu, dass rechtsextreme Ideologien wie Nationalismus und Anti-Islamismus Fuß fassen konnten.

〈Tabelle 1〉 Bundestagswahlergebnisse der ost- und westdeutschen Regionen seit der Wiedervereinigung (Zweitstimmenanteil, %)

	SPD	CDU	CSU	Bündnis 90/Grüne	FDP	PDS/Die Linke	Rechtsextreme Parteien*	Sonstige	Beteiligungsrate
ehem. Westdeutschland und Westberlin									
1990	35,7	35,5	8,8	4,8	10,6	0,3	2,6	1,7	78,6
1994	37,5	33,2	8,9	7,9	7,7	1,0	2,0	1,9	80,5
1998	42,3	28,7	8,4	7,3	7,0	1,2	2,8	2,4	82,8
2002	38,3	29,8	11,0	9,4	7,6	1,1	0,9	1,9	80,6
2005	35,1	28,4	9,1	8,8	10,2	4,9	1,7	1,8	78,5
2009	24,1	26,7	7,9	11,5	15,4	8,3	1,6	4,5	72,2
ehem. Ostdeutschland und Ostberlin									
1990	24,3	41,8	-	6,2	12,9	11,1	1,6	2,1	74,5
1994	31,5	38,5	-	4,3	3,5	19,8	1,3	1,1	72,6
1998	35,1	27,3	-	4,1	3,3	21,6	5,0	3,6	80,0
2002	39,7	28,3	-	4,7	6,4	16,9	1,7	2,3	72,8
2005	30,4	25,3	–	5,2	8,0	25,3	4,0	1,8	74,3
2009	17,9	29,8	-	6,8	10,6	28,5	3,3	3,1	64,7

* Deutsche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NPD) + Republikanische Partei (REP) + Deutsche Nationale Union (DVU)

〈Tabelle 2〉 Bundestagswahl 2013 & 2017 (Zweitstimmenanteil, %)

	CDU/ CSU	SPD	FDP	Die Linke	Grüne	AfD	Sonstige
2017	33	20,5	10,7	9,2	8,9	12,6	5,0
2013	41,5	25,7	4,8	8,6	8,4	4,7	6,3



Der Aufstieg der Linkspartei und der Machtzuwachs der rechtsextremen seit 2013 sind deutschlandweit Phänomene, aber die Tatsache, dass es einen großen Unterschied zwischen Ost und West gibt, sollte in Bezug auf Integration nicht übersehen werden. Wie die obige Abbildung zeigt, erreicht die AfD in Ostdeutschland im Schnitt doppelt so hohe Stimmanteile wie im Westen.

Neben den oben beschriebenen Wahlergebnissen zeigen mehrere Studien Unterschiede in der Wahrnehmung zur Demokratie. Obwohl die allgemeine Unterstützung im Laufe der Zeit zunimmt, zeigt der Osten eine relativ geringe Unterstützung für die Demokratie im Vergleich zum Westen (80~90% in Westdeutschland, 30~80% in Ostdeutschland). Dies kann nicht allein auf das Erbe der sozialistischen Kultur zurückgeführt werden. Der Grund dafür, dass sich ein solcher Trend auch bei der jüngeren Generation zeigt, liegt darin, dass sie aufgrund der Schwierigkeiten und Enttäuschungen bei den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kulturellen Anpassungen im Prozess des Systemübergangs nach der Wiedervereinigung mit dem neuen System des vereinten Deutschlands unzufrieden waren.

Das Gefühl der politischen und sozialen Benachteiligung der DDR-Bürger während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war ein wichtiger Faktor für die wachsende Unterstützung für linke und rechtsextreme Parteien im Osten. Beispielsweise waren am Anfang der Wiedervereinigung die Verwaltungs- und Rechtssysteme der DDR sowie die hochrangigen Verwalter öffentlicher Einrichtungen überwiegend von Westdeutschen besetzt. Darüber hinaus hat es bei der Vergangenheitsaufklärung in der DDR und vor allem bei der Verarbeitung der Stasi-Unterlagen ungewollt zu Feindseligkeiten und gegenseitigem Misstrauen unter den Bewohnern der DDR geführt. Gegenseitiges Misstrauen verstärkte die soziale und psychologische Angst sowie das Problem der Arbeitslosigkeit und der Werteverwirrung, wodurch Kriminalität stieg und Ausländerfeindlichkeit rechtsextremer Kräfte zunahm.

Als Reaktion haben Regierung und Gesellschaft viele Anstrengungen unternommen, um die Unterstützung für die Demokratie und das institutionelle Vertrauen des Ostens zu gewinnen. Beispielsweise gab es nach und nach mehr große ostdeutsche Politiker in der Bundesregierung und im Parlament. Viele Politiker aus der DDR, darunter Bundeskanzlerin Merkel, Bundespräsident Gauck und der ehemalige Bundestagspräsident Thierse waren auf Bundesebene aktiv, wodurch die Beschwerden des Ostens etwas abgemildert werden konnten. Darüber hinaus war es auf Landes- und Kommunalebene möglich, dass die politischen Forderungen der DDR-Bürger durch den Vormarsch der Linken stärker als in der Vergangenheit widergespiegelt werden konnten. Auch im Hinblick auf die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sind Stasi-Unterlagen im vereinten Deutschland noch immer ein heißes Eisen, aber es wird eine systematische und kontinuierliche Aufarbeitung nach dem Stasi-Unterlagen-Gesetz (StUG) durchgeführt, die im politischen Sinne von den Bewohnern der DDR unterstützt wird. Darüber hinaus betonte die Bundesregierung eine faire Bewertung, Rehabilitierung und Entschädigung der Verfolgten durch das ostdeutsche Regime und nicht eine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die sich lediglich auf die juristische Bestrafung konzentriert. Des Weiteren ergreift die Bundesregierung im 21. Jahrhundert intensiv Maßnahmen, um Demokratie zu fördern und dem Extremismus aktiv zu begegnen. Beispielsweise hat das Bundesinnenministerium im Jahr 2000 das Bündnis für Demokratie und Toleranz - gegen Extremismus und Gewalt (BfDT) gegründet, um zivilgesellschaftliches, demokratieförderndes Engagement zu stärken.

Dank dieser Bemühungen bleibt der Ost-West-Unterschied zwischen Anhängern der linken und rechtsextremen Parteien auf einem konstanten Niveau. Es ist jedoch nicht zu leugnen, dass die politischen und soziokulturellen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Regionen das Endprodukt der Wiedervereinigung ist. Der Aufstieg der linken und rechtsextremen Parteien hängt jedoch eng mit der Einwanderungs- und Wirtschaftspolitik sowie der Vertiefung und Erweiterung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zusammen, weshalb er nicht nur als Problem der Ost-West-Integration, sondern als eines der allgemeinen politischen und sozialen Integration zu verstehen ist.

2.2. Innere Einheit auf soziokultureller Ebene

Die Schwierigkeiten der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Integration in einem vereinten Deutschland gehen über das Problem des Systems selbst hinaus - es handelt sich grundsätzlich um Probleme der sozialen und kulturellen Integration wie Werte, Normen, Orientierung und Emotionen von Menschen. Da der deutsche Wiedervereinigungsprozess völlig unerwartet kam und dabei der institutionellen Integration Vorrang gegeben wurde, blieb keine Zeit, sich eingehend mit der soziokulturellen Integration auseinanderzusetzen. Tatsächlich erfordert die kulturelle Integration in einer Gesellschaft, deren Mitglieder lange an unterschiedliche Systeme gewöhnt waren, viel Zeit.

Auch in dieser Situation ergriff die Bundesregierung des vereinten Deutschlands alle verfügbaren Maßnahmen zur Integration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Kultur Ost- und Westdeutschlands. Vor allem sollte das gegenseitige Verständnis durch den Ausbau der Kommunikationsmöglichkeiten zwischen Ost und West erweitert werden. Infolgedessen wurden die Schwesternschaften auf verschiedene Bereiche über die Kommunalverwaltungen hinaus angewendet. So wurden zum Beispiel westdeutsche Experten in jedem Bereich zum Systemwechsel an ostdeutsche Partnerinstitutionen entsandt und dabei die Kommunikation zwischen den Einwohnern beider Deutschlands ausgebaut. Durch diesen Prozess erwarteten die Bundesregierung und die Führungskräfte Westdeutschlands, dass sich der Osten schrittweise an das neue System anpassen würde. Nach dem Abklingen des Wiedervereinigungsjubels begannen die Bewohner der DDR jedoch, die Schwierigkeiten der kulturellen Anpassung an das neue System und ihre Unzufriedenheit mit der Benachteiligung bezüglich der politischen und sozioökonomischen Bedingungen auszudrücken. Schwierig genug war es, die aktuellen Probleme auf politischer und sozioökonomischer Ebene zu lösen - politische Maßnahmen zu finden, die Gedanken und Gefühle verändern können war noch schwieriger.

Zunächst einmal veröffentlichte die Bundesregierung seit Ende der 1990er Jahre keine Statistiken mehr, die die Unterschiede zwischen Ost und West aufzeigten, da die soziale Integration durch das Hervorheben von Unterschieden erschwert werden konnte. Seitdem werden vor allem von privaten Instituten Statistiken und Bewusstseinserhebungen zur Integration veröffentlicht; seit Anfang des 21. Jahrhunderts werden Forschungen seitens der ehemaligen DDR durchgeführt, um die Situation zu diagnostizieren und zu behandeln.

Darüber hinaus half die Bundesregierung den Bürgern, das neue System zu verstehen, indem sie die politische Bildung ausbaute und förderte, die in der Vergangenheit maßgeblich zur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und zur Verankerung der Demokratie in Westdeutschland beigetragen hat. Die Hauptaufgab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 besteht nicht nur darin, den Bewohnern der DDR Wissen zum Verständnis des neuen Systems zu vermitteln, sondern auch kontinuierlich

Bücher zu veröffentlichen und Veranstaltungen zu organisieren, um das gegenseitige Verständnis zu fördern. Ab dem 21. Jahrhundert begann die BpB historische Daten zur Geschichte der DDR, zur Teilung Deutschlands und zur Illegalität der Kommunistischen Partei Deutschlands (KPD) über das Internet bereitzustellen. Ziel ist es, in einem historischen Kontext die Werte Freiheit, Demokratie und Achtung der Menschenrechte der jungen Generation verstärkt zu vermitteln, die das geteilte Deutschland nicht erlebt hatten.

Trotz der Bemühungen der Bundesregierung war es schwierig, in kurzer Zeit eine politische, soziale und kulturelle Integration zu erreichen. Wie bereits erwähnt, manifestierten sich die Schwierigkeiten der soziokulturellen Integration politisch in der Wiederbelebung der Demokratischen Partei, der Expansion der Linkspartei und der rechtsextremen Kräfte und ab Mitte der 90er Jahre trat das Phänomen der Ostalgie massiv in Erscheinung, das das Leben in der DDR verklärt. Ostalgi begegnete man nicht nur im Alltag, sondern auch in den Gedanken bzw. Denkweisen der Menschen. Laut einer Umfrage aus dem Jahr 2008 standen rund 57% der DDR-Bürger der sozialistischen Ideologie der DDR positiv gegenüber, lediglich 15% der Einwohner lehnten sie ab. Im Vergleich zu den Ergebnissen auf der westlichen Seite ist dies überraschend: nur 11% der Bewohner der ehemalig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werteten sie positiv, etwa 67 % waren dagegen.

Für die DDR-Bürger ist der Wert Ostdeutschlands eine Frage des Selbstwertgefühls, denn er ist untrennbar mit dem beschrittenen Weg verbunden. Mit anderen Worten, es ist für Ostdeutsche schwer zu akzeptieren, dass Westdeutschland bei allem gut und Ostdeutschland bei allem schlecht war. Allerdings sollte man bedenken, dass die von den Ostdeutschen positiv bewertete sozialistische Ideologie sich nicht einfach dem Liberalismus entgegenstellt - sie ist eher tief verbunden mit der emotionalen Solidarität, an die sie in der Vergangenheit gewohnt waren: das Wir-Gefühl.

Die Ostdeutschen weigerten sich, sich einseitig in das System Westdeutschlands assimilieren zu lassen. Große Verwirrung herrschte in Bezug auf ihre Gruppenidentität durch die plötzliche Wiedervereinigung und Systemintegration und eine hybride Kultur entstand, als sie das westdeutsche System annahmen. Mitte der 1990er Jahre stieg die Unzufriedenheit mit der Systemintegration und ein neues Selbstbewusstsein über ihre kollektive Identität der DDR entwickelte sich. Als Ergebnis bildete sich allmählich eine einzigartige “Teilkultur” im Osten. Diese zeigt nicht nur einen deutlichen Unterschied zum Sozial- und Kulturkreis der ehemaligen Bundesrepublik, sondern trat auch als “Avantgarde” in die kulturelle Öffentlichkeit des vereinten Deutschlands ein. Unter diesen Umständen bewegen sich die Bundesregierung und die Intellektuellen in Westdeutschland in Richtung einer Anerkennung kultureller Vielfalt und Unterschiede und erkennen, dass die vage Erwartung einer Assimilation der ostdeutschen Gesellschaft im Integrationsprozess ein Fehler war. In diesem Zusammenhang unterstützt die Bundesregierung auch die Erneuerung und den Erhalt der Kulturgüter der DDR.

Kurzum, die Bewohner Ostdeutschlands stärken ihre regionale kollektive Identität auf Basis der Ostalgi. Die Frage, ob diese kollektive Identität mit der nationalen Identität Deutschlands koexistieren kann, ohne mit ihr in Konflikt zu geraten, wird der Schlüssel zur soziokulturellen Integration sein. Im Allgemeinen ist es ausreichend, wenn die mehrschichtige Gruppenidentität bzw. mehrfache Identität anerkannt wird. Angesichts der starken Dezentralisierung und der starken lokalen Kultur Deutschlands aufgrund der sehr späten Geburt des Nationalstaats kann darüber hinaus die Aufrechterhaltung der nationalen Identität bei gleichzeitiger Koexistenz von Subkulturen eine realistische Alternative sein.

3. Implikationen

Um auf den inneren Integrationsprozess eines vereinten Deutschlands in den letzten 30 Jahren zurückzublicken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zu finden, könnten zwei Fragen hilfreich sein. Erstens, was können wir in der gegenwärtigen Phase der Wiedervereinigungsvorbereitungen tun, insbesondere um die Schwierigkeiten der politischen, gesellschaftlichen und kulturellen Integration zu minimieren? Zweitens, welche Punkte müssen beachtet werden, um die innere Einheit zum Zeitpunkt der Vereinigung effizient zu fördern?

Als Antwort zur ersten Frage, wäre es wichtig, geduldig mittel- bis langfristige Wiedervereinigungsziele zu setzen. Natürlich sollte man auf die Möglichkeit einer plötzlichen Wiedervereinigung vorbereitet sein. Diese beiden politischen Aufgaben unterscheiden sich jedoch keineswegs. Die notwendigen Vorbereitungen auf einen Notfall können nämlich auch bei den langfristigen Zielsetzungen miteinbezogen werden. Darüber hinaus zeigt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deutlich die Notwendigkeit, eine realistische Wiedervereinigungspolitik zu verfolgen, anstatt sich in eine erschöpfende und unrealistische Debatte über Wiedervereinigungstheorie zu verstricken. Mit einer realistischen Wiedervereinigungspolitik ist hier eine Politik gemeint, die großen Wert darauf legt, Bedingungen für die Wiedervereinigung zu schaffen. Der Prozess der Schaffung von Bedingungen beschränkt sich nicht auf die Ebene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sondern muss gleichzeitig in allen Sektoren wie Innenpolitik, Wirtschaft, Gesellschaft, Kultur und Außenpolitik in beiden Koreas durchgeführt werden.

In dieser Hinsicht können drei grundlegende Aufgaben definiert werden. Erstens sollte die Grundlage für die Integration in soziokulturellen Aspekten gelegt werden. Mit anderen Worten: Es ist notwendig, eine gesunde Gesellschaftskultur zu etablieren. Eine gesunde Gesellschaftskultur ist die wichtigste Grundlage für die friedliche Lösung potenzieller Konflikte in einer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Wenn in Südkorea keine Kultur der friedlichen Konfliktlösung etabliert wird, ist es selbstverständlich, dass sowohl das Zusammenleben zwischen Nord- und Süd vor der Wiedervereinigung, als auch die Akzeptanz der anderen Gesellschaftskultur des Nordens im Süd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schwierig sein werden.

Zweitens sollte eine gesunde nationale Gemeinschaftsidentität geschaffen werden. Vor der Wiedervereinigung hatte Westdeutschland eine relativ gut etablierte Kultur der Konfliktlösung. Der politischen Bildung wurde bei der Entnazifizierung in der Nachkriegszeit höchste Priorität eingeräumt, und der kritische Geist war gefördert. Die Toleranz Westdeutschlands während der Teilungszeit trug deutlich zum Zusammenleben von Ost und West bei. Nach der Wiedervereinigung ist sie jedoch weitgehend gesunken. Obwohl die Ursachen sehr komplex sind, ist es erwähnenswert, dass die nationale und gemeinschaftliche Identität aus soziokultureller Sicht schwach war. Gegenwärtig wird die Vereinigung der beiden Koreas zweifelsfrei damit akzeptiert, dass die beiden Koreas eine ethnische Gruppe sind, aber in Wirklichkeit weist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auch eine postindustrielle Gesellschaftskultur auf, die durch die Beschleunigung der sozialen Differenzierung gekennzeichnet ist, und die zentripetale Kraft der ethnischen Gemeinschaft lässt allmählich nach.

Drittens sollte das gegenseitige Verständnis zwischen den beiden Koreas im Hinblick auf sozioökonomische Aspekte erweitert werden. Auch wenn die soziokulturelle Basis geschaffen ist, ist es bei schlechten sozioökonomischen Bedingungen nicht einfach, einen Zusammenhalt innerhalb der Gemeinschaft zu schaffen. Dies zeigt sich daran, dass die Schwierigkeiten der sozialen Einheit in Deutschland durch sozioökonomische Faktoren verstärkt wurden. Daher ist es notwendig, sich mehr auf eine qualitative Ausweitung des Austauschs und der Zusammenarbeit zu konzentrieren, als auf eine quantitative.

Die oben genannten Implikationen könnten in der Realität der koreanischen Halbinsel wahrscheinlich nur als ein Sollen bzw. Norm gelten. Dennoch können wir unsere Bemühungen nicht aufgeben; insbesondere ist fundierte Kritik und Selbstreflexion über die soziokulturelle Umwelt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und die Ausrichtung der Einigungspolitik als Ausgangspunkt sehr wichtig.

Es kommt nun zur zweiten Fragestellung, also zu den Vorbereitungen für die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zu erwartenden Probleme. Zunächst ist eine Ursachenanalyse durchzuführen, wenn man aus dem deutschen Beispiel lernen will. Eine Ursachenanalyse ist nicht nur als Ausgangspunkt für die Suche nach Gegenmaßnahmen sehr wichtig, sondern auch deshalb, weil das Problem der Integration, mit dem wir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konfrontiert werden, voraussichtlich das von Deutschland ähneln wird. In diesem Zusammenhang kann aus dem deutschen Beispiel eine umfassende Folgerung gezogen werden. Obwohl die nationale Integration grundsätzlich als soziokulturelles Problem betrachtet wird und eine starke Bedeutung für die Werteintegration hat, wird sie tatsächlich stark von der Art und Weise der institutionellen Integration beeinflusst. Dies soll natürlich nicht heißen, dass die Methode der institutionellen Integration eine Determinante ist, die soziokulturelle Fragen vollständig kontrollieren kann. Wenn zwei an unterschiedliche Systeme gewöhnte Gesellschaften eine künstliche institutionelle Integration versuchen, sind soziokulturelle Konflikte unvermeidlich. Denn das direkte und indirekte Erbe der Teilung kann vom System nicht vollständig überwunden werden. Daher ist es notwendig, das Integrationsproblem im Zusammenhang mit der institutionellen Integration sowie der reinen soziokulturellen Werteintegration anzugehen.

Die Implikationen des deutschen Falls lassen sich in dieser Hinsicht grob wie folgt zusammenfassen. Erstens stehen die Effizienz der institutionellen Integration und die Stärkung der Werteintegration nicht im direkten Verhältnis. Die institutionelle Integration Deutschlands wurde durch die Implementierung des westdeutschen Systems im ostdeutschen Raum erreicht, wobei der Fokus grundsätzlich auf der effektiven Etablierung lag. Infolgedessen blieben die DDR-Bürger und ihre politischen und sozialen Rollen im neuen System ausgeschlossen und das Gefühl der sozialen Entfremdung unter ihnen war unvermeidlich. Darüber hinaus trug die intensive Unterstützung der ostdeutschen Region zur Unzufriedenheit bei den Westdeutschen bei und wirkte als Ursache soziokultureller Konflikte. Vor diesem Hintergrund liegt der Schlüssel zur Integration bei der künftigen institutionellen Integration Nord- und Südkoreas in der Wahl, ob die Effizienz der Integration oder soziokulturelle Überlegungen im Kontext der nationalen Integration im Vordergrund stehen soll. Natürlich wäre es am wünschenswertesten, wenn zwischen beiden ein harmonischer Punkt gefunden werden könnte, aber in

Wirklichkeit ist es sehr schwierig. Wenn der Tag der Wiedervereinigung näher rückt, müssen wir diesbezüglich nach dem demokratischen Verfahren einen nationalen Konsens schaffen.

Zweitens steht der Interessenkonflikt im Prozess der institutionellen Integration in direktem Zusammenhang mit dem Problem der Werteintegration. Die Werteintegration wird oft als eine Frage der Ideen angesehen. Inmitten des schnellen gesellschaftlichen Wandels neigen Interessenkonflikte jedoch dazu, die Werte neu zu gestalten. Obwohl es sich um eine Sondersituation handelt, zeigt sich ein solcher Trend auch bei der deutschen Integration. Die Sehnsucht nach Freiheit und wirtschaftlichem Wohlstand war ein wesentlicher Treiber für die starken Forderungen der DDR-Bürger nach einer Wiedervereinigung. Nach der Wiedervereinigung konnten sie sie in einem noch nie dagewesenen Ausmaß genießen, aber zufrieden waren sie nicht. Es lag an der relativen Armut im Vergleich zu den Westdeutschen und der Belastung durch die Wettbewerbslogik im Markt, die mit der wirtschaftlichen Prosperität einherging. Darüber hinaus war auch die politische und soziale Unzufriedenheit der DDR-Bürger hoch. Dieser Punkt kann als Berechnungsgrundlage verwendet werden, um zukünftige Interessenkonflikte auch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zu minimieren. So ist es beispielsweise notwendig, am Tag der Wiedervereinigung dem Norden ein Höchstmaß an Autonomie in politischer und sozialer Hinsicht zu gewährleisten, und falls notwendig bei der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die Nordkoreaner aktiv miteinzubeziehen.

Die oben beschriebenen Implikationen können sich konkreter kristallisiert, wenn die Perspektiven und Methoden der innerkoreanischen Integration in Zukunft deutlicher werden. Dabei wird das deutsche Beispiel konkrete Hilfestellungen zur Vorhersage von Art, Umfang und Kausalmustern von Integrationsproblemen bieten.

MEMO.

SESSION 2.
30 Jahre Deutsche Einheit und Lektionen für Korea

SESSION 2-2.

Wahrnehmung der deutschen Einheit in Korea sowie Lektionen für Korea

(Wirtschaftliche Integration)

Hyung-Gon Jeong,
Forscher a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urmounting Global Challenges, Creative Response

30 Jahre deutsche Einheit

Ergebnisse der wirtschaftlichen Integration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Jung Hyung-g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5. Aug. 2021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halt

1. Wirtschaftliche Lage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Krise und Überwindung
2. Änderungen und Erfolge nach der Wiedervereinigung
3. Konvergenz der ost- und westdeutschen Wirtschaft: Errungenschaften und Herausforderungen
4. Fazit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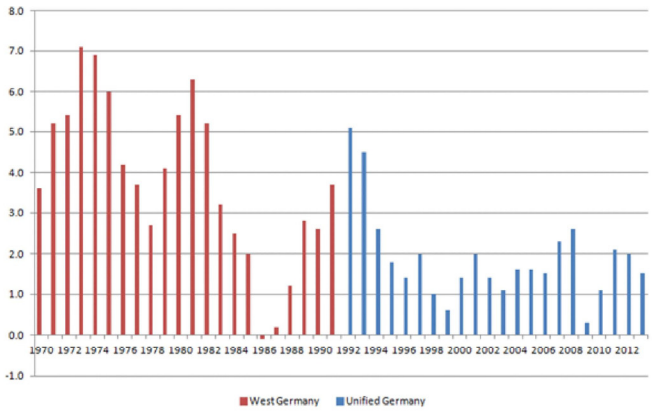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 Wirtschaftliche Lage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in den frühen Phasen der WV

Sorgen wegen Inflation

- Konsumsteigerung der DDR-Bürger durch Lohnerhöhung, Sozialversicherung, Subventionen etc.
- Mehr Investitionen in Ostdeutschland sind ein Inflationsfaktor



Quelle: Jeong, Hyung-gon and Gerhard Heimpold (2018),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p.41

1. Wirtschaftliche Lage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in den frühen Phasen der WV

Steigende Kurzfristzinsen: Preisstabilität ist Ziel und gesetzliche Verpflichtung der Deutschen Bundesbank

- Die kurzfristigen Zinssätze schossen in die Höhe als Reaktion auf die enorme Nachfrage nach Mitteln für die WV, das erhöhte Anlagerisiko, die Inflation und die Notwendigkeit der Wechselkursstabilisierung.
- Die deutsche Zentralbank erhöhte die Zinsen, um die Geldmenge zu steuern und Preisstabilität im Land zu gewährleisten. Auch der Wechselkursanstieg wurde vermie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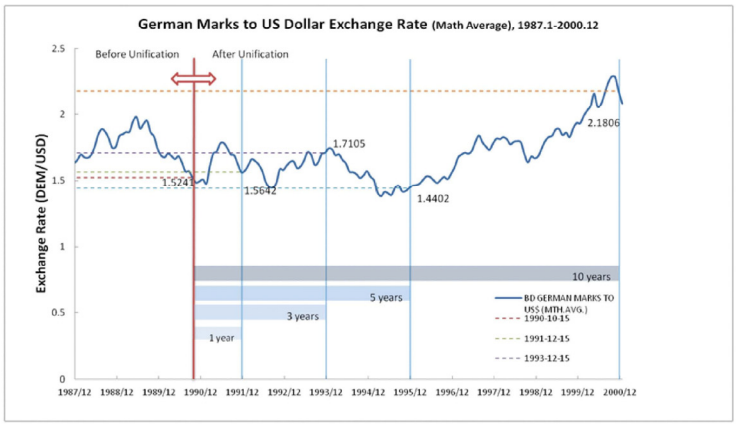
Quelle: https://data.oecd.org/interest/short-term-interest-rates.htm (19. 9. 2020).

1. Wirtschaftliche Lage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in den frühen Phasen der WV

Bedenken wegen Währungsinstabilität?

- Der D-Mark-Dollar-Kurs sank unmittelbar vor und nach der WV und blieb eher stabil.
- Westdeutschland hatte vor der Vereinigung den weltweit größten Leistungsbilanzüberschuss aufgrund der vor der Vereinigung angehäuften deutschen Devisenvermögen und der Hochzinspolitik der deutschen Zentralbank



Quelle: Data Stream

1. Wirtschaftliche Lage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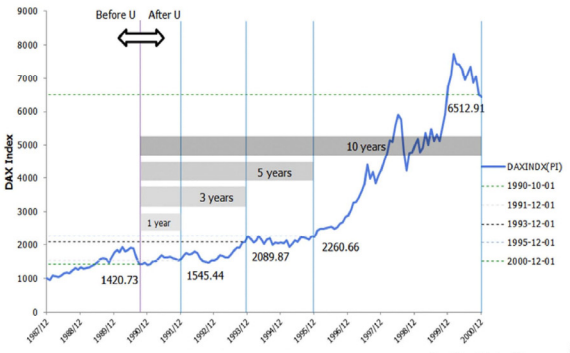
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in den frühen Phasen der WV

Veränderungen der Aktienindexe

- Der wirtschaftliche Schock durch die WV wirkte sich kurzfristig auf den Aktienkursindex aus; die negativen Auswirkungen waren nicht signifikant.
- Der Aktienkurs Westdeutschlands stieg 1989 stark an, fiel aber 1990 wieder und war zum Jahresende gegenüber dem Frühjahr 1989 um etwa 10 % gestiegen.



Jeong, Hyung-gon and Gerhard Heimpold (2018), p.37



Quelle: Data 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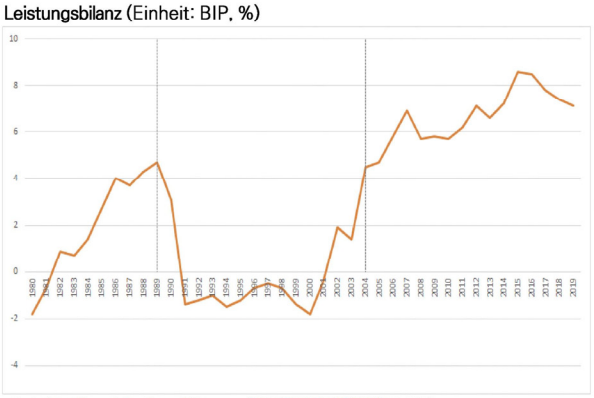
1. Wirtschaftliche Lage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in den frühen Phasen der WV

Die westdeutsche Wirtschaft, die die europäische Wirtschaft anführte, erlitt einen Vereinigungsschock: Leistungsbilanz wurde defizitä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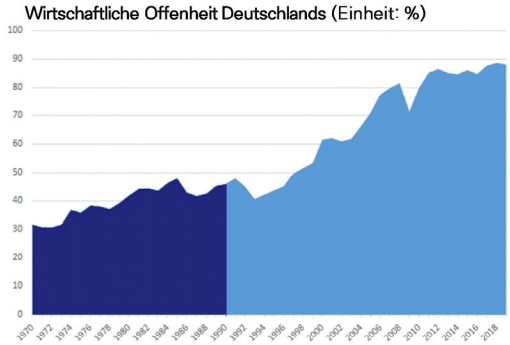
- In den 1980er Jahren, vor der WV, verzeichnete Westdeutschland einen Leistungsbilanzüberschuss von mehr als 4 % des BIP. Starker Zurückgang nach der WV 1990.
- Ursache: Ein plötzlicher Konsumanstieg der DDR-Bürger und ein Schock auf der Nachfrageseite durch Investitionen in Ostdeutschland

Leistungsbilanz (Einheit: BIP, %)



Quelle: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BCA_NGDPD@WEO/DEU(16. 9. 2020).

Wirtschaftliche Offenheit Deutschlands (Einheit: %)



Quelle: https://www.theglobaleconomy.com/Germany/trade_openness/(17. 9. 2020); Vgl. Vereintes Land: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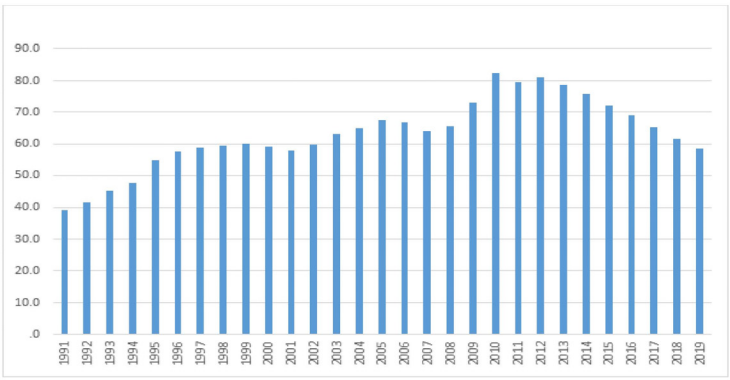
7

1. Wirtschaftliche Lage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in den frühen Phasen der WV

Steigende Staatsverschuldung: Auch die Staatsverschuldung steigt aufgrund der steigenden finanziellen Nachfrage durch die WV stark an

- 1991, in der Frühphase der WV, betrug die Verschuldung des deutschen Staates etwa 40% des BIP, stieg aber seither kontinuierlich bis 2010 auf über 80%, ging dann in einen stabilen Rückgang über.
- Ab 2019 ging sie auf etwa 58% zurück, aber im Vergleich zur Anfangsphase besteht immer noch ein Unterschied.



Bundesverschuldung/BIP
(Einheit: %)

Quell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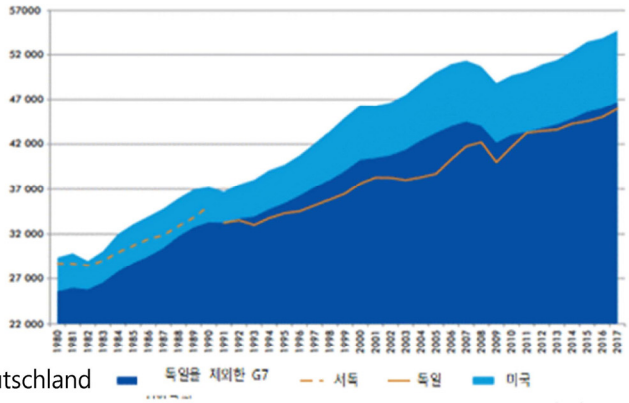
8

1. Wirtschaftliche Lage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Wirtschaftliche Herausforderungen in den frühen Phasen der WV

Abschwächung des Wachstumspotenzials

- Es ist interessant festzustellen, dass das Wirtschaftswachstum des vereinten Deutschlands durch die plötzliche WV stark zurückging.
- Der Bericht des Wirtschaftsforschungsinstituts Halle (2019) ergab, dass das BIP pro Kopf (KKP-Basis) in Westdeutschland vor der WV über dem Durchschnitt der G7-Staaten lag, jedoch aufgrund der WV 1990 unter den Durchschnitt der G7-Staaten fiel und seitdem deutlich langsamer ansteigt.



BIP pro Kopf (in KK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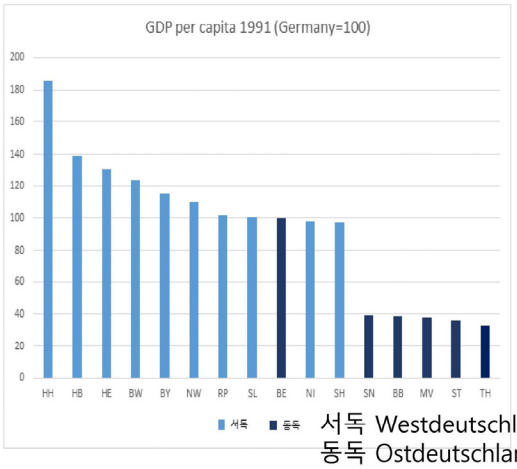
G7 außer Deutschland

서독 Westdeutschland
독일 Deutschland
미국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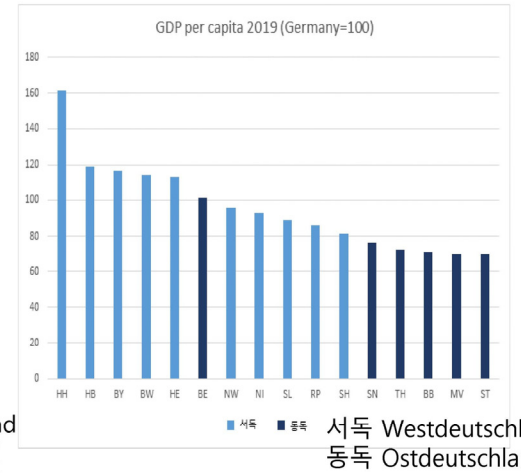
Quelle: Vereintes Land: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2.

2. Änderungen und Erfolge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e Bundesländer nach BIP pro Kopf



서독 Westdeutschland
동독 Ostdeutsch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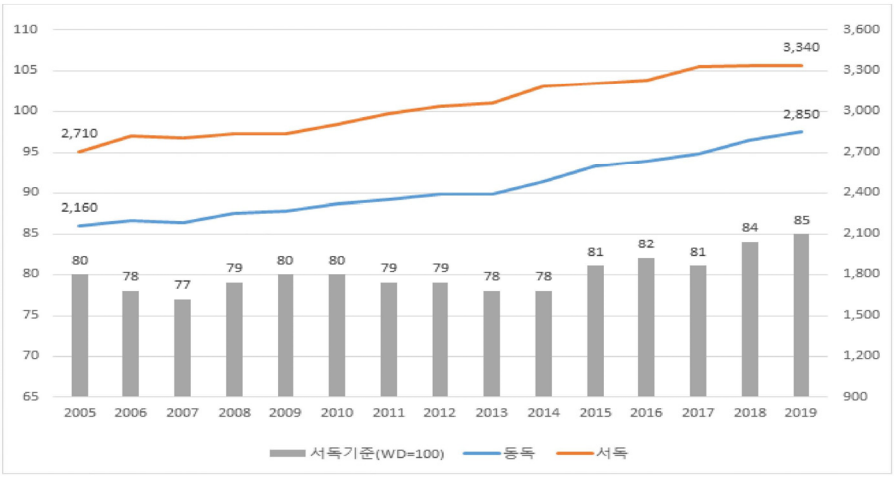
서독 Westdeutschland
동독 Ostdeutschland

Quelle: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aender

2. Änderungen und Erfolge nach der Wiedervereinigung

Durchschnittlicher monatlicher Bruttogehalt von Beschäftigten in West- und in Ostdeutschland

(Einheit: %, EUR)



서독기준 auf Basis WDs 동독 Ostdeutschland 서독 Westdeutsch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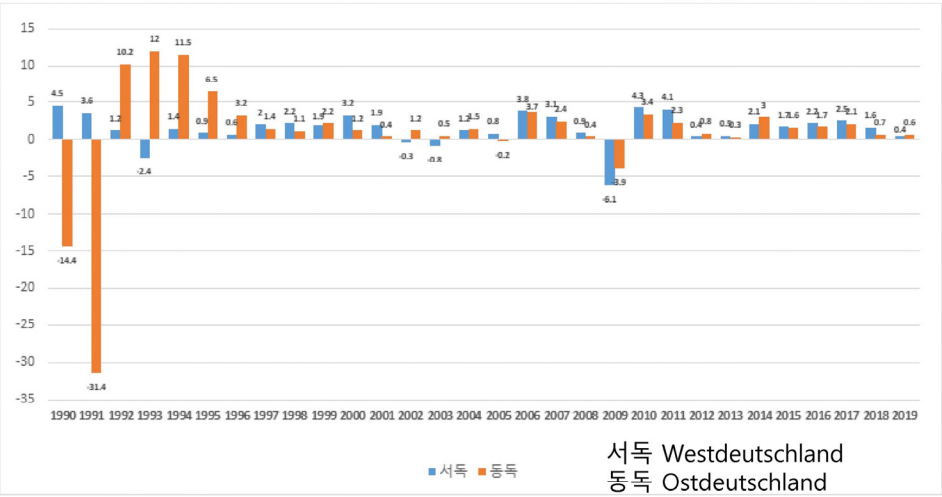
Eigene Darstellung, in Anlehnung an: Jahres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2019), p. 49.

11

2. Änderungen und Erfolge nach der Wiedervereinigung

Regionaler Vergleich des BIP-Wachstums pro Kopf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Einhe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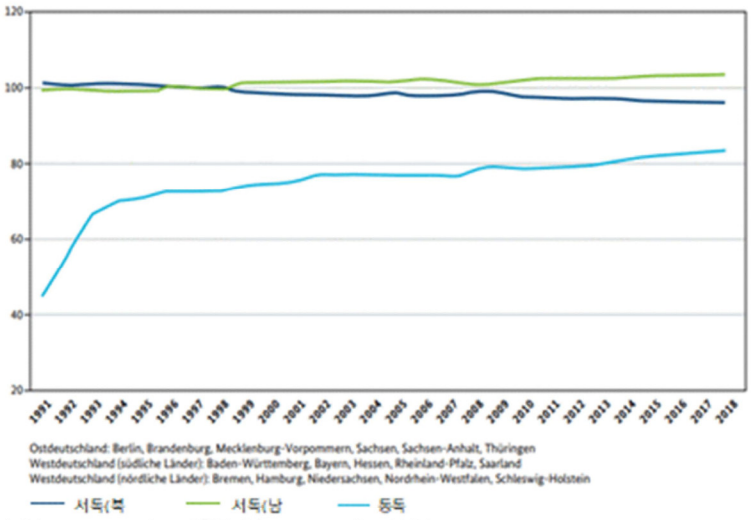
서독 Westdeutschland
동독 Ostdeutschland

Eigene Darstellung, in Anlehnung an: Jahres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2019), p. 49.

12

2. Änderungen und Erfolge nach der Wiedervereinigung

Vergleich der Arbeitsproduktivitä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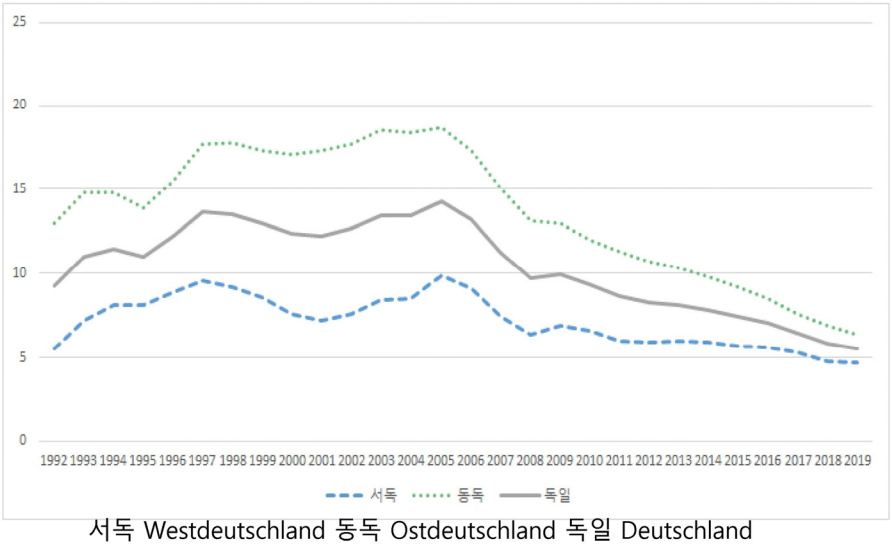


서독(북 WD(Nord 서독(남 WD(Süd 동독 OD

Quelle: Jahres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2019), p. 21

2. Änderungen und Erfolge nach der Wiedervereinigung

Vergleich der Arbeitslosigk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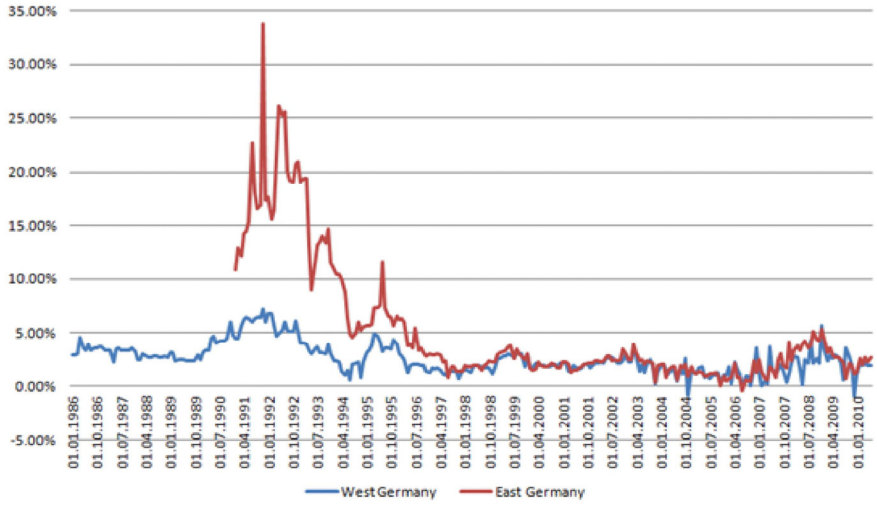


서독 Westdeutschland 동독 Ostdeutschland 독일 Deutschland

Quelle: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aender

2. Änderungen und Erfolge nach der Wiedervereinigung

Vergleich der Lohnwachstumsra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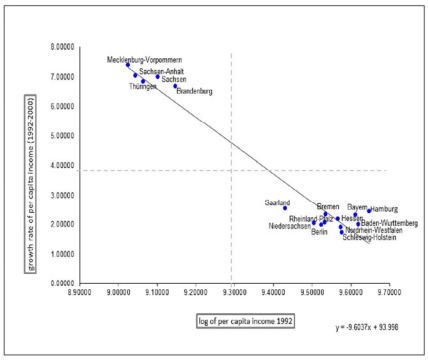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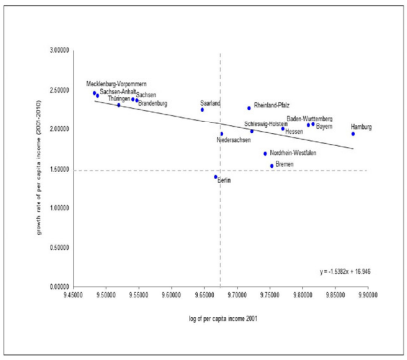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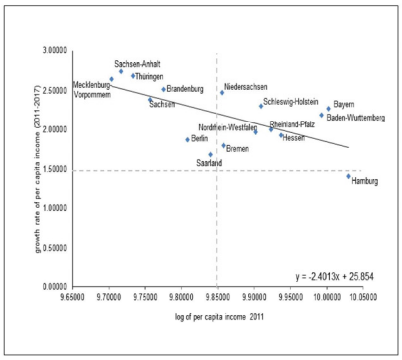
Quelle: Jeong, Hyung-gon and Gerhard Heimpold (2018), p.42

2. Änderungen und Erfolge nach der Wiedervereinigung

Vergleich des Pro-Kopf-Einkommens und der Einkommenswachstums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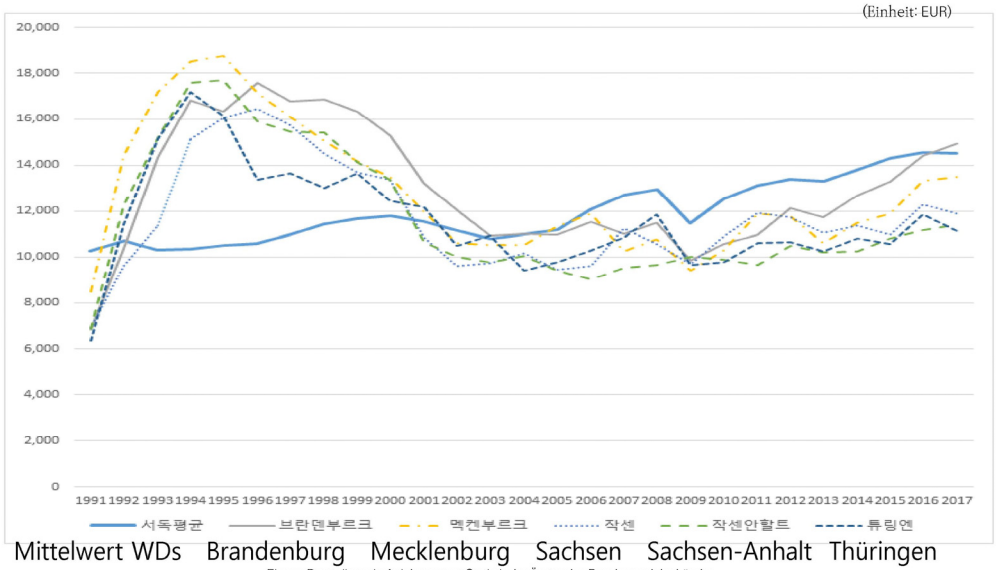
16

Eigene Darstellung, in Anlehnung an: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aender

3. Herausforderungen bzgl. Konvergenz der ost- und westdeutschen Wirtschaft

Bruttoanlageinvestitionen je Arbeitnehmer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Einheit: 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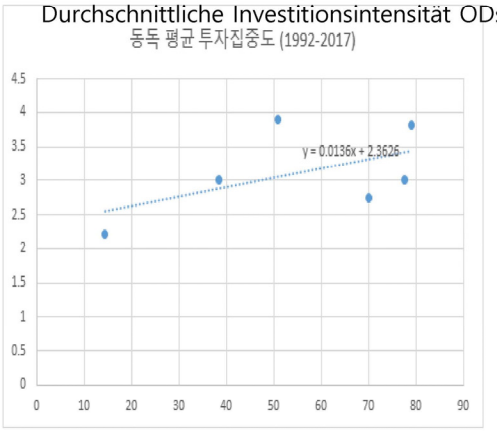
Mittelwert WDs Brandenburg Mecklenburg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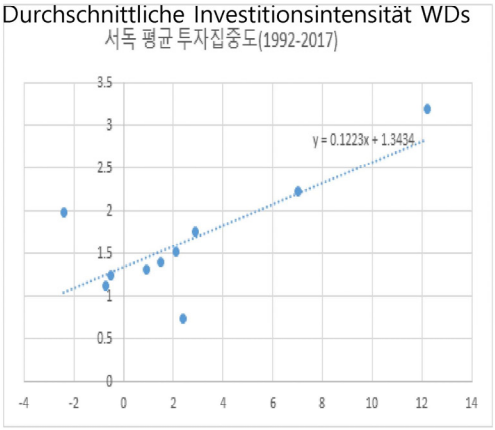
Eigene Darstellung, in Anlehnung an: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3. Herausforderungen bzgl. Konvergenz der ost- und westdeutschen Wirtschaft

Rückgang der Investitionsintensität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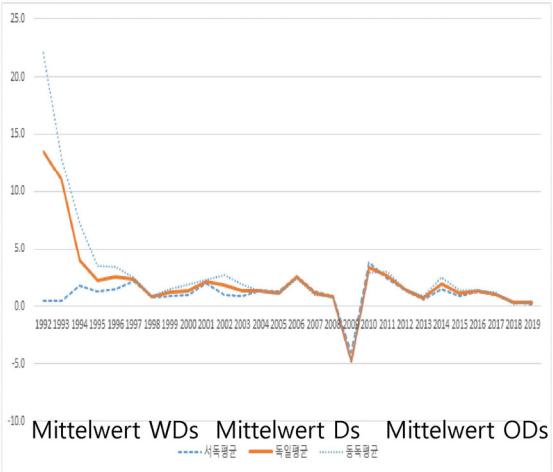


Eigene Darstellung, in Anlehnung an: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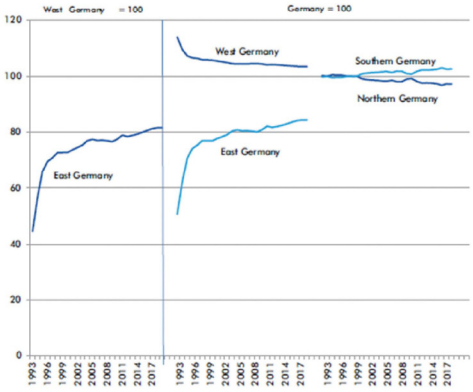
3. Herausforderungen bzgl. Konvergenz der ost- und westdeutschen Wirtschaft

Abnahme der Arbeitsproduktivität

(Einheit: %)



Eigene Darstellung, in Anlehnung an: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Northern Germany: Berlin, Brandenburg, Bremen, Hamburg, Lower Saxony, Mecklenburg-Vorpommern, North Rhine-Westphalia, Saxony-Anhalt; Schleswig-Holstein, southern Germany: Baden-Wuerttemberg, Bavaria; Hesse, Rhineland-Palatinate, Saarland, Saxony, Thuringia; urban space: independent large cities and urban districts; rural space: rural districts with agglomeration tendencies and sparsely populated rural districts.

Quelle: Vereintes Land: drei Jahrzehnte nach dem Mauerfal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2019), p. 32

19

3. Herausforderungen bzgl. Konvergenz der ost- und westdeutschen Wirtschaft

Mangel an Innovationsfähigkeit und Innovatoren

- Die oben genannten Faktoren wirken in komplexer Weise und führen zu einem Mangel an technologischer Innovation in der Region Ostdeutschland, was sich wiederum in den grundlegenden Produktivitätsunterschieden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widerspiegelt.
  - ✓ Nach Burda & Weder (2017) ist der Unterschied auf die Differenz der totalen Faktorproduktivität zurückzuführen, und die Differenz der totalen Faktorproduktivität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nahm beim Vergleich der beiden Zeiträume 2000 und 2011 nicht ab, sondern blieb ähnlich.
  - ✓ Die Ursache für den Innovationsmangel in Ostdeutschland liegt im Mangel an innovativen Akteuren. Nach wie vor wandern Fachkräfte aus dem Osten nach Westdeutschland ab, was den Wachstum innovativer Industrien erschwert.
  - ✓ Auch 30 Jahre nach der WV wandern Fachkräfte aus Ostdeutschland nach Westdeutschland ab, weil es in Ostdeutschland zu wenig attraktive Arbeitsplätze gibt und Westdeutschland hinsichtlich Ansiedlungsbedingungen und Gehältern weiterhin vorteilhaft ist.
  - ✓ Letztlich ist die wirtschaftliche Konvergenz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langsam, weil Faktoren wie Innovation, technologischer Fortschritt und die Fähigkeit des Managements, die die totale Faktorproduktivität (TFP) verbessern, im Vergleich zu Westdeutschland deutlich fehlen

20

3. Herausforderungen bzgl. Konvergenz der ost- und westdeutschen Wirtschaft

Relativer Mangel an Finanzkraft der ostdeutschen Regierung

- Einer der Gründe für das Wirtschaftsgefälle zwischen Ost und West waren die Steuereinnahmen.
  - ✓ Der Unterschied im Steueraufkommen zwischen Ost und West war größer als das individuelle Einkommensgefälle.
  - ✓ 1991 betrug das pro Kopf verfügbare Einkommen im Osten 7.188 Euro (ca. 53 % des Westens), der westdeutsche Durchschnitt lag bei 13.562 Euro. 2018 betrug der westdeutsche Durchschnitt ca. 23.124 Euro, der ostdeutsche 19.920 Euro (ca. 86% des Westens).
  - ✓ Während das Steueraufkommen des Ostens 1990 nur etwa 20% das des Westens betrug, ist es zuletzt auf 55% gestiegen.
  - Darüber hinaus betrugen die Körperschaftsteuereinnahmen des Ostens 2018 nur 52% der westdeutschen.
  - Dies liegt daran, dass die Körperschaftsteuereinnahmen im Westen höher sind, da sich die HQs der Unternehmen überwiegend in Westdeutschland befinden.
  - Dies schwächt die Fiskalkapazität des Ostens, wodurch ein Teufelskreis entsteht, der erneut ein Ungleichgewicht in

3. Herausforderungen bzgl. Konvergenz der ost- und westdeutschen Wirt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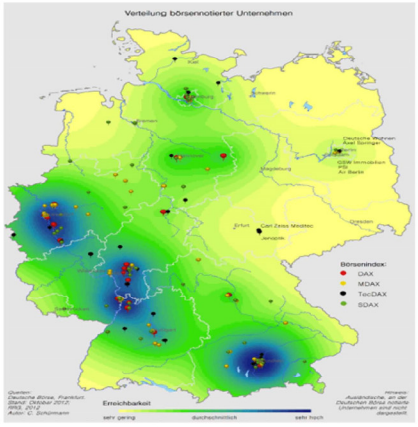
Mangel an Unternehmen, um Innovationen voranzutreib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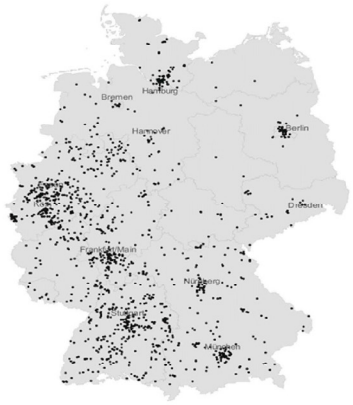
- Der Mangel an Großunternehmen im ostdeutschen Raum, ist eins der großen Probleme für die wirtschaftliche Konvergenz.
  - ✓ **Keins der 30 DAX-Unternehmen, hat seinen Sitz in Ostdeutschland.**
  - ✓ Von den 500 größten deutschen Unternehmen haben nur 36 ihren Hauptsitz in Ostdeutschland.
  - ✓ In Westdeutschland machen Großunternehmen mit mehr als 250 Beschäftigten mehr als 48% aller erwerbsversicherten Arbeitnehmer aus, in Ostdeutschland nur 27%.
  - ✓ Ostdeutsche Unternehmen beschaffen überwiegend Vorleistungsgüter an westdeutsche Unternehmen; dieses Problem der industriellen Struktur besteht bis heute.
  - ✓ Zudem gibt es in Ostdeutschland nur wenige Orte, an denen Unternehmensführungskräfte attraktiv Incentives erhalten, und es gibt nur wenige private Forschungsinstitute.
  - ✓ Von den 132 staatlich geförderten nicht universitären Forschungsinstituten befinden sich nur 34 in Ostdeutschland; nur 23 von 217 staatlichen Stellen befinden sich im Osten.
  - ✓ Das Innovationsumfeld in Ostdeutschland ist unzureichend, so dass talentierte junge Fachkräfte nach Westdeutschland abwandern.

3. Herausforderungen bzgl. Konvergenz der ost- und westdeutschen Wirtschaft

Verteilung deutscher börsennotierter Unternehmen (links) und Hidden Champions (rechts)

Die folgende Abbildung stellt die Verteilung deutscher börsennotierter Unternehmen und Hidden-Champions-Unternehmen dar. Die meisten Unternehmen befinden sich in Westdeutschland, was das Wachstum des Ostens erschwert.





Quelle: HIERO(2013), p. 17; Handelsblatt, Wo die Hidden Champions sitzen(28. 4. 2014).

4. Fazit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war eine Errungenschaft der westdeutschen Wirtschaftsmacht, und obwohl sie sehr teuer war, kann sie als "erfolgreiche WV" bewertet werden.**
  - ✓ Die radikale WV Deutschlands durch Absorption war aufgrund der ausreichenden Wirtschaftskraft der westdeutschen Regierung (finanzielle Solidität, zweitgrößte Devisenreserven der Welt, hoher Staatskredit, stabile makroökonomische Bedingungen usw.) möglich. Die makroökonomische Instabilität anfangs konnte beseitigt werden. 5% des BIP wurde jährlich als Subventionsmittel für den Osten ausgegeben.
  - ✓ Der Integrationsprozess führte zu Problemen in der Währungs-, Arbeits- und Sozialpolitik, die teilweise bis heute andauern und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ostdeutschen Wirtschaft einschränken. Dies muss bis zu einem gewissen Grad akzeptiert werden, wenn man die politische Situation zum Zeitpunkt der WV berücksichtigt.
  - ✓ **Die Arbeitsproduktivität und das Einkommensniveau Ostdeutschlands erreichten 85% des Westens und die Arbeitslosenquote nähert sich einem Niveau an, bei dem die Kluft zwischen den beiden Regionen nicht groß ist.**
  - ✓ Vor allem genießen die ehem. DDR-Bürger in der freien Marktwirtschaft einen deutlich verbesserten Lebensstandard und ihr Glücksindex ist deutlich höher als vor der WV.
  - ✓ Bestehende wirtschaftliche, soziale und regionale Ungleichgewichte sind ein Problem, das nur mit der Zeit gelöst werden kann.

4. Fazit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 Deutschland als Modell für die Wiedervereinigung: Warum?
  - ✓ Während des Vereinigungsprozesses gab es keine physischen Zusammenstöße, und die soziale Aufregung war relativ gering.
  - ✓ Dies lag daran, dass die sozialistische Planwirtschaft in die westdeutsche soziale Marktwirtschaft integriert wurde – trotz der hohen Kosten. (Nordkorea kritisiert die Diskussion über die deutsche Vereinigungsmethode)
- Ist das deutsche Modell immer noch gültig für Korea?
  - ✓ Nord- und Südkorea wurden durch Krieg geteilt, Ost- und Westdeutschland wurden von den Alliierten getrennt. Der aktuelle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Hintergrund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terscheidet sich stark von dem Deutschlands zur Zeit der WV.
  - ✓ Ost- und Westdeutschland kooperierten aktiv beim menschlichen und materiellen Austausch zwischen Regierung und Privatwirtschaft, während Korea den gegenseitigen Austausch nach der Teilung einstellte.
  - ✓ Nach der Teilung Westdeutschlands gab es Bemühungen um eine Harmonisierung mit den europäischen Nachbarländern. Deutschland bemühte sich, Spannungen abzubauen und Kriege zu verhindern, wie beispielsweise die Lösung territorialer Fragen mit Polen. Südkorea und Japan haben historische Probleme, territoriale Probleme, SK und China: Kontrolle wegen der US-Allianzen
  - ✓ Wirtschaftliche Disparität: Westdeutschland verfügte über eine hohe fiskalische Solidität, die zweitgrößten Devisenreserven der Welt, eine hohe nationale Kreditwürdigkeit, stabile makroökonomische Bedingungen und die Fähigkeit, Ostdeutschland seit der WV jährlich mit etwa 5 % des BIP zu unterstützen. Ostdeutschland war auch eins der fortgeschrittensten Länder unter den sozialistischen Wirtschaften.
  - ✓ Nordkorea sieht sich ernsthaften wirtschaftlichen Problemen gegenüber, mit Südkorea auf Platz 12 der Welt und Nordkorea auf Platz 117 in Bezug auf das nominale BIP, mit einer Bevölkerung von 1:2 zwischen Nord- und Südkorea. Auch besteht die hohe Wahrscheinlichkeit politischer Instabilität nach der WV. Die Vereinigung mit Südkorea auf Rang 6 im Index für wirtschaftliche Freiheit und Nordkorea auf Rang 180 erfordert mehr Vorbereitung.

25

4. Fazit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 Trotz erfolgreicher WV hat sich das Tempo der wirtschaftlichen Konvergenz seit Mitte der 1990er Jahre deutlich verlangsamt. Folgende Probleme bleiben:
  - ✓ Im Vergleich zu Westdeutschland weist Ostdeutschland ein schwaches Investitionsumfeld wie Ansiedlungsbedingungen, Angebot und Nachfrage an professionellen Arbeitskräften, Löhne und Arbeitsproduktivität auf, sodass es schwierig ist, Investitionen anzuziehen.
  - ✓ Die Wertschöpfung im Verarbeitenden Gewerbe ist halb so groß wie in Westdeutschland, da sie aufgrund der Industriestruktur nicht hoch ist.
  - ✓ Keins der Top 30 Konzerne hat seinen Sitz im Osten. Nur 36 der Top 500 Unternehmen haben ihren Sitz in Ostdeutschland und die meisten Ministerien und staatlich geförderten Forschungseinrichtungen befinden sich im Westen.
  - ✓ Das Steueraufkommen der ostdeutschen Länder beträgt 55% des der westdeutschen; die Körperschaftsteuer beträgt nur 52% des westdeutschen Durchschnitts.
  - ✓ Der Produktivitätsunterschied aufgrund fehlender technologischer Innovation in der Region Ostdeutschland ist groß, und auch die Arbeitsproduktivität pro Stunde liegt unter dem Niveau Westdeutschlands, was zu einer Vergrößerung des Lohngefälles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führt.
  - ✓ Faktoren wie Innovation, technologischer Fortschritt und die Fähigkeit des Managements, die totale Faktorproduktivität (TFP) zu verbessern, fehlen im Vergleich zu Westdeutschland erheblich, und Fachkräfte, die dies anführen können, wandern immer noch nach Westdeutschland ab.
  - ✓ Um die Grundlage für innovatives Wachstum in der ostdeutschen Region auch in Zukunft zu stärken, ist die Stärk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der ostdeutschen Hochschulen und Forschungseinrichtungen, die Förderung von Humanressourcen, der Aufbau erstklassiger Forschungsinstitute und die Förderung öffentlicher Forschungsinstitute zur Anwerbung ausländischer Fachkräfte und Sicherung der Wettbewerbsfähigkeit Ostdeutschlands notwendig. Wichtig ist es, einen komparativen Vorteil gegenüber Westdeutschland als Investitionsstandort zu erreichen.

26

4. Fazit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 Lehren aus der wirtschaftlichen Integration Deutschlands: In Korea ist eine radikale WV wie in Deutschland nicht wünschenswert.
  - ✓ Die wirtschaftliche Integration sollte schrittweise gefördert werden und das Investitionsumfeld in Nordkorea verbessert werden, damit inländische und ausländische Investitionen angezogen werden.
  - ✓ Die Arbeitsmarktintegration mit Nordkorea, dh. die Migration von Nordkoreanern nach Südkorea, sollte gefördert werden, wenn das Einkommen und der Lebensstandard der Nordkoreaner ein bestimmtes Niveau von Südkorea erreichen.
  - ✓ Die Bildung einer Wirtschaftsgemeinschaft zwischen den beiden Koreas durch Reform und Öffnung Nordkoreas sowie der Übergang zu einer Marktwirtschaft müssen die Grundlage bilden.
  - ✓ Wenn das Einkommen der Nordkoreaner 80% des Einkommens der Südkoreaner erreicht, werden soziale Auswirkungen wie Bevölkerungsbewegungen nicht signifikant sein (derzeit beträgt das Pro-Kopf-BNE von Nord- und Südkorea 1:52)
- Der idealste Weg besteht dari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langfristig eine Wirtschaftsgemeinschaft aufzubauen, indem man ein friedliches Zusammenleben fördert und den wirtschaftlichen und persönlichen Austausch wiederbelebt.
  - ✓ Aus wirtschaftlicher Sicht ist eine Situation, in der die beiden Koreas physisch getrennt sind, für das Wirtschaftswachstum Nordkoreas günstiger als eine Situation, in der Kapital- und Arbeitsmärkte integriert sind.
  - ✓ Insbesondere für das schnelle Wachstum der nordkoreanischen Wirtschaft ist die Exportwettbewerbsfähigkeit nordkoreanischer Produkte für den Eintritt in den Weltmarkt wichtig. Durch Kapital- und Technologietransfer aus Südkorea sollte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Produktqualität und Nordkorea als unabhängiges Land verbessert werden, wobei die Souveränität der Wechselkurspolitik für den Export nordkoreanischer Produkte wichtig ist.
  - ✓ Die schrittweise Förderung einer Wirtschaftsgemeinschaft zwischen den beiden Koreas ist von Vorteil, um nicht nur die Probleme der Integration von Ost- und Westdeutschland zu lösen, sondern auch die Auswirkungen des Einigungsprozesses zu minimieren

4. Fazit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Die Zeit, die benötigt wird, um die gewünschte Einkommenslücke T zu erreichen

(Einheit: Jahre)

d (%) Wachstumsratenlücke	T = gewünschte Einkommenslücke				
	0,6	0,7	0,8	0,9	1
5	47,08	50,16	52,83	55,19	57,29
6	39,23	41,80	44,02	45,99	47,75
7	33,62	35,83	37,74	39,42	40,92
8	29,42	31,35	33,02	34,49	35,81
9	26,15	27,87	29,35	30,66	31,83
10	23,54	25,08	26,42	27,59	28,65
11	21,40	22,80	24,01	25,08	26,04
12	19,62	20,90	22,01	22,10	23,87
13	18,11	19,30	20,32	21,23	22,04

Quelle: Eigene Darstellung

- Berechnung der wirtschaftlichen Konvergenz von Nord- und Südkorea nach Siebert (1993).
- Das Pro-Kopf-BIP Südkoreas beträgt 2018 31.430 US-Dollar; Nordkoreas 1.800 US-Dollar (CIA). D.h. Nordkoreas Pro-Kopf-BIP beträgt etwa 5,7% des BIPs Südkoreas (Stand 2018).
- Damit Nordkoreaner 80% des südkoreanischen Einkommens erreichen, wird es 33 Jahre dauern, bis sich die Wachstumslücke zwischen den beiden Koreas um jeweils 8% verringert.

4. Fazit und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Bildung einer Wirtschaftsgemeinschaft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 Unterstützung für die beiden Koreas als "ein Land mit zwei Systemen" zu agieren und ein marktwirtschaftliches System in Nordkorea aufzubauen
  - ✓ In diesem Fall kann Nordkorea die Souveränität über den Wechselkurs haben, was ein sehr wichtiges politisches Instrument für den Export nordkoreanischer Produkte und die Wiederbelebung der Wirtschaft ist.
- Es besteht die Notwendigkeit, interkoreanische Industriekooperationskomplexe wie den Kaesong-Industriekomplex aktiver zu entwickeln. Förderung von Großinvestitionen in Südkorea durch eine dramatische Verbesserung des physischen und institutionellen Investitionsumfelds der Region sowie des physischen Kooperationsraums
  - ✓ Unterstützung der Kapitalakkumulation Nordkoreas und des selbsttragenden Wachstums Nordkoreas durch Bildung und Technologietransfer
- Südkoreas Vereinigungsplan: Ein Einigungsplan der nationalen Gemeinschaft
  - ✓ Schritt 1: Versöhnung und Zusammenarbeit, Schritt 2: Nord-Süd-Union, Schritt 3: Wiedervereinigter Staat
- Als frühes Stadium der Wirtschaftsgemeinschaft wird ein „engeres Wirtschaftspartnerschaftsabkommen (CEPA)" oder „Innerkoreanisches Freihandelsabkommen" vorgeschlagen.
  - ✓ Das innerkoreanische Freihandelsabkommen wurde als Strategie zur Bildung einer innerkorean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im Rahmen der Vorbereitung des zweiten innerkoreanischen Gipfels während der Roh Moo-hyun-Regierung im Jahr 2007 diskutiert.
  - ✓ Es wurde von der Regierung Lee Myung-bak vorgeschlagen, die Wirtschaftsgemeinschaft der Koreanischen Halbinsel (KECCA) zu gründen, unter der Prämisse, dass Nordkorea sein Atomprogramm abschafft.
  - ✓ CEPA kann aufgrund des Prinzips "1 Land, zwei Systeme" zwischen China und Hongkong als ein FHA angesehen werden, das in Form einer "Vereinbarung" ohne Vertragscharakter und nicht als ein FHA zwischen zwei Staaten. (Innerkoreanische Beziehungen sind Sonderzonenbeziehungen, die südk. Verfassung gilt auch auf nordkoreanischem Territorium.

Danke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EMO.